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김규륜 · 조 민 · 김창수 · 문경희 · 성동기 · 손 열 · 유현석 ·  
이동휘 · 이재승 · 이재현 · 조성렬 · 주재우 · 홍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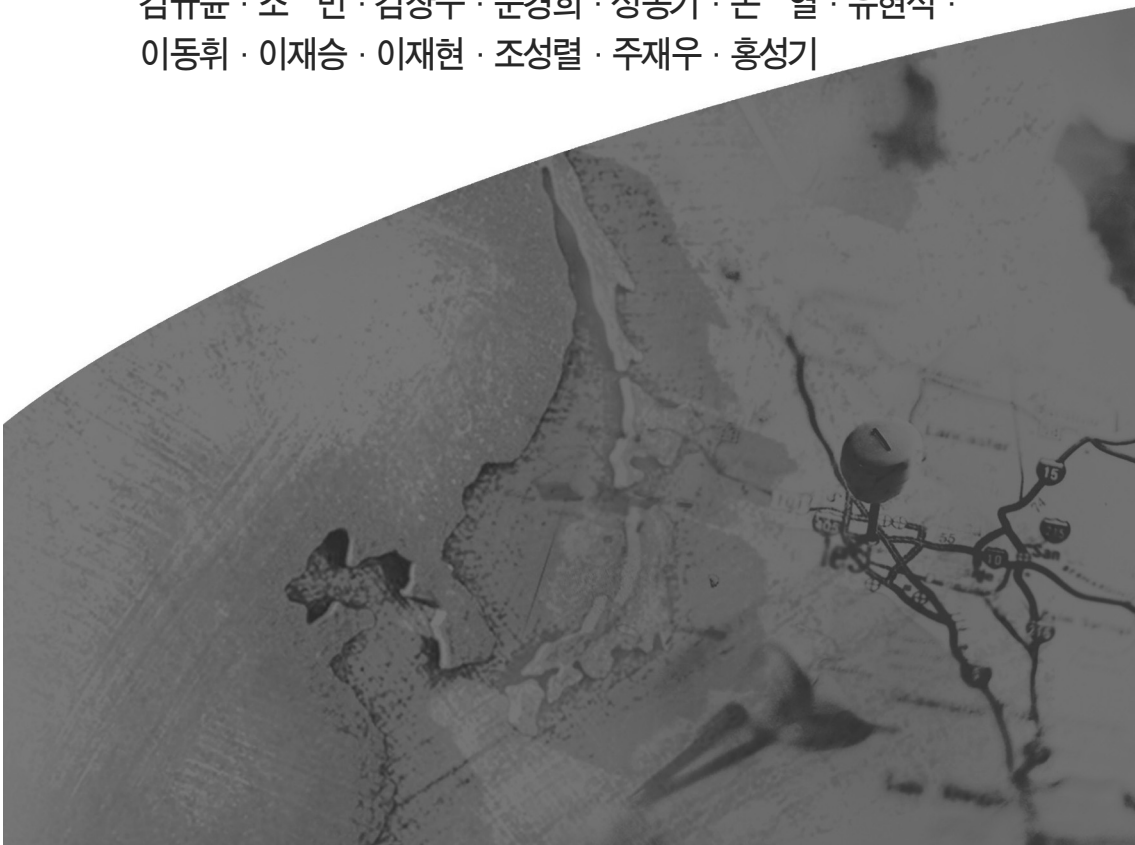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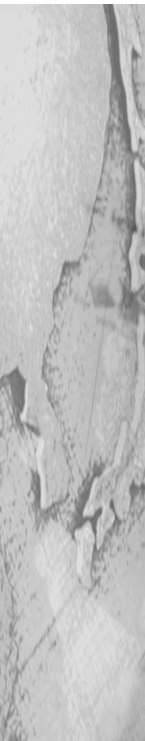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0-15-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김규륜 · 조 민 · 김창수 · 문경희 · 성동기 · 손 열 · 유현석 ·  
이동휘 · 이재승 · 이재현 · 조성렬 · 주재우 · 홍성기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585-3 93340

978-89-8479-587-7(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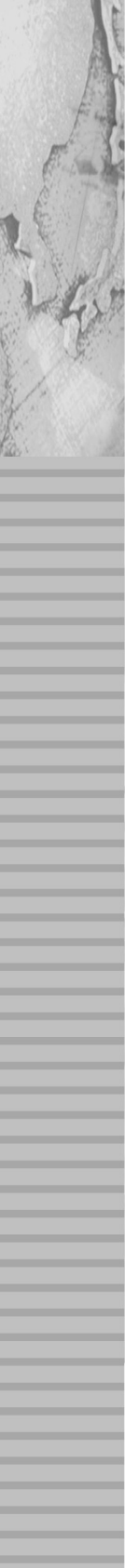
가 격 ₩13,0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청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제1부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2.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 .....	6
3. 신아시아 외교 추진경과 .....	12
II. 신아시아 외교의 분야별 추진방안 .....	31
1. 경제협력 분야 .....	34
2. 에너지 및 기후 분야 .....	71
3. 사회·문화 교류 분야 .....	102
III. 신아시아 외교 대상 지역의 입장 및 협력방안 .....	137
1. 동남아시아 .....	141
2. 중앙아시아 .....	184
3. 서남아시아 .....	217
4. 오세아니아 .....	252
참고문헌 .....	2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07

# 표 목 차

KINU 연구총서 10-15-1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표 I - 1>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과 주요 성과 .....	13
<표 I - 2> 한·ASEAN 주요 협력 사업 .....	17
<표 I - 3>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연혁 .....	21
<표 II - 1> 동북아시아 국가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	81
<표 II - 2> 에너지원별 동북아시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	82
<표 II - 3> ACD 회원국 현황 .....	96
<표 II - 4> ASEAN의 사회·문화부문 사업 현황 (2000~2005년) .....	104
<표 II - 5> 지역별 이주민 수 .....	108
<표 II - 6> 전 세계 이주노동자 규모(2000년) .....	108
<표 II - 7> 전 세계 관광객 수와 관광 수입 .....	109
<표 II - 8>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지원 사업 .....	111
<표 II - 9> 공자학원, 공자교실 현황(2009년 6월 현재) .....	112
<표 II - 10> 아시아의 노동력 이동과 목적지 .....	115
<표 II - 11>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유입된 해외 여행자 수 .....	116
<표 II - 12> 아시아 국가의 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 .....	118

<표 II-13> ASEAN+3의 협력 사업 .....	123
<표 II-14> EAS 고위관료회의에 따른 문화 및 인적 개발 협력 사업 .....	124
<표 II-15> 세계 및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 .....	125
<표 II-16> 한국 영화 수출 실적 추이(1998~2005년) .....	126
<표 II-17> 주요 8개국 국가별 수출 현황(2003~2005년) .....	127
<표 II-18> 한국 영화의 제작편수 및 제작비(1996~2005년) .....	128
<표 II-19>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1995~2004년) .....	129
<표 II-20>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주요 수출국(2003년) .....	130
<표 II-21> 국내 아시아 유학생 수 추이 .....	133
<표 III-1> 남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교연도 .....	142
<표 III-2> 한·ASEAN 간 관계 발전 주요 일지 .....	142
<표 III-3>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률 (2005~2011년) .....	152
<표 III-4>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 개관 .....	153
<표 III-5> ASEAN 국가들에 대한 양자 간 ODA 공여 실적 (1997~2007년, 순지출 기준) .....	156
<표 III-6> 국가별 메콩 강 유역 개발 수자원 분포 .....	167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표 III-7> 캄보디아 전체 인구 중 24세 미만 인구 비율 예측	170
<표 III-8> 캄보디아, 라오스 인구증가율 예측	170
<표 III-9> 동남아시아 국가의 최근 군비 증가	179
<표 III-10>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교역 현황(2008~2009년)	186
<표 III-11>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투자 현황(2008~2009년)	187
<표 III-1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 현황(2006년)	188
<표 III-13>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의 수교 일시	188
<표 III-14> 한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관 설립 시기	188
<표 III-15> 호주의 10대 수출국(2008년)	262
<표 III-16> 호주의 10대 수입국(2008년)	263
<표 III-17> 한·호주 교역 품목(2009년)	264
<표 III-18> 한·호주 교역 현황(2002~2009년)	265
<표 III-19> 우리 기업의 대호주 투자	266
<표 III-20> 호주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	267
<표 III-21> 주요 수혜 대상 분야들	268
<표 III-22> 호주의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현황 (2009년 현재)	282

# 그림 목 차

<그림 II-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	73
<그림 II-2> 지역별 에너지 수요 전망 .....	73
<그림 II-3>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에너지 소비량 격차(2007~2035년) .....	74
<그림 II-4> 원유 가격의 동향(2000~2010년) .....	75
<그림 II-5> 세계 에너지 소비예측(2007~2035년) .....	77
<그림 II-6> 세계 석유/천연가스 생산량 예측(2007~2035년) ...	77
<그림 II-7>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 전망 (기준 시나리오) .....	79
<그림 II-8>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연간 증가율 예측 (국가별, 2006~2030년) .....	88
<그림 II-9> 사회·문화부문 관련 ASEAN+3 조직도 .....	122
<그림 III-1> 동남아시아의 발전 수단별 증감 예측 .....	166
<그림 III-2>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	176
<그림 III-3> 호주인의 눈을 통해 본 1904년 한국 .....	256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제2부: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토대**

1. 아시아 주요국의 평화구상
2.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관
3. 아시아 평화관의 두 토대

**II.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틀**

1.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방향
2.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협력구조
3.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추진수단

**III. 신아시아 외교와 아시아의 평화 증진방안**

1. 분야별 추진방안
2. 지역별 추진방안

**IV. 신아시아 외교와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

1. 분야별 추진방안
2. 지역별 추진방안

**V.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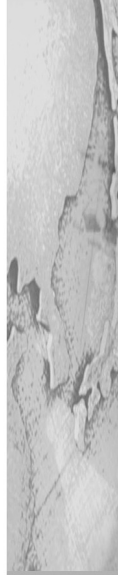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 I. 서론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010년은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의 강제 병합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이며, 한반도가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분단된 지 65년,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세기 전의 한반도는 열강에 의한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력도 부재하였다. 그 당시에도 한반도의 선각자들은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독립성을 주창하였지만,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소외된 채로 20세기의 전반부를 지내야 했다. 이후에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채 각각의 체제를 건설하여, 남한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일원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현재의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발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미래 국제질서를 선도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외교 역량의 상당 부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초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하였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요체

는 한국의 발전에 따라서 강화된 외교 역량을 새로운 사고에 근거해서 발휘하겠다는 것으로써, 기존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외 정책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와 지역에 대한 부가적 외교를 통해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아시아 외교’를 보완 및 발전시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분단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아시아 외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확대된 지역적 범위와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접근방안을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별 전문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평화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 지역은 ‘신아시아 외교’가 기존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중요시 되었던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즉,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연구의 지역적 범주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전반적인 외교 전략과 현황을 다루면서도 세부 주제의 경우에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심국가 혹은 거점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을, 중앙아시아에서는 지역 맹주



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서는 인도와 호주를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아시아 외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협력’과 ‘에너지 및 기후’,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세 가지 주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창의적 작업으로써 새로운 평화의 모색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적 범위와 주제에 대한 분석을 제1부에서는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이라는 제목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의 구성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먼저 제1부의 제2장 신아시아 외교의 분야별 추진방안에서는 경제협력과 에너지 및 기후, 사회·문화 교류가 각기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논의하였고, 또한 각 주제별로 한국의 역할과 외교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3장 신아시아 외교 대상 지역의 입장 및 협력방안에서는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인 네 개 지역의 현황과 중요성을 살펴보는 한편, 제2장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각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제2부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에서는 평화에 대한 전반적 논의의 분석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토대와 틀을 도출하였으며, 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증진이 상호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별 및 분야별로 도출해 내고자 한다.

제2부의 제1장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토대에서는 기존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담론과 각 종교들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관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평화구상들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모색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였다. 제2장 새로운 아시아 평화의 틀에서는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인간안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협력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의 세력균형, 이익균형과 국제규범, 지역 정체성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파워의 필요성과 한국이라는 중견국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스마트파워의 증진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신아시아 외교가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즉,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증진을 위해서 신아시아 외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 2.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

### 가.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 외교의 마지막 기착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범세계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21세기 위대한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한 아시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하였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핵심 내용은 첫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치중되었던 한국의 외교 지평을 아시아 전 지역과 남태평양 지역으로 넓히고, 둘째, 외교 지평의 확대와 동시에 경제 중심의 협력에서 안보, 문화 분야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으로 확대시키고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지위와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취임 첫해인 2008년에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 4강 외교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는 판단하에,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sup>1</sup> 그동안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협력에서는 가깝지 않았던 아시아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지역으로 동북아시아(4강 외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각료급 회담), 동남아시아(ASEAN협력), 서남아시아(인도), 중앙아시아(에너지협력,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남태평양지역(호주, 뉴질랜드)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그동안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머물러 왔던 우리의 아시아 외교 범주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지역까지 포괄하는 범아시아권으로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의 3대 비전은 ① 아시아의 발전과 화합 주도, ② 조화로운 협력 질서를 이끄는 연성강국(soft strong power) 지향, ③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

<sup>1</sup> 이대우, “이명박 정부 신아시아 외교구상,” 『정세와 정책』, 통권 156호 (세종연구소, 2009), p. 13.

이다.<sup>2</sup> 정부가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실행 계획에는 아시아 각국에 대한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증대, 범세계적 이슈 해결 주도과 이슈별 협력협의체 구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맞춤형 경제협력관계를 위해서 정상외교를 통한 자유무역과 상호 투자를 확대해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역내 자유무역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모색하면서, 대상 국가별 특성에 맞춘 실질적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에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이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계기로 삼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에너지 자원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한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이외에도 국제 금융위기,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문제, 반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범세계적 이슈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 관광 활성화 촉진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상호 유대감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포함된다. 이처럼 신아시아 외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

2. 배궁찬, “신정부의 지역협력 외교 과제: ‘신(新)아시아 협력외교구상’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8-06 (외교안보연구원, 2008), p. 1.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경제, 안보, 문화공동체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목표인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sup>3</sup>와 연계되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중견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추진 배경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 구상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데에 대하여 동북아 3국이나 주변 4강으로 한정되어 있던 외교적 시각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미에서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편향된 우리의 아시아 외교를 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포괄하는 범아시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외교를 추구하고자 함이다.

신아시아 외교구상 등장的重要한 배경 요소 중 하나는, 한국의 국력 신장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아시아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

<sup>3</sup>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은 범세계 차원에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처방을 내리는 나라를 뜻한다.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2009), p. 12 <<http://www.president.go.kr/kr/policy/data/globalkore.pdf>>.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이 보여주듯이 원조 수원국(recipient country)에서 공여국(donor country)으로 변신한 최초의 국가이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객관적 위치와 한국에 대한 기대는 최근 급속하게 변해왔으나, 한국은 그러한 위치와 기대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신아시아 외교는 최근까지 한국의 아시아관이 좁아져 온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ASEAN을 통한 협력이 확대, 강화되는 등 동아시아의 지역정세가 변화하면서 지역 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이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공동의 경제위기 대처를 모색하면서 ASEAN+3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출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최근 국제 금융위기,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테러 등 비전통 안보 이슈가 국가들 간의 주요 협력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협력 중시 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는 동아시아 협력 중시 정책을,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 협력 중시 정책을 펴면서 지역협력의 지리적 영역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sup>4</sup>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지리적으로 한

---

4. 고재남, 『한·중·앙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p. 11.

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는 전 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대아시아 인식의 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의 외교적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에 발맞추어 아시아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 ‘신아시아 외교구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아시아 외교의 부상에는 몇 가지 대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21세기 아시아는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최고의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신흥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모두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절반(약 52%)에 해당하는 38억 인구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1%(10조 7,000억 달러), 전 세계 교역량의 26%(8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북미,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과 함께 세계 3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은 한국 교역의 48%, 해외 투자의 53%, ODA의 47%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는 기존 한국 외교의 중심이었던 주변 4강 외교를 강화한 기반 위에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실질적 교류 관계가 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신아시아 외교의 지향

점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 번영의 기초를 다진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행사하고 국가 브랜드를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sup>5</sup>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의 인구와 시장,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 3. 신아시아 외교 추진경과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글로벌 외교 구현의 첫 번째 중점 과제로 정상 외교 지평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정상 차원에서 신아시아 외교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정상 차원에서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중앙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인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맞춤형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9년 6월에는 한·ASEAN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형성된 ASEAN과의 협력 추진력을 더욱

---

5. 이재현, “대통령 베트남, 캄보디아 순방과 한-ASEAN 정상회의의 평가와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40 (외교안보연구원, 2009.12), p. 1.



강화하고,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축인 ASEAN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차원의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10월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순방하였다.

2010년 1월에는 인도를 방문함으로써 신아시아 외교의 지평이 서남아시아까지 확대되었다. 한·인도 양국은 최고 수준의 파트너로서 경제, 통상을 넘어 정치, 안보 분야까지 상호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이처럼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아시아 지역과의 실질 협력 관계 강화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1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과 주요 성과

일정	순방국가	주요 성과
2009 (3.2~8)	동아시아 3국 순방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li> <li>•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관련 지지 확보</li> <li>• 뉴질랜드와 포괄적 협력방안을 담은 ‘한·뉴질랜드 공동성명’ 발표</li> <li>•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채택하여 기존의 협력을 경제 통상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확대</li> <li>• 인도네시아에 ‘한·ASEAN 특별정상회담’ 참가 요청 및 에너지 자원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li> </ul>
2009 (5.10~14)	중앙아시아 순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카자흐스탄과 수교 1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li> <li>•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강화 및 문화, 체육, 교육,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 협력 증진</li> </ul>

일정	순방국가	주요 성과
2009 (6.1~2)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정부의 대ASEAN 3대 정책문서(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 교류 분야) 발표</li> <li>• FTA 투자협정 체결로 한·ASEAN FTA 체제 완결 및 실질 경제협력 강화</li> <li>•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li> <li>•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ASEAN과의 협력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조기 출범 추진,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강화를 위한 협력,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확산</li> </ul>
2009 (10.20~25)	ASEAN +3 정상회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지역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한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의지 재확인</li> <li>• 정상회의에서 '의장선명' 및 '식량안보 및 바이오에너지협력에 관한 성명' 채택</li> <li>• 한-베트남 관계를 8년 전 설정된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li> <li>• 캄보디아와 범죄인 인도협정 및 경제협력, 광물 자원, 산림협력 등 양해각서(MOU) 체결</li> </ul>
2010 (1.24~26)	한·인도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li> <li>• 한·인도 간 공고한 정치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안보 대화' 신설</li> <li>• 양국 간 국방, 군수 분야 협력</li> <li>•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 약속</li> </ul>

자료: <<http://www.president.go.kr/kr/policy/principal.php>>.

## 가. 동남아시아

지난 2009년 3월 천명된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접근법과 속도를 가진 전략에 따라 전개되었다. ASEAN 지역은

신아시아 외교에서 가장 중점에 놓인 지역이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ASEAN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 교류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ASEAN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신아시아 외교의 주요 과제인 발전 경험의 공유, ODA 확대,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사안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ASEAN과 한국은 1989년 한국이 ASEAN의 대화 상대국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ASEAN은 지역 유일의 안보협의체인 ASEAN 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이하 ARF)을 이끌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또한 ASEAN 국가들은 남북 동시 수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 경색 국면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sup>6</sup> 또한, 한국은 ASEAN과 전략적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하며, 지역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EAN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국과 ASEAN은 1990년대부터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FTA의 체결로 무역 관계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ASEAN은 이미 한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이며, 2위의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이자 2위의 건설수주 시장이다. 또한 한국의 ODA 수혜 상위 10개국 가운데 5개국이 ASEAN 국가이다. 사회·문화부문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의 급증, 그리고 학생과 관광 교류에 있어서 ASEAN은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

6. 실제로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01년 남한과 북한을 방문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바가 있다.

계를 맺고 있다.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러한 교류의 급격한 증가는 ASEAN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 한류의 영향, 한국 대학의 유치 노력 등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파트너이며,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풍부한 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이 또한 동남아시아이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4강 외교의 틀 위에 2009년부터 대 ASEAN 관계 강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2009년 3월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시에 신아시아 외교가 천명된 것은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아시아 외교 천명 직전 한국과 ASEAN의 상호 교류의 가교가 될 한·ASEAN 센터가 서울에 개관하여 한국과 ASEAN 간의 무역, 경제 교류, 그리고 인적·문화적 교류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2009년 6월에는 제주도에서 한·ASEAN 대화 상대국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ASEAN 국가의 10명의 정상이 모두 한국에 모인 특별정상회의는 이 회의가 처음이었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은 대ASEAN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과 ASEAN 간 상품, 서비스 FTA에 이어 투자 분야의 협정이 이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됨으로써 한·ASEAN FTA가 완결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어 2009년 10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이고 경제적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캄보디아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무척 높은 국가로 이들과 관계 강화를 통해 인도차이나반도는 물론이고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줄 수 있

는 거점국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열린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ASEAN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한·ASEAN 간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여 한·ASEAN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이하 EPG)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협력 사업들을 제안하고 ASEAN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표 1-2 한·ASEAN 주요 협력 사업

분야	주요 협력 사업/지원 및 제안
개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공적 개발 원조(ODA) 2배 이상 확대</li> <li>- ICT와 과학기술 분야 개발 경험 공유</li> <li>-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 공유</li> <li>- 연수생의 규모를 향후 7년간 연 1,000명 수준으로 확대</li> <li>- EDCF 기본약정 개정, 캄보디아 원조를 2012년까지 2억 달러로 확대</li> <li>- ASEAN 통합 이니셔티브에 향후 5년간 500만 달러 추가 지원</li> </ul>
녹색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기후 변화 파트너십에 2억 달러 지원</li> <li>- 물 관리, 저탄소 도시, 신재생에너지, 산림, 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 등 5개 중점 협력 분야에 1억 달러 지원</li> <li>-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 우선 녹색성장 관련 지원 수요 조사</li> <li>- 한·ASEAN 그린 리더 및 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li> <li>-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li> <l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li> </ul>
문화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에 이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원 추가 설치</li> <li>- 한·ASEAN 청년봉사단원 규모를 2013년까지 두 배로 확대</li> <li>- ASEAN 협력기금을 200만 달러 (총 500만 달러 규모)</li> <li>-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를 통해 1만 명 규모의 IT 기술 지원단 파견</li> <li>- 2012년까지 국비장학생 규모를 200명으로 두 배 확대</li> </ul>

## 나. 중앙아시아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로 양자 차원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협력에 대한 관심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이다.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원의 확보, 새로운 시장 개척,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적·외교적 거점 마련 등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1월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이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이 종합대책의 로드맵에 나타난 협력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한·중앙아시아 간 다차원의 유일한 지역협력 메커니즘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도 이 종합대책에 나타난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sup>7</sup>

소련의 붕괴 이후 ‘유라시아의 발칸’, ‘신 실크로드의 부상’ 등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지면서 중앙아시아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세력경쟁 지역으로 발전되었다. 1990년대 중앙아시아는 저유가와 높은 개발 비용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시작된 고유가와 함께 이 지역에서 대형 유전과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에너지 공급지로 각광받게 되었고, 이에 강대국들 간에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는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지만 그동안 한국의 외교 지평에서 그리 큰 자리를 차지하는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에서 중앙아시아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갈수록

---

7. 고재남, 『한·중앙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과제』, p. 47.

강화되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상당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분명히 한국으로서 중시해야 하는 지역임에 틀림없다. 또한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이해관계가 이 지역에 존재한다. 이미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협력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위한 측면 지원과 직접 협력 관계의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동아시아에서 육로를 통하여 유럽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더한다.

중앙아시아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3%,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를 점유하고 있어 중동 지역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지를 다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카스피 해에 주로 매장된 석유 및 천연가스는 중동 지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지만 대부분 아직 개척 및 개발 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 국제 석유, 가스 회사들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개발권 획득 및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석탄, 우라늄, 아연, 금 등 수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 개발되거나 탐사되지 않은 광물 자원이 많으며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큰 실정이다.<sup>8</sup>

<sup>8</sup> 위의 책, pp. 20~22.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수출 시장 및 투자 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자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등 여타 지역과의 경협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새로운 국내외 외교환경에 기초하여 세계 각국들과 다양한 차원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강소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 확대와 기여 증대를 위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sup>9</sup> 이처럼 막대한 천연자원을 가진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최근 심화되어 왔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외교는 신아시아 외교 발표 전인 2007년부터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2007년 이미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양아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정상급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위한 한국 기업의 진출, 양국 간의 협력 노력이 지속되었다. 신아시아 외교의 천명 이후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방문은 이런 외교적 노력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정상 간 개인적 친분 관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고, 카자흐스탄 방문 시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데 정상 간에 합의한 바 있

---

<sup>9</sup> 위의 책, pp. 12~13.



다. 이어 2010년 2월과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이 각각 한국을 방문하여 2009년에 만들어진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0</sup>

이와 관련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다자 차원의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6년의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sup>11</sup> 2007년 외교통상부는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년 11월 제1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시작으로 하여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1-3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연혁

	연도	의제
제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2007년 11월 (서울)	한·중앙아 협력의 성과와 전망, 한·중앙아 경제 발전 경험 공유, 한·중앙아 경제협력 유망분야, 한·중앙아 문화 교류 증진방안 논의
제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2008년 12월 (제주도)	중앙아 5개국 경제 특구 활용방안, 한·중앙아 농업 협력 방안, 한·중앙아 문화, 교육 협력방안, 국제 무역투자금융 컨퍼런스에 관한 논의
제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2009년 12월 (서울)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방안,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방안, 국가 인적 자원 양성 방안,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

<sup>10</sup> 고재남, “이명박 대통령의 對중앙아 2개국 정상외교의 성과 및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15 (외교안보연구원, 2009.6), p. 8.

<sup>11</sup>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은 한국이 대중앙아 정책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첫째,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외교 거점 마련, 둘째, 에너지·자원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 셋째, 2015년 교역액 100억 달러, 연간 건설 수주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소개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부, 기업계, 학계, 문화계 등을 대표하는 15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시키고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 5개국 외무차관들과 별도의 양자 외무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의 활성화 방안,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은 중앙아시아의 맹주국가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위주로 치우친 대중양아 협력 관계 패턴에 다자주의를 더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 지역 차원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해주었다. 또한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의 경제 여건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기업의 대중양아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간 신뢰 구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중앙아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sup>12</sup>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통하여 한국은 ① 한·중앙아 간 최초의 다자대화체 창설, ② 한국 기업의 중앙아 진출 확대 계기 마련, ③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기반 조성, ④ 한·중앙아 간 인적 네트워크 및 민·관 간 신뢰 구축 기여, ⑤ 차관급 양자 협의회 개최 등 외교협력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sup>13</sup>

12. 고재남, 『한·중앙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과제』, pp. 42~45.

13. 고재남, “한·중앙아 2개국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정세와 정책』, 통권 158호 (세종연구소, 2009), p. 18 <[http://www.sejong.org/Pub\\_ci/PUB\\_CLDATA/k2009-06\\_5.PDF](http://www.sejong.org/Pub_ci/PUB_CLDATA/k2009-06_5.PDF)>.

한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라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신아시아 협력 외교’가 추진되면서이다.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자원개발 4대 전략지역’으로 설정하였다. 2008년 4월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 조사단 및 협의단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5월에 한승수 총리가 이들 국가를 방문해 에너지·자원 분야는 물론 여타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sup>14</sup>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에너지 자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협력 범위를 경제 및 문화 전반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협력은 물론 다자 차원의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들 2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각각 제반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에너지·자원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서 페르가나 및 취나바드 등 5개 광구에 대한 신규 탐사권을 확보하고, 나보이 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프로젝트 등 국제 물류 구축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

14- 고재남, 『한·중앙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과제』, p. 48.

였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포함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고,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주식인수계약 체결과 잠발 해상광구 및 신규 유전 광물자원 공동 개발 확대 및 우라늄 공동 개발 및 구체적인 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0년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를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로 상호 지정하여 추진하고, 1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sup>15</sup>

이번 방문을 통해 에너지 자원, 산업 금융 등 30여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맞춤형 협력 외교를 강화하였음은 물론 중앙아 주요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교육,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 외교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다. 서남아시아

11억 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최근 5년간 평균 9%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신흥 공업국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면서 인도는 한국의 대서남아 외교에 있어서

---

<sup>15</sup> - <[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2009/2009\\_asia\\_result.html](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2009/2009_asia_result.html)>.

핵심적인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과 내수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공략 대상으로 인도가 포함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뒤늦게 시작한 인도에 대한 신아시아 외교는 2010년 2월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09년 8월에는 한국과 인도 간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이 성사되어 한국과 인도 간의 사실상 FTA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최고 수준의 파트너로서 경제, 통상을 넘어 정치, 안보 분야까지 상호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한·인도 관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된 바 있다. 양국은 공고한 정치·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군방군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과 인도의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과 인도의 경제, 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양국 교역액을 2014년까지 300억 달러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sup>16</sup>

한·인도 교역 규모는 2000년 23억 1,00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약 121억 5,000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여 왔다. 대인도 수출액은 2000년 13억 2,000만 달러에서 2009년 80억 1,000만

---

<sup>16</sup> 청와대, “한·인도 정상회담 결과,” <[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244&article\\_no=9&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100124&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244&article_no=9&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100124&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

달러로 약 6배로 증가 하였고, 인도는 한국 25위 수출 상대국에서 9위로 급성장하였다. 또한 인도와의 교역에서 매년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sup>17</sup>

이명박 대통령과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의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인적 교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정상 회담을 마친 두 나라 정상은 한·인도 양국 관계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또한 회담 직후 한·인도 수행자이송조약, IT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등 주요 협정 및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을 하였다.

## 라.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로서 한국과는 전통 우방국이며 아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남태평양 국가들이다. 그러나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지리적 거리감, 그리고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에 있어서 좀 뒤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

<sup>17</sup> 박선민, “한·인도 교역 10년의 평가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Trade Focus』, Vol. 9, No. 22 (한국무역협회, 2010.4), p. 1.

노동당 정부의 대아시아 접근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가 늘어나고 최근 11년간 아시아에서부터 다소 멀어졌던 자유당 정부의 집권이 끝나고 다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로의 접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즉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하 EAS) 체제 안에서 지역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이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호주는 매우 중요한 상대국이다. 한국의 제1위 광물자원 수입국과 제1위 에너지 자원 해외 투자국이 역시 호주이다.

호주의 대아시아 접근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오세아니아의 국가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아시아 외교의 한 대상 지역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대오세아니아 신아시아 외교의 맥락에서 한국 정상은 2009년 3월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 차원의 빈번한 교류 등을 통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안을 담은 ‘한·뉴질랜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 신속한 공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sup>18</sup> 또한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간 교육 및 연수 분야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뉴질랜드 교육부 간 교육협력

---

<sup>18</sup>- <[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105&article\\_no=2&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090416&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105&article_no=2&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090416&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 (검색일: 2010.6.4).

약정'의 체결을 환영하였다.<sup>19</sup>

이어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호주 간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와의 협력의 지평을 기존의 경제 통상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호주 수교 50주년이 되는 2011년을 맞이하여 '한·호주 우정의 해'를 선포하기로 하고, 호주 내 한국학 진흥과 양국 간 문화·학술·인적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sup>20</sup>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언권이 크고, 민주주의를 신철하고 있는 한국-인도네시아-호주(Korea-Indonesia-Australia: 이하 KIA)의 3자 대화를 제안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과정으로서 6자회담에 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

19- <[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106&article\\_no=3&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090416&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106&article_no=3&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090416&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 (검색일: 2010.6.4).

20- <[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116&article\\_no=13&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090416&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bbs/bbs_view.php?uno=116&article_no=13&board_no=A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20090416&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 (검색일: 2010.6.4).



Cooperation: 이하 APEC), ARF, EAS 같은 지역협력체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재확인하였다.

I

II

III



## Ⅱ. 신아시아 외교의 분야별 추진방안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신아시아 외교’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이 과거에 추구하였던 전통적 의미에서의 영역에 대한 외교에 부가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외교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추진한 배경은 한국의 국가역량이 배가되었다는 측면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적 팽창에 수반된 질적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조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주관적 입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와 군사·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적 변화양상에 뒤처지지 않고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데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의 중점 추진 분야가 경제협력의 강화와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 강화 및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추진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현황을 분석하여,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방안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분석은 통상적인 무역 및 투자 관련 논의에 부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개발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금융협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이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시아의 평화 모습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를 선택한

결과, 에너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도 에너지 협력과 기후 변화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세 번째 분야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분야에 덧붙여서 한국이 아시아의 정체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현실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분야로서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야라면, 이를 장기적 및 보다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야가 사회·문화 교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성공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이와 같은 성과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의해서 가능하였다는 인식도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은 중요한 것이다.

## 1. 경제협력 분야

### 가. 의미와 중요성

신아시아 외교는 한국의 협력 네트워크 외교를 확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의 차원에서 한국의 외교의 지리적 범주를 동북아시아에서 벗어나 범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외교의 지리적 범주를 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아시아 차원의 협력 의제를 도출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신아시아 협력 외교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하였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주요 목표는 ① 인근 우방지역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②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 ③ 이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신아시아 외교의 수단은 공적 개발 원조(ODA) 확대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여 확대 그리고 FTA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신아시아 외교의 궁극적 목표가 한국 외교의 지리적 범주를 범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볼 때 경제협력은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적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간의 협력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실질적인 것이 경제적 상호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부분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인 정치, 안보협력 등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협력 의제(agenda)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 협력 분야는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신아시아 외교가 단순한 외교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상호 의존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부의 증대라는 목표는 아시아 평화

의 매우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아시아 외교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의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그리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 외교 강화 그리고 교역 관계의 강화 등이며 이러한 현실은 신아시아 외교에서 경제협력 부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나. 경제협력의 현황 및 추세

### (1) 개발협력

#### (가) 최근 개발협력의 추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경제적 목적의 지원이지만 늘 정치적 성격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지원이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냉전기간 동안에는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냉전 이후 1990년대 초부터 ODA 규모는 계속 축소되어 왔다. 특히 냉전시기 전략적 목적 때문에 집중적으로 ODA가 제공되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ODA가 줄어든 것이 이러한 ODA 규모 축소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다시 추세가 반전되면서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 세계 ODA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달성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ODA 규모의 증가는 9·11 테러 이후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가 세계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도국 빈곤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증가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의의 가속화로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의 증가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양자 원조 중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의 ODA 제공 비율은 1980년대 약 88% 정도에서 1990년대에는 97%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련의 붕괴와 아랍 산유국의 대외 원조 감소로 인해 DAC 회원국 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나머지 비율은 비 DAC 회원국인 한국, 터키, 체코, 중국, 인도, 대만 등의 신흥 공여국이 제공한 것이다. DAC 회원국의 개발 원조 제공 추세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의 비중은 1980년대 초 DAC 공여액의 30%를 점유했으나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약 23% 수준으로 하락하여 현재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 호황과 엔고에 힘입어 2001년까지 최대 ODA 공여국 지위를 차지하였다. DAC 회원국 중에는 최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원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전 세계 원조 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는 유엔(UN)이 정한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대비 0.7% 이상의 ODA 공여를 달성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DAC 회원국의 ODA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DAC 회원국 중 대다수가 2009년 ODA 예산을 2008년 대비 상당 규모 증액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2010년 ODA/GNI 0.15%, 2015년 0.25% 증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DA 협력 대상국 현황을 보면 197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 대상국 대상에서 많이 줄어들고 아프리카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1990년대 말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와 남미 비중이 다시 늘어나면서 아프리카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공여국들은 지리적 인접성 및 역사적 연관성을 많이 고려하여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여국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로서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의 10대 지원 대상국 중 8개국, 영국의 10대 지원 대상국 중 7개국, 아프리카 국가이다. 한편 일본의 10대 지원 대상국 중 9개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10대 지원 대상국 모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이다. 협상 대상국의 소득별 ODA 수혜 현황을 보면 최빈국,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이 각각 30%를 차지하며 상위중소득국과 고소득국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원조 제공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 수자원 등)에 대한 원조가 1970년대 말부터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원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를 통해 거버넌스에 대한 원조가 증가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공산주의 붕괴 후 시장경제의 투명성에 대한 동구권의 수요 증대, 아프리카와 유고 등에서의 인도적 긴급 사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은 1970년대에는 주요 지원 대상 분야였으나 1980년대 초 시행된 대규모 농업 개발 사업이 실패하고 세계 식량 생산 증가로 인한 관심 저하로 현재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에너지 분야는 동 분야의 주 원조공여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원조를 줄임에 따라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교토의 정서 발효 이후 청정개발체제(CDM)가 개도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인가가 관심거리이다.

원조 형태로 볼 때는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88%(2007년, 총지출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비구속성 원조 비중은 1980년대 초 60% 수준에서 2007년 84.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조 형태의 변화는 선진국의 경우 원조를 국가목표와 연계하는 추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조의 형태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중심에서 기술협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는 기술협력이 주를 이루는 사회분야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는 현 추세와 함께 원조에 의한 개발도상국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금지하고 있는 ‘헬싱키 원칙’에도 그 원인이 있다. 기술협력 비중의 증대가 원조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나) 아시아 개발협력의 추세와 특징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본의 ODA 정책이 보여주듯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노력은 한 국가의 위상과 영향력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통해 빈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특정 국가의 정치 불안과 그로 인한 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ODA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갖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찍이 일본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 왔다. 일본 원조 정책의 두 축은 국제정치적 고려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였다. 일본의 아시아 원조는 한국, 인도네시아, 남베트남, 타이, 필리핀 등 반공국가들에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냉전기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이 맡게 된 역할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1969년 사토·닉슨 공동성명은 미·일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토 수상

은 닉슨에게 한국, 타이완에 대한 원조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일본의 원조 정책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기존의 일본의 국익(무역 증대) 추구의 색깔이 옅어지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원조 정책이 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베트남 종전 이후 일본은 중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냉전이 종결되면서 일본은 세계 제1위의 원조 국가로서 국제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에서도 인도적 관점, 개발도상국의 안정과 발전이 세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국제적 상호 의존, 환경 보존 등의 이념이 등장하게 된다.

최근 아시아 원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원조공여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적 능력과 원자재 및 에너지 수요의 증가 등 대외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원조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원조 전략은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과 연계되어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대외 원조는 대외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고 대외 원조를 통해 대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sup>21</sup> 지역적 차원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원조의 주요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아

---

<sup>21</sup> 남영숙, “신흥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중국식 원조모델과 국제원조질서에의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8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9 겨울), pp. 37~64.

시아에서의 중국의 원조는 자원 확보를 위한 원조,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과 안보적, 전략적 차원에서의 원조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여 외교의 강화 움직임과 함께 최근 ODA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ODA의 확대 세부 목표로서 ① 대외 원조 체계의 선진화, ②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국제원조조달시장 진출, ③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④ 중점 협력 대상국 중심 지원을 설정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세운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25% 달성(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이 비율을 2021년까지 0.15%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함)으로 하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OECD DAC에 2010년까지 가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외 원조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외 개발 원조 정책의 심의·조정을 강화하고 국내 개발 원조 인적 기반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원조관련 국제적 연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ODA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OECD DAC은 ODA/GNI 비율 0.7% 유지, 무상원조, 비구속성 원조, 최빈국가 우선 지원, 민주화, 인권·거버넌스 향상, ODA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규모 면에서 볼 때 한국의 ODA 규모는 2007년 6억 7,000만 달러로 GNI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의 ODA는 유상원조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DAC 회원국들이 무상 대 유상원조의 비율이 9:1인데 비해 한국은 7:3 수준이다. 또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8:2로 구속성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ODA 중 한국

이 제공하는 ODA로 한국 상품과 용역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ODA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것이다. DAC 회원국의 경우는 비구속성 ODA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ODA의 효율성의 중요한 척도인 집중 지원 대상국의 수에 있어서 한국의 무상·유상원조에서 공통된 중점 협력국은 18개인데 이것은 ODA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많은 숫자이다. 한국 정도의 ODA 규모로 많은 수의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원조 제공의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ODA 제공국가의 수를 줄이고 장기간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ODA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sup>22</sup>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진국의 원조를 따라잡는 노력만이 아니라 한국만의 새로운 기여 외교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선진국 정도의 ODA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기여 외교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원조의 액수가 아닌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기여 외교의 방향 역시 해외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적 기여를 통한 외교 전략의 주 대상은 저개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지금까지 우리의 주요 무상원조 지원 대상국으로서 중점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무상원조에 있어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등이 중점 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유상원조에서는 이들 나라 중 라오스와 몽골이 제

---

22. 강선주, “신정부의 기여 외교: 공적 개발 원조의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8-11 (외교안보연구원, 2008. 4), pp. 7~8.

외되어 있다. 무상원조의 경우 향후 개발 수요가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최빈국에 속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상·유상원조는 그 재원의 확보나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원조의 메뉴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무상·유상 위주의 원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력 개발, IT 협력, 개발 경험 등으로 원조 메뉴를 다양화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KOIC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경험의 사례는 캄보디아 수자원 개발 종합계획 수립 사업, 미얀마 IT 마스터플랜 지원 사업, 베트남 정보통신 입법 지원 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 스리랑카 경제 발전 전략 수립, 필리핀 재정 및 금융 정책 자문, ASEAN 정책 개발 자문단 파견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개발 경험 전수 사업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 개선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하며 다양한 한국형 개발 경험 전수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고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활용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여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자유무역협정

현재 FTA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로 상징되는 다자적 무역 질서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

는 FTA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GATT나 WTO에 보고된 FTA는 276개이다(2010년 통계). 이것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1947년부터 WTO 출범 전인 1994년까지 9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했었지만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185개의 FTA가 체결되어 WTO 출범 이후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50%가 지역무역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역 내 FTA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ASEAN 국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당초 2003년까지 관세율을 0~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하여 2002년 말까지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이하 AFTA)를 조기에 형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과 ASEAN은 10년 이내에 FTA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협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동아시아에 최초의 FTA를 출범시켰다. 일본 또한 ASEAN과의 FTA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2년 11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 자유무역협정(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EFTA)이 발효되었고 ASEAN과의 상품, 서비스에 관한 FTA의 발효 이후 투자 부분도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를 준비중이고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이미 체결했다. 또 중국과의 FTA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일본, 중국과의 FTA의 체결, 그리고 개별 국가와의 FTA를 넘어서 동아시아 FTA를 체결하는 것을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중·일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역시 지역무역협정을 통상 정책의 중요한 전략으로 상정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 또는 체결 준비 중이다. 아시아의 경우는 ASEAN과 FTA를 체결, 발효 중이고 파키스탄, 싱가포르와도 협정을 체결, 발효 중이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은 양자 간 FTA의 추진과 함께 한·중·일 간의 FTA 논의에서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 연구’가 출범된 것을 계기로 한·중·일 FTA 추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3국의 연구기관들은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2년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제2기 연구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 공동 연구를 시행하였다. 민간 연구기관 주도로 시작한 한·중·일 FTA 민간 공동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등 업계 대표도 참여하였으며, 2007년부터 3국의 정부관계자가 옮겨 버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 공동 연구는 연구 결과를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 공동 연구를 정부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 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3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에 한·중·일 FTA가 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보다는 현재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고, 또 현재 산·관·학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인 한·중 FTA가 먼저 추진될 전망이며 이 두 가지 무역협정을 가지고 한·중·일 FTA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한·중 FTA와 한·일 FTA 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중단 중인 한·일 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이후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다수로 보인다. 한·일 FTA가 성사될 경우 한국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과의 FTA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농산물 보호 입장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공산품 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일 FTA가 성사되었을 경우 중국의 입장이다. 상당수의 중국학자들은 한·일 FTA가 추진될 경우 중국은 이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일본은 한국, 한국은 중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내는 삼각 무역구조와 일본-한국, 한국-중국으로 유입되는 투자 및 기술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3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sup>

### (3) 금융협력

ASEAN+3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냈다. 가장 중요한 성취는 공동스왑기금을 만들었으므로 초보적인 형태지만 동아시아만의 통화기금을 만들어낸 것이다. 2000년 5월

---

<sup>23</sup> 진창수, “통상협력: FTA와 병행한 지역경제협력 강화,” 세종연구소 엮음,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성남: 세종연구소, 2006.5), p. 150.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역내 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 및 지역 금융 감시기구 설립을 위한 협력 논의와 함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이하 CMI)라는 양자 간 통화스왑협정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초보적인 시스템이지만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금융협력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CMI 이전에도 ASEAN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간 통화스왑협정이 1977년 체결된 적이 있다. 이 시스템은 지원 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작아 사실상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 스왑협정은 CMI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 협정의 확대와 추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CMI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sup>24</sup>

치앙마이 재무장관회의 이후 ASEAN+3의 13개국 재무차관 및 실무급 인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니셔티브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상을 통해 CMI의 기본 틀을 도출하였는데 그 기본 틀은 ASEAN 스왑협정의 확대와 양자 간 스왑협정 및 이에 따르는 일련의 재구입협정 등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두 가지 중 자금 규모나 실효성 면에서 양자 간 스왑협정의 확대 발전이 CMI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1월 ASEAN 정상들의 CMI의 틀 안에서 ASEAN 스왑협정(ASA)의 기금을 10억 달러로 증액하는데 합의하고 새로운 ASEAN 회원국들을 ASA에 가입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모로서는 향후 위기 시에 의미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sup>24</sup> CMI에서의 단기 외화 유동성 지원은 중앙은행 간 계약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외국통화(미 달러)를 단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스왑 방식이다.

따라서 양자 간 스왑협정은 CMI의 핵심적 부분이다. 원래 CMI는 33개의 양자 간 통화스왑협정을 위한 협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중 30개의 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국과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협정이며 나머지 3개 협정은 한·중·일 3국 간의 협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체결된 협정은 훨씬 적다. 2007년 현재 16개의 개별 스왑협정이 체결되었고 규모는 850억 달러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양자 간 스왑협정(Bilateral Swap Arrangement: 이하 BSA)의 발동에 있어서 스왑자금 규모의 90%는 IMF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있어서 IMF 부대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제공되게 되어 있다. 이런 장치를 마련한 이유는 CMI에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MF로부터 자금 지원이 확정되거나 자금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장치가 발동하도록 한 것이다.<sup>25</sup> 2005년 제8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CMI 운영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 진전을 이루었다. 하나는 외환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스왑의 규모가 약 4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2배 확대되었고 IMF 연계 지원 통화스왑 비율을 80%로 낮추어 IMF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왑의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CMI는 그 후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 2007년 5월 5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10차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CMI를 보다 결속력

---

<sup>25</sup>- CMI를 IMF와 연계한 것은 미국과 EU가 Asia Monetary Fund의 경우처럼 동아시아만의 금융체제를 반대할 것을 우려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려도 작용하였다; Injoo Sohn, "East Asia's Counterweight Strategy: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Evolving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Paper presented at the G24 Technical Group Meeting, IMF/World Bank Annual Meeting, Singapore, September 13~14, 2006.

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만드는 CMI 다자화에 관한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CMI의 다자화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일의 다자 간 협약을 통해 공동펀드를 만들고 참여국이 외환보유고를 출자하는 방식이다. 2008년 5월 4일 개최된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800억 달러 이상의 공동펀드의 총 규모를 결정하고 ASEAN과 한·중·일간의 분담 비율(20:80), 자금 지원 조건 및 실행 체계 등 구체적 내용 및 보다 신뢰성 높은 역내 경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2009년 2월 열린 푸켓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다자화 규모 확대에 합의해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어 같은 해 5월 개최된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분담금, 인출배수 등 CMI 다자화 주요 쟁점에 최종 합의하여 2010년 3월 24일 CMI 다자화체제(CMIM)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은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ASEAN 20%씩 분담하기로 결정됐으며 우리나라는 16%인 192억 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 192억 달러까지 인출 가능하도록 했다.<sup>26</sup>

CMIM과 함께 지역 차원의 중요한 금융협력은 아시아 채권기금(Asian Bond Fund)을 창설한 것이다. 2003년 6월 아시아 9개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총재회의(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Pacific Central Banks: 이하 EMAEP)는 달러화 표시 아시아 채권에 투자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채권기금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아시아채권기금은 아시아 채

<sup>26</sup> 자금이용방식은 자금지원 요청 시 요청국은 자금지원국에게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분담비율에 따라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CMI 다자화체제의 기본거래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만기는 90일이고 최대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720일, 약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국제통화기금(IMF) 비연계 자금은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권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외화가 미국이나 EU의 채권시장에 잠기게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 새 기금 창설을 통해 외환위기 재발을 막고 정부와 민간이 아시아 역내에서 자금 조달 및 운용을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MEAP는 2004년 다시 20억 달러 규모의 채권기금을 만들어 태국의 바트화나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표시 채권에 투자할 기금을 공동으로 창설하기로 하였다.

CMI와 같은 금융협력과 연관해서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감시, 감독 기능 강화와 정책 협의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ASEAN+3 차원에서는 2001년 5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국가에 대한 경제 점검 및 정책 협의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회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차 연구회에서 경제 점검을 위한 고위당국자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4월 및 12월에 각각 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9년 초에 지역경제모니터링단(Regional Economic Monitoring Unit: 이하 REMU)을 설립하여 ASEAN+3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력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2005년 4월에는 이를 지역경제통합국(Offi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이하 OREI)으로 승격시켰다.<sup>27</sup> 2010년 현재에는 CMIM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는 논의들이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이 관리기구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2010년 ASEAN+3 회의에서는 또 역내 경제 감시기구의 창설이 승인되었다. ASEAN+3

---

27. 유석진, “통화금융협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 세종연구소 역음, 『한국의 국가전략 2020』, p. 161.

역내경제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이하 AMRO)는 동아시아 지역 최초의 경제 감시, 감독기구로서 동아시아 통화기금의 설립 건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역내 경제 감시기구는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을 감시하기 위한 준 국제기구로 한국은 지분 16%를 갖고 자문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 다. 추진방안

### (1) 분야별 추진방안

#### (가) 개발협력

개발 원조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개발협력 분야는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2009년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신아시아 외교가 이루어져 왔으며 여기에서 개발 원조는 핵심적인 의제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개발 원조를 포함한 교류·협력의 강화를 약속했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ASEAN 국가들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작성된 ‘한·ASEAN 개발협력 정책문서’를 통해서 2015년까지 ASEAN 무상원조 규모를 2008년 대비 3배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향후 신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조 전략과 한국형 원조 모델 개발을 통한 규모상의 약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1) 선택과 집중의 원조 전략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 규모는 아직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08년 ODA는 GNI 대비 0.09%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적 개발 원조의 규모 차이를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조 국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56개의 무상원조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56개의 대상국은 수가 너무 많으며 현재의 원조 규모로는 집중적인 지원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점 협력 대상국을 더욱 축소하여 무상원조의 집중적 지원을 현실화하고 제외된 나라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개발 원조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한국형 원조 모델의 개발: 정부 중심적 사고의 전환

원조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국가별 원조액을 증가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원조 강국인 일본과 최근 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원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원조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은 금전적 원조를 보완할 수 있는 원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개발 경험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원조 메뉴의 개발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원조 메뉴들은 종종 너무나도 다른 역사와 사회적 상이성으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새로운 원조 메뉴를 개발함에 있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한 내용인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정부 중심의 사고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기여 외교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형태의 기여들도 많다. 글로벌 수준의 한국의 기업들, 대학들 그리고 NGO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여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원조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나) 통상협력

이미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ASEAN 등 2건, 11개국과의 FTA를 발효한 바 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와의 CEPA도 발효하였다.

#### 1)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재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일본과는 FTA 체결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FTA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국 간의 이견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일본과의 FTA는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이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FTA의 경우 이미 한·중 간의 산·관·학 공동 연구가 종료되어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업계가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농업의 경우 우리 농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면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한·중·일 FTA 추진

한·중·일 3국 정상은 2009년 10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한·중·일 FTA 민간 공동 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 연구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국 간 경제 통상 협력은 잠재력이 매우 크며 또 한·일 FTA와 한·중 FTA 논의를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진척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의 추진력(momentum)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다) 금융협력

금융협력 부분은 아시아 협력 의제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한 부분이다. CMI의 다자화, 역내 채권기금의 창설, 감독기구의 설립 등은 아시아 차원의 통화기금의 창설에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개편과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IMF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적 개혁 의제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금융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 1)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추진

신아시아 외교의 측면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이다. 현재 G20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하는 간부회의(caucus) 구성들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간부회의의 형태는 중앙은행장과 재무 장관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ASEAN의 대표국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아시아 통화기금 그리고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의 진전

현재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아시아 차원의 통화기금의 창설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시아 차원의 통화기금이 기존의 금융 거버넌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및 서구 선진국의 반대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금융협력체의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아시아 통화 단위의 도입을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경제 정책적 협력 및 통화 정책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2)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노력

### (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2001년 EAVG 보고서와 2002년의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이하 EASG) 보고서에 제시되었다. 이들 보고서에는 EAS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비전이 포함되었다.

EAS가 출범하기 전까지 지역의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은 제각기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1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그를 위해 EAS 및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고 공식 제안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동아시아 포럼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은 2003년 12월 일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도쿄선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목표를 제시했다. 2004년 5월에는 산업계, 정부관료 및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를 설립했고 이 평의회는 2005년 8월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현상, 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관여하고 미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동아시아에서는 APEC처럼 공동체가 수사학적 용어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라는 형태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경우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동아시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느슨한 회의체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공동체관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를 안보공동체보다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전략은 첫째로 ASEAN을 기초로 하여 동북아 3국이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아·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의제에 있어서는 경제와 비전통적 안보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5년 EAS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에 대해서 본격적인 우려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가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EAS가 출범한 이후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게 된 것을 계기로 미국은 EAS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중국 중심의 폐쇄적 지역블록으로 발전하거나 미국이 배제되는 상황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측면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아·태 지역 차원의 공동체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일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ASEAN+3의 틀 속에서 진전을 보여 오다가 2004년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적극적 움직임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써 2005년 제1차 EAS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EAS는 그 창설 과정에서 참여 국가 결정을 둘러싸고 ASEAN+3 참여 국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노출하였으며 결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게 되면서 ASEAN+3 정상회의에서 상정하였던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중간 단계의 EAS와는 다른 성격의 대화체로 변질되고 말았다. 2005년 제1차 정상회의 이후 EAS에 대한 참여 국가들의 기대는 축소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추진 축이 EAS가 아닌 ASEAN+3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EAS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만일 EAS가 보다 더 점진적으로<sup>28</sup> 추진되고 ASEAN+3 참여 국가들만으로 구성되었다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도 탄력을 받아 계속적으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EAS 출범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이나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 정상들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는 문구를 채택하는 정도의 진전만이 있어왔다.<sup>29</sup>

28. ASEAN+3 참여 국가들은 EAS가 이렇게 빨리 현실화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2004년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보다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2008년부터 지역에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호주의 케빈 러드 수상은 2008년 6월 시드니의 ‘Asia Society’에서 행한 연설에서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협력체들이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치, 안보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2020년까지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sup>30</sup> 러드 수상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Asia Pacific Community)의 참여 국가에 대해서 그의 연설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만을 언급하였지만 크게 본다면 EAS 참여 16개 국가에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1</sup>

호주 러드 수상의 구상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가 이 지역의 정치적, 안보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정치, 안보협력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드 수상의 문제의식은 이 지역 주요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영향력 확대가 이 지역에서 에너지, 식량, 물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핵 확산, 테러리즘, 영토 분쟁 등의 새로운 안보 불안 요인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미리 대비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

---

<sup>29</sup>- 2009년 10월 25일의 EAS 의장성명에는 정상들이 일본과 호주의 공동체 제안에 대한 역대 토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평가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고 2009년 10월 24일의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에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열의를 주목하였다는 문구, 그리고 ASEAN+3 정상들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sup>30</sup>- Kevin Rudd, “It’s time to build an Asia-Pacific Community,” Address to the Asia Society, Austral Asia Center, Sydney, June 4, 2008.

<sup>31</sup>- Kevin Rudd, Address to the 8<sup>th</sup> IISS Asia Security Summit, May 29, 2009.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드 수상의 구상에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형태가 EU 스타일의 공동체나 초국가적 관료 기구 등이 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도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sup>32</sup>

이러한 정치, 안보에 대한 강조점으로 인해 러드 수상의 구상은 아시아·태평양의 강대국들(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과 다른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정상급 협력 메커니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주의 구상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대국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구심체로서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 가세하였다. 2009년 집권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9월 16일 취임 기자회견과 24일 UN에서의 연설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신뢰 관계 강화에 전력을 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현실적 협력이 필요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기능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약에서 판단해 볼 때 하토야마의 구상은 무역, 금융과 같은 경제적 협력, 재난 구호와 같은 인간안보적 협력,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와 같은 실질적 협력 의제를 포괄하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토야마의 안은 통화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제공동체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 하토야마의 UN 연설에 대해 미국은 미국을 제외하는 동아시아 공동

<sup>32</sup> 러드 수상은 그가 EU형태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자신의 구상은 EU와 같은 공동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체 구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하토야마의 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은 일본의 안이 동아시아의 독자성과 영향력 확대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과 중국의 공동 보조라는 구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8년 만에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아시아 중시를 외치며 아시아에 접근하는 상황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신아시아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9년 11월 14일 동경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자신은 미국 최초의 태평양 대통령(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이라고 언급 하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공식화 했다.<sup>33</sup> 정책 차원에서는 미일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대등한 동맹 관계로서의 미일 관계의 강조 그리고 세계 경제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파트너십 등을 강조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양자 간 전략적 상호 신뢰(bilateral strategic trust)를 구축, 심화할 것을 공동성명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와 함께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의 등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종래의 소극적이고 지켜보는(wait and see) 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2010년 1월 11일 하와이 연설에서 APEC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익에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와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는 EAS나 ASEAN+3에 참여 혹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sup>34</sup> 미국은 여

---

<sup>33</sup>-Barack Obama, Address in Suntory Hall in Tokyo, November 14, 2009.

<sup>34</sup>-Hilary Clinton, Address on *the U.S. Vision for Asia-Pacific Multilateral Engagement* to the East-West Center, January 12, 2010.



전히 미국을 배제하는 동아시아 다자 메커니즘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sup>35</sup>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는 미국 배제에 대한 반대라는 대응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다자 메커니즘 형성 움직임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다.

정리하면 2000년대 후반에 와서 호주와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 표명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지역 차원의 국제정치적 핵심적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전이 현실을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학문적 성과 역시 매우 초보적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몇 권의 단행본들은 매우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담고 있지만 내용들은 동아시아 공동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영역별 현황(예를 들어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시아에 자유무역지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변변한 다자안보협력체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일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으로 보인다. 전재성 교수는 동아시아에 만연한 주권 경쟁과 현실주의적 안보관 등은 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 차원의 공동의

---

<sup>35</sup>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9년 9월 하토야마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밝힌 직후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일본 정부 고위 관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미, 일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반대 전달,” 『연합뉴스』, 2009년 9월 29일.

규범이 형성될 토양을 제공해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유럽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36</sup> 동아시아에서는 공동체는 물론이고 다자주의적 제도 역시 착근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지적인 것이다. 미국의 역할과 전략도 결코 동아시아 공동체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아무리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전략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진전이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미국은 가용한 많은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신아시아 외교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전략

##### 1)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격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는 비전의 문제이자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다. 비전은 위대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비전이 소박할수록 높아진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EU와 같은 포괄적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공동체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현실적 협력이 필요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기능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약에서 판단해 볼 때 하토야마의 구상은 무역, 금융과 같은 경제적 협력, 재난 구호와 같은 인간안보적 협력,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와 같은 실질적 협력 의제를 포괄하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토야마의 안은 통화공동체에 대

---

<sup>36</sup> 전재성, “EU와 동아시아 공동체,”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EAI, 2008).

한 구상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제공동체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 러드 수상의 문제의식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대비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러드 수상의 구상은 아시아·태평양의 강대국들(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과 다른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정상급 협력 메커니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두 나라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성격과 기능은 전혀 다르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국제정치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특히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있다면, 호주의 구상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대국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구심체로서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하토야마의 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은 일본의 안이 동아시아의 독자성과 영향력 확대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과 중국의 공동보조라는 구상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가?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며 또 동아시아의 경제력에 걸맞은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고 세계경제의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차원의 조건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를 추진하는 일,<sup>37</sup>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추

---

<sup>37</sup> Kyung-Tae Lee, "Where is the East Asian Community Going?," in *East Asia Forum*, <<http://www.eastasiaforum.org/2010/03/21/where-is-the-east-asian-community-going/>>.

진을 주도하는 일들이다. 배공찬 교수는 기본적으로 ASEAN+3의 틀 안에서 제2의 EAVG 및 EASG를 제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 교수는 2020년까지 ASEAN+3 13개국 중심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아시아 금융기구 설립, 한·중·일 3국의 ASEAN+3 정상회의 개최 등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의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2025년까지 역외 국민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동아시아 공동체에 단계적으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비전 2020(East Asian Vision 2020)’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38</sup> 최근 G20 정상회의의 출범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면서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의견 조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G20의 내부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의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지역경제협력과 아시아 지역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나타나고 있다. G20 내에 동아시아 국가들을 묶는 동아시아 간부회의(East Asia Caucus)를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역내의 경제협력(금융 및 무역)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거버넌스에서 동아시아의 목소리를 도출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일 등이 될 것이다.<sup>39</sup>

기본적으로 안보나 경제협력은 모두 중요한 지역적 현안이고 공

38- 배공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 11차 ASEAN+3 및 제3차 EAS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7-42 (외교안보연구원, 2007), pp. 15~16.

39- Soogil Young, “The Case for an East Asian Caucus on Global Governance: A Korean Perspective,” in *East Asia Forum*, <<http://www.eastasiaforum.org/2009/04/12/the-case-for-an-east-asian-caucus-on-global-governance-a-korean-perspective>>.

동체 협력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안보나 경제적 공동체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다. 안보공동체는 차치하고라도 경제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 역시 많은 현실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sup>40</sup> 금융의 측면에서도 공동통화권의 형성에 따른 중·일 간의 이권이 보여주듯 많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경제공동체가 가장 현실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쉬운 목표는 아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결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진전과 발전을 통해 공동체의 결성이 완성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sup>41</sup> 유럽의 통합이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에서 리스본 조약의 발효까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전략을 세움에 있어 공동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호주나 일본의 제안은 비전의 제시이며 또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 공동체의 방향이나 추진전략들을 빚어(molding)나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

40.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논의는 현실적으로 당위론의 차원을 넘어 설수 없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이상현,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가능성과 한계,”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41. 아차라(Acharya)는 아시아 다지주의 제도화는 일본과 호주가 제안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오랜 토론과 논쟁 그리고 기존 ASEAN의 역할과 위상 등의 고려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EU 형태의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기보다는 일본과 호주의 안을 바탕으로 한 기존 제도의 수정과 적응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mitav Acharya, “Competing Asian Communities: What the Australian and Japanese Idea means for Asia’s Regional Architecture,” in *East Asia Forum*, <<http://www.eastasiaforum.org/2009/10/29/competing-asian-communitie/>>.

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의 방법으로서 가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서 그 가치에 부합하는 기능적 협력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한국의 지향점으로 삼고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추진전략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동체를 논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지역협력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지역협력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부재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체는 어떠한 의미에서 모든 국가들에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의 공동체를 제안하거나 지역협력체를 통해 자국의 독점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차원의 공동체 논의만이 무성한 것이다.<sup>42</sup>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목적을 개발하는 것 혹은 공통의 규범과 그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최장집 교수의 표현을 빌면 공동의 이해관계와 위협 요인에 기초한 ‘공동의 의미지평(common space of meaning)’을 발전시켜나

---

42. 이러한 지역 제도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EAS 출범 시에 나타나는 국가들 간의 국제제도를 둘러싼 갈등이다. EAS 출범 시 중국, 일본, 일부 ASEAN 국가들이 보여준 움직임은 국제제도를 통한 균형(balancing) 전략의 추구로 해석될 수 있다. 제도적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 혹은 연성균형(soft balancing)의 개념에 대해서는 T. V. Paul, James J. Wri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up>st</sup>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제도적 균형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Hyun Seok Yu, “Institutional Balancing and East Asian Regionalism: The Case of East Asian Summi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49<sup>th</sup> Annual Convention,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008.

가는 것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sup>43</sup>

연성권력의 중요성과 중견국가 한국의 물질적 권력의 한계를 강조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역협력체의 형성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가치나 규범 혹은 지식 등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지역협력체가 현실주의적 국익 추구의 수단이나 국익 추구의 대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나 가치를 추구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44</sup> 이 논문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환경, 빈곤, 난민, 식량, 교육, 비확산, 테러, 전염병과 같은 이슈들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인간안보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간안보 이슈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이며 또 가치지향적인 동시에 실사구시적이다. 인간안보공동체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하며 우리가 처한 가장 큰 위협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인간안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할 때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참여국의 범위 문제도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2) 공동체 실현의 로드맵

비전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ASEAN은 ASEAN 자체의 통합, 즉 ASEAN 공동체가 선결 과제이고 한·중·일 삼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장기적 비전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을 통

---

43. 최장집,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공존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미지평,” 『아세아연구』, 제47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44. 전재성, “한국의 미래전략과 동아시아,” 전재성 외,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서울: 삼영사, 2008).

해 현실화 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논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이 경제적 통합을 시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협력이 가장 진전된 분야는 경제 분야이므로 경제적 통합 노력이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시발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우 박사가 소개하고 있는 중국학자들의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방안에 있어서도 대부분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sup>45</sup>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구축 아이디어이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는 EAVG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한·중·일 세 나라에서 각자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EAFTA는 단순한 비전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4년 ASEAN+3 경제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타당성 연구 사업을 ASEAN+3 협력 사업으로 제한하여 역내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 한국은 2007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FTA 구축을 위한 심층 연구를 제안하여 ASEAN+3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에 채택되었다. 현재 한·중·일 삼국은 각기 ASEAN과 FTA를 체결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ASEAN과의 FTA를 발효했으며 한국은 상품에 이어 2009년 서비스 분야 협정이 발효되었고 투자 분야도 서명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들이 ASEAN을 매개로 횡적으로 연계되어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기본적으로

---

<sup>45</sup> 이한우,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시각과 이해,” 박사명 외, 『협력에서 공동체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동향과 과제』 (서울: 이매진, 2009).



현재의 ASEAN+1 차원의 FTA가 매우 낮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담고 있고 과도한 예외 품목 인정으로 무역자유화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SEAN+3 형태의 동아시아 FTA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중이나 한·일 FTA는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중·일 FTA는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중·일 삼국의 FTA도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AFTA의 실현에 있어서는 한·중·일 FTA가 선행되고 이것이 ASEAN과의 FTA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방식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일본이 ASEAN+3 FTA가 아닌 ASEAN+3+3(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 제휴 구상(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을 제시하고 ASEAN+6 경제통합 연구를 위한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ASEAN and East Asia: 이하 ERIA)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sup>46</sup> 이것은 기존의 한·중·일+ASEAN의 경제통합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떠나 현실적인 방안은 한·중·일+ASEAN의 경제적 통합이 심화된 이후 확대의 과정을 거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sup>47</sup>

이와 같은 경제통합 우선의 기능주의적 공동체 건설 논의와는 달리

46. 이 안은 2007년 1월 EAS 의장성명에 채택되었다.

47.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제와 전망: 제11차 ASEAN+3 및 제3차 EAS 결과를 중심으로.”

단기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는 결코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는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체로 진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나 지역정체성, 지역 의식 등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한우 박사는 일본보다는 중국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경로에 있어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경제통합과 정치안보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48</sup> 정치적 협력의 요소가 빠진 공동체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근거한 이러한 방안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의 지역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방안의 예는 현재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를 발전시키는 방안, 또 6자 회담을 발전시켜 동아시아 안보기구로 만드는 방안, EAS를 동아시아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들이 포함된다. 또 다른 견해는 결국 동아시아 공동체의 달성은 역내 국가들의 내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는 경제나 정치적인 측면 이외에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형국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된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문화공동체를 구축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9</sup>

---

48- 이한우,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시각과 이해,” pp. 63~67.

49- 김형국, 『국제제도론: 정치와 법의 만남』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p. 465.

## 2. 에너지 및 기후 분야

### 가. 의미와 중요성

신아시아 외교는 기존 4강 중심의 외교 지평을 범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하고,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신아시아 외교는 동남아시아(ASEAN), 서남아시아(인도), 중앙아시아(에너지 협력), 남태평양(호주, 뉴질랜드)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정치, 경제협력과 더불어 개발협력과 녹색성장 등 신외교 이슈들이 강조되었다.

에너지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신아시아 구상의 추진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범아시아 지역에 있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역내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석유, 가스, 석탄, 전력 및 원자력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둘째로 에너지와 기후 변화의 문제는 글로벌 이슈의 대표적인 의제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및 기후 변화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국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 차원 및 지역적 차원에서 에너지 및 기후 변화의 현황과 이에 따른 도전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나아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및 주요 소지역 차원의 협력 논의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신아시아 외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나. 에너지 및 기후 변화의 현황 및 추세

### (1) 글로벌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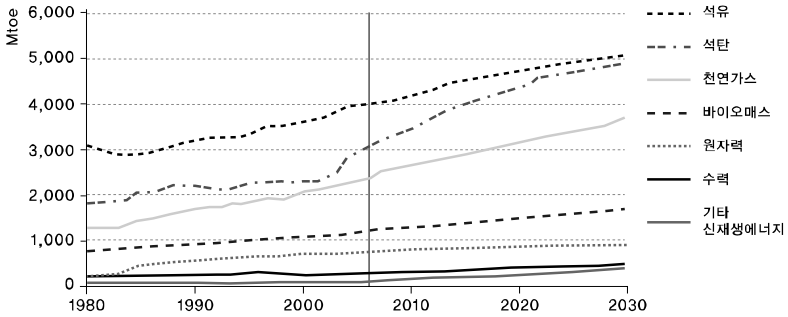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의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45% 상승하고, 이 기간에 아시아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등)들의 에너지 수요는 196%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50</sup> 전체 에너지 구성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나 총량은 2030년에도 약 10%에 머무르는 반면, 화석연료는 2030년 70%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은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향후 일정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sup>51</sup>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시나리오(450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화석연료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나, 전체 구성비에 있어 절대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II-1>, <그림 II-2>는 이러한 수요 전망을 보여준다.

---

<sup>50</sup>- IEA, *World Energy Outlook 2008* (Paris: OECD/IEA, 2008),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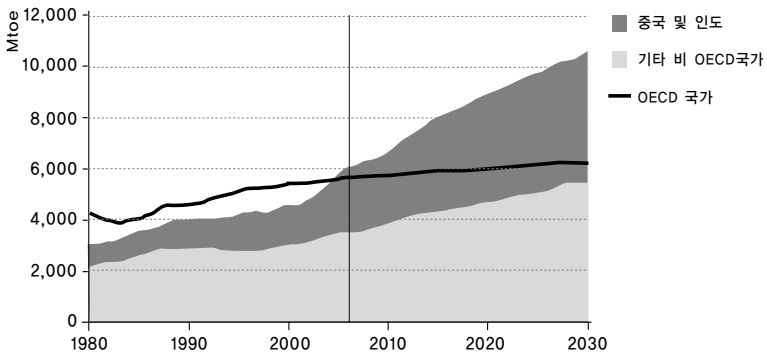
<sup>51</sup>- *Ibid.*, p. 79.

## 그림 II-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08*.

## 그림 II-2 지역별 에너지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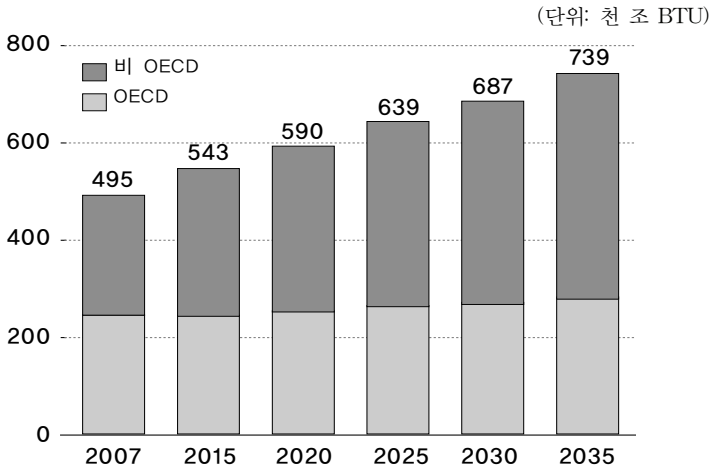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08*.

미국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EIA)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OECD 회원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였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비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사용량이 OECD 국가들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에너지 사용량의 격차는 <그림

I  
II  
III

II-3>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향후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3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에너지 소비량 격차 (2007~20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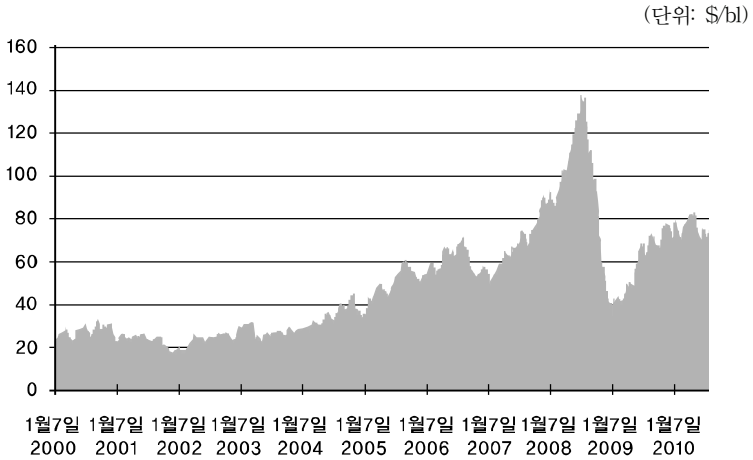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2010), p. 1.

(가) 화석연료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 가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심한 등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을 벗어날 경우 다시 고유가체제로 돌입하게 될 높은 개연성도 안고 있다. <그림 II-4>는 2000년 이후 원유 가격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2030년의 1차 에너지원의 8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화석연료는 세계 에너지 수급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는 2030년에도 여전히 주요한 에너지원이고, 석탄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그 수요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그림 II-4 원유 가격의 동향(2000~2010년)



자료: EIA Data (2010).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발전의 절반가량이 석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석유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2035년에는 2007년 대비 2,600만 배럴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 유지해온 세계 석유 공급 비율인 40%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OPEC 회원국은 생산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하루 평균 생산 예측치인 2,600만 배럴 중에서 OPEC은 1,150만 배럴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일샌드, 초중질유, 액화석탄 등의 비전통적 석유자원은 연간 약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sup>52</sup>

세계 경제가 위기국면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천연가스 수요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천연가스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sup>52</sup>-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p. 27.

보이는 지역은 주로 개도국 지역으로 선진국인 OECD 지역에 비해 세 배 가량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까지 선진국들이 연간 0.6% 성장세를 보이는 데 비해 개도국은 연간 1.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개도국은 2035년에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분의 78%를 차지하게 되고, 개도국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은 2007년의 50%에서 2035년에는 59%로 늘어나게 된다.<sup>53</sup>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국제적 조약이나 국가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세계 석탄 소비도 2007년에서 2030년까지 15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증가량의 대부분은 개도국들인 비 OECD 국가로부터 비롯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부터 2035년까지 증가율의 95%를 개도국 경제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도국에서의 발전 과정과 산업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필요량의 상당 부분이 석탄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의 석탄 발전소의 용량은 2035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석탄 수요의 증가량도 5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5>, <그림 II-6>은 이러한 화석연료 소비 증가의 전망을 보여준다. 이처럼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화석연료의 고갈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일차적인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sup>54</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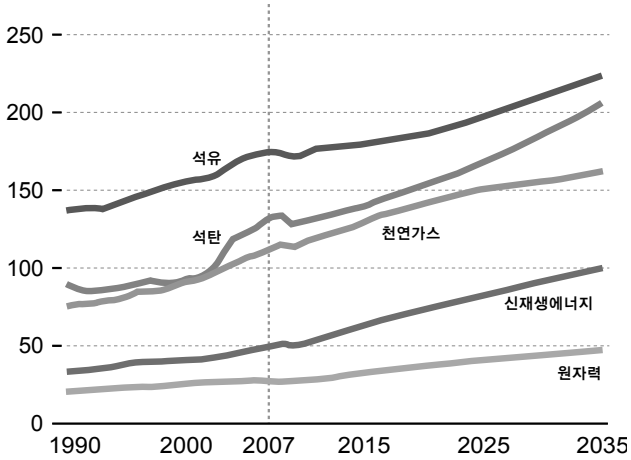
<sup>53</sup>- *Ibid.*, p. 41.

<sup>54</sup>- *Ibid.*, p. 128.



●그림 II-5 세계 에너지 소비 예측(2007~20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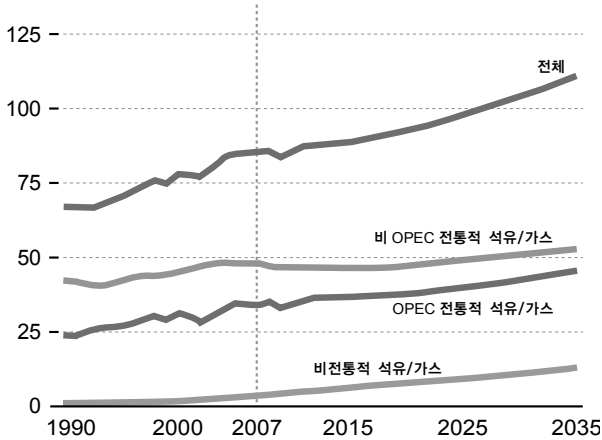
(연료별, 단위: 천 조 BTU)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p. 1.

●그림 II-6 세계 석유/천연가스 생산량 예측(2007~2035년)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p. 2.

#### (나) 원자력

원자력 발전 용량은 2007년의 2조 6,000억 kWh에서 2020년의 3조 6,000억 kWh를 거쳐 2035년에는 4조 5,000억 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 1차 에너지 수요의 비중은 2008년 6%에서 2030년의 5%로 1%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석탄과 석유 등에 기반을 둔 여타 에너지 발전량의 절대값이 상승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의 절대값은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비 OECD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sup>55</sup> 원자력 발전은 다양한 발전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저탄소 옵션으로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여타 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긴 가동연한과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들도 가동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의 안전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높아지는 건설 비용과 투자 위험, 핵무기 위험 등을 둘러싼 불완전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경제적인 비용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큰 변수가 되고 있다.

#### (다) 신재생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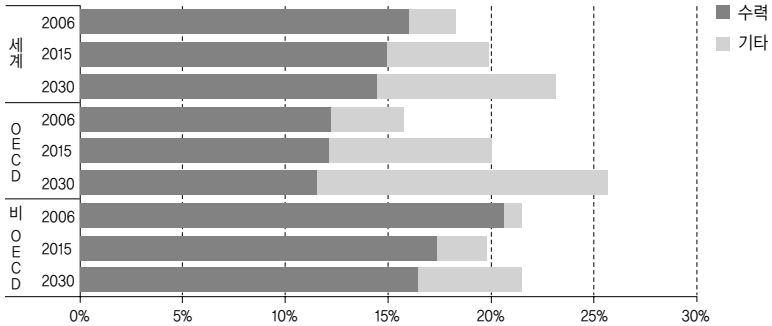
화석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온실가스의 환경적 영향이 널리 알려지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2007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

---

<sup>55</sup>- *Ibid.*, p. 5.

균 3%씩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이 2006년 7%에서 2030년 10%로 상승할 전망이다.<sup>56</sup> 석유, 가스 등 기존 화석 에너지의 고갈 및 비용 상승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특히 각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점차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대부분 수력 및 풍력 발전으로, 2035년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될 신재생에너지의 총 발전량 중 54%는 수력 발전으로부터, 26%는 풍력 발전으로부터 나올 전망이다. 또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조류 등의 에너지 역시 2035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7</sup>

●그림 II-7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 전망(기준 시나리오)



\* 기타는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 조류를 포함.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8*.

<sup>56</sup>- *Ibid.*, p. 4.

<sup>57</sup>- *Ibid.*, p. 80.

## (2) 아시아 역내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전망

### (가)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주요국 전체의 총 1차 에너지 수요는 2004년 2,820MTOE (Million Tons of Oil Equivalent)에서 2020년 4,419MTOE로 연평균 2.8%씩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1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써 소비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2020년 기준 전체 동북아 에너지 수요의 68.1%를 차지할 것이다.<sup>58</sup> 세계적인 에너지 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의 소비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망 기간인 2004~2020년 1차 에너지 소비의 증가량은 약 1,858.3MTOE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의 소비 증가는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총 1차 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중국이 7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러시아(14.2%), 한국(4.8%), 일본(2.4%), 몽골(0.5%) 순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sup>59</sup>

2004~2020년 기간 중 역내 총 1차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1,859 MTOE이며, 이 중 석유는 전체 국가에서 꾸준히 큰 소비 비중을 차지하며 약 19%가량의 기여도를 보일 전망이다. 동북아 주요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 소비량은 2004년 868MTOE에서 2020년 1,218MTOE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특히 중국의 수송용 석유 수요 증가 및 산업용 수요에서의 비중 유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sup>58</sup> 류지철, 『동북아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중장기 전망 연구 (Ⅲ)』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p. 69.

<sup>59</sup> 위의 책, p. 70.

천연가스는 석탄 및 석유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현재 15%에서 향후 비중이 더욱 커지고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sup>60</sup>

표 11-1 동북아시아 국가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 TOE)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04~'10	'10~'20
한국	220,238	269,081	281,318	308,652	2.7%	1.8%
중국	1,423,000	1,985,000	2,283,000	2,261,000	5.7%	2.8%
러시아	644,850	711,903	816,640	909,181	1.7%	2.5%
몽골	2,717	3,793	11,046	11,616	5.7%	11.8%
일본	529,900	538,400	553,800	569,100	0.3%	0.6%
동북아계	2,290,805	2,959,777	3,392,004	3,850,449	4.4%	2.7%

자료: 류지철, 『동북아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중장기 전망 연구 (II)』, p. 69.

동북아 역내 국가의 전력 수요는 산업 발전 및 국민 개인의 소득수준 개선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력 생산은 주로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원자력 및 수력 발전 용량이 증설됨에 따라 석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및 수력 발전량은 2004년 각각 132MTOE, 114MTOE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은 3.7~3.9%, 수력은 4.6~4.8%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나, 2004년 소비량 21MTOE에서 2020년 54MTOE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1차 에너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sup>61</sup>

60. 위의 책, pp. 70~71.

61.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2004); 류지철 『동북아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중장기 전망 연구 (II)』, pp. 71~72.

표 11-2 에너지원별 동북아시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MTOE)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04~'10	'10~'20
석탄	1,274	1,499	1,803	2,172	3.6%	3.8%
석유	868	970	1,094	1,218	1.9%	2.3%
천연가스	465	539	629	750	2.5%	3.4%
원자력	132	164	200	240	3.7%	3.9%
수력	114	149	188	238	4.6%	4.8%
신재생	21	30	40	54	6.1%	6.1%
합계	2,814	3,352	3,954	4,673	3.0%	3.4%

자료: 류지철, 『동북아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중장기 전망 연구 (II)』, p. 71.

(나) ASEAN

ASEAN의 2007년도 1인당 에너지 소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0%에 해당한다. IEA의 전망을 따르면 ASEAN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07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3%에서 2030년 5.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SEAN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2030년에도 1차 에너지 믹스에서 76%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62</sup>

ASEAN의 석유 생산량은 1996년 일일 290만 배럴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석유 감산에 따라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IEA의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ASEAN의 석유 생산량은 2008년 일일 270만 배럴, 그리고 2030년 일일 140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할

<sup>62</sup>- IEEJ et al., *The 2<sup>nd</sup> ASEAN Energy Demand Outlook* (Tokyo: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2009). p. 15.

전망이다.<sup>63</sup> ASEAN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Oil & Gas Journal*의 통계를 보면 2009년 기준 약 6.6TCM으로서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3.7%에 해당한다. 역내 천연가스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등 3개국에 매장되어 있다. 비록 동남아시아 지역은 석유보다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원격지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탐사 및 개발뿐만 아니라 가스 수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이나 LNG 공급 설비 시설 건설 등에 어려움이 있다.

ASEAN의 석탄 매장량은 2007년 기준 약 12억 5,00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에 해당한다. 석탄의 주요 생산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으로서 가채년수는 각각 26년, 76년 그리고 103년이다. IEA의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망 기간(2007~2030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내 석탄 생산량은 75% 이상 증가하여 486MTCE를 기록할 전망이다.<sup>64</sup>

ASEAN 지역의 발전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수력 발전과 지열 발전의 증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도 연간 3.9%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SEAN의 수력 발전 비율은 2005년에는 1%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 이르기까지 연간 5.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이며 이는 주로 메콩 강 하류 지역에서 추진할 예정인 수력 발전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ASEAN에서 지열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두 나라이며, ASEAN에서 지열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이다. 지열 발전은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

---

<sup>63</sup> IEA, *World Energy Outlook 2009: Presentation to Press* (Paris: OECD/IEA, 2009), p. 9.

<sup>64</sup> IEA, *World Energy Outlook 2009: Executive Summary* (Paris: OECD/IEA, 2009), p. 13.

나, 다른 에너지원의 성장으로 최종 점유율은 2005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2020년 이후의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기반을 두어 2030년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은 1.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sup>65</sup>

(다)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2%의 비율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에너지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며 2030년에는 92.7%를 기록할 전망이다.<sup>66</sup> 에너지 유형으로는 석탄이 2030년에 가장 큰 점유율인 36.6%를 차지하며 2005년 35.8%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성장분의 88.6%는 발전 부문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다.<sup>67</sup> 이러한 석탄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인도에 의한 것으로 산업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가장 저렴한 원료가 바로 석탄이기 때문이다.

석유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서 2030년까지 연간 3.6%의 증가세로 총 에너지 수요 중 26.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23.8%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로 소득 성장과 도로 인프라 개발에 의해 점차 개발되고 있는 수송부문에 의한 변화에 기인한다. 천연가스 수요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030년

---

<sup>65</sup>- IEEJ, *The 2nd ASEAN Energy Demand Outlook*, p. 15.

<sup>66</sup>- ADB, *Energy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2009), p. 39.

<sup>67</sup>- *Ibid.*, p. 39.



까지 연간 4.9%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증가분의 52.6%는 가스 발전소에 사용될 전망이다. 최근 인도의 동부 연안에서 대규모 가스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서남아시아에서 천연가스의 주요 소비자인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천연가스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sup>68</sup>

#### (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성장 추세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수준, 산업구조, 그리고 에너지 공급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역내 회원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수요가 가장 빠른 연간 9.5%로 증가할 것이지만 전체 수요량으로는 중앙아시아 내에서 1.6%밖에 되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에너지 수요가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 연간 3.3%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중앙아시아에서 파키스탄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율은 2005년 34.2%에서 2030년 41.6%로 상승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수요는 2003년 중앙아시아의 21.3%로 두 번째로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요는 17.4%로 2005년 21.1%에서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sup>69</sup>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 수요가 2005년 47.7%에서 2030년 49.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가스 보유국인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발전과 산업 활동 전반에

68. *Ibid.*, p. 40.

69.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요 감소는 203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ABD, *Energy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p. 31.

있어서 천연가스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의 증설에 힘입어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야와 같은 가스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가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는 2030년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요의 21.7%를 차지하며 가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2005년 45.9MTOE이었던 규모는 2030년 90.6MTOE로 성장할 전망이다. 수송부문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앙아시아 회원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개발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석유의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석탄은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요의 15.4%를 차지하며 세 번째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2030년 석탄 수요는 60%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 내의 매장량으로 인해 석탄은 전력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나 가스 발전이 석탄을 대체해 가면서 석탄 발전의 개발률은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sup>70</sup> 중앙아시아는 계속해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남아 2005년에 111.7MTOE에서 2030년에는 231.9MTOE의 화석연료를 수출할 계획에 있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의 증가가 이 지역의 수출 전망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 호주 및 뉴질랜드

최근 호주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차 에너지 수요의 평균 성장세가 1990~1999년의 2.4%에 비해 2000~2006년에는 1.7%에 그치고 있다. 2005~2030년 호주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국민총소득이 계속 2%대 초반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

---

<sup>70</sup>- *Ibid.*, p. 32.

간 1.4%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것은 역시 지난 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에너지 변환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청정녹색에너지를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에서 그 원인을 추리할 수 있다. 석탄은 호주의 1차 에너지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석유는 최종 에너지 수요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sup>71</sup> 1990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에너지로서의 석탄은 39.9%에서 43.9%까지 높아졌고, 석유는 37.2%에서 31.6%로 하락하였으며, 천연 가스는 16.9%에서 19.1%로 증가되었다. 2030년에는 에너지 수요의 93%가 화석연료로 구성될 것이며 이와 같이 화석연료는 미래에도 여전히 호주의 1차 에너지 수요의 절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sup>72</sup>

뉴질랜드의 경우 에너지의 1차적 수요와 최종 수요의 큰 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sup>73</sup> 나머지 수요는 가스,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석유 이외의 다른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2004년 이후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가스 공급처를 찾기 위한 투자가 크게 늘었고, 그 결과 뉴질랜드의 가스 매장량은 2005년 기준으로 519억 1300만 m<sup>3</sup>에서 2008년에는 619억 1200만 m<sup>3</sup>로 늘어나게 되었다.<sup>74</sup> 또한 1차 에너지 수요에서 기존의 수력 및 지열 발전과 더불어 풍력 발전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up>71</sup>- *Ibid.*, p. 286.

<sup>72</sup>- 석탄 36%, 석유 30.6%, 가스 26.4%; ADB, *Energy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p. 289.

<sup>73</sup>- *Ibid.*, p.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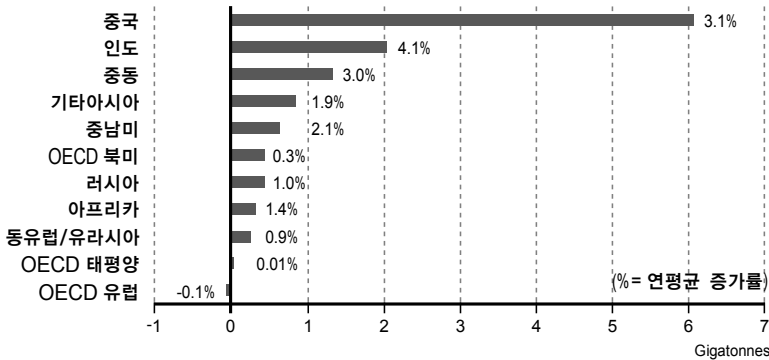
<sup>74</sup>- *Ibid.*, p. 302.

### (3) 온실가스 감축 및 새로운 발전의 모색

#### (가) 기후 변화 관련 대응의 필요성

기후 변화는 아시아 에너지 안보의 또 다른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청정개발체제의 도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문제에 대한 역량과 입장 차이는 이들 문제들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주요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거대 개발도상국의 국제 기후 변화 체제에의 참여 문제는 국제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어 왔다. <그림 II-8>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전망을 보여준다.

●그림 II-8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연간 증가율 예측 (국가별, 2006~2030년)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8*.

#### (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의 등장

IEA가 2009년 *World Energy Outlook*에서 제시한 ‘450 시나리오’는 지구온난화를 섭씨 2°C 수준에서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대기 안의

온실가스를 450ppm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과감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시장을 비롯한 산업별 협의와 국가 정책과 방침 등의 통합적인 노력이 각각 상황이 다른 국가들 및 산업별로 시행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만 450ppm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OECD+국가들(OECD 국가들과 비 OECD EU 국가들)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국가적 정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여타 국가들 역시 국내 정책과 방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며, 2020년 이후로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중동 등의 주요 경제국들에게도 역시 감축의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450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최종 사용자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는 것이 203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특히 발전 업계의 탈 탄소화 투자는 석탄 발전을 반으로 줄이고 핵 발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늘리는 것으로, 450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sup>75</sup> 450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2030년까지의 에너지 인프라와 자산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투자금액은 약 10조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0년과 2030년에 이르기까지 약 4,000억~1조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 총소득의 0.5~1.1%에 이른다. 대부분의 투자는 민간부문에서 비롯되나, 최종 소비자들 및 각국 정부의 정책적 역할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는 에너지 요금의 하락으로 이어져

<sup>75</sup>- IEA, *World Energy Outlook 2009: Executive Summary*, p. 9.

2010년과 2030년 사이에 세계는 8조 6,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인도 등은 도시의 공기청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sup>76</sup> 그러나 2020년까지 개도국에만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다) 아시아의 기후 변화 대응

아시아에는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등의 주요 배출국이 있으며, 기후 변화에의 대응 및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원론적 필요성에는 아시아 각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및 조치들의 도입에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토의정서 상에서 일본은 부속서 I(Annex I) 국가로 지정되어 감축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강제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포스트 교토 체제의 논의에서 일본 및 한국 등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감축안을 제시하고 저탄소체제로 가시적인 이행 계획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자체적인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강제적인 이행목표에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경우 기후 변화 대응 역량 및 온실가스 절감에서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은 역내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의 협력 기제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범지역적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조치들의 도입이 최근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

<sup>76</sup>- *Ibid.*, p. 9.

## 다. 아시아의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의 현황과 특징

### (1) 동북아시아 차원의 협력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동북아시아의 에너지협력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북아 정부 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몇 차례의 대화 끝에 2005년 11월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와 몽골, 남한과 북한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UNESCAP)가 주재한 ‘동북아 에너지협력 정부 간 협의체(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이하 ECNEA)’를 설립하였다. 동 협의체는 정부 간 협의체 고위당국자위원회(SOC)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로는 러시아 천연가스(PNG)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기후 변화 협약에 공동 대응방안을 내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시장 설립을 검토하여 동북아 역내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추진하고 국가 간 에너지 정책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UNESCAP과 한국 정부는 원래 ECNEA의 주체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아 6개국으로 정하고 회의를 주도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은 참관인의 위치를 고수하며 해당 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발의로 한·중·일 3자 에너지 대화(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Energy Dialogue)가 2007년 7월에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 3자 대화의 틀은 동북아 에너지 소비자들의 연결 고리를 두텁게 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아시아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5년 5월에 미국이 제시한 5자 에너지 대화(The Five Party Energy Dialogue)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회원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 미국, 인도, 한국을 참가국으로 한 5개국 에너지 장관회의(The Five Country Energy Ministers Meeting)는 2006년 12월과 2008년 6월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 다섯 나라는 세계 총 에너지 사용량의 50%와 석유 총 사용량의 67%를 점유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동회의의 안건으로는 환경관련 투자의 개선과 에너지 절감 노력의 강화,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 비축고의 확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간의 협력 기제 외에 추가로 비정부적인 활동으로서 학계와 연구 포럼의 교류, 그리고 민간계의 대화 등이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sup>77</sup>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지정학은 러시아로 편중된 생산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거대한 수요국이 공존함에서 발생하는 현실주의적인 정치 구도와 (신)중상주의적인 경제 구도에서 파생되는 경쟁적 에너지 안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경쟁적 상황에서 협력의 의제와 방식을 추출해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sup>78</sup>

---

77- Jae-Seung Lee, "Energy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June 2010), pp. 225~226; 조현, "동북아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JPI 정책포럼』, 제8권 (제주평화연구원, 2009).

78- 동북아 에너지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Kent E. Calder,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Foreign Affairs* (Mar/Apr 2006); Emma Chanlett-Avery, "Rising Energy Competition and Energy Security in



## (2)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sup>79</sup>

동아시아 차원의 에너지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APEC, ASEAN+3 등을 중심으로 다자 에너지협력 논의가 지난 수년간 활성화되어 왔다. 동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몇몇 지역협력 기구들은 에너지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APEC의 에너지협력은 정상회의, 에너지 장관회의, 에너지 실무 그룹, 에너지 실무 그룹 산하의 전문가 그룹 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 구상안(Energy Security Initiative)은 공급 불안으로부터 역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단기와 장기로 대응 방안을 구분하여 회원국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의제 가운데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 화석 에너지 그리고 대체수송연료 개발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ASEAN+3 차원의 에너지협력은 ASEAN+3 정상회의를 필두로 에너지 장관회의(AMEM+3), 에너지 고위관료회의(SOME+3), 에너지 정책운영그룹회의(SOME+3 EPGG) 및 5개 분야에 대한 에너지 협력 포럼을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아시안 에너지 파트너십(Asian

---

Northeast Asia: Issue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2008); Jae-Woo Choo, “Energy Cooperation Problems in Northeast Asia: Unfolding the Reality,” *International Quarterly*, Vol. 23, No. 3 (Fall 2006); 이재승,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협력: 하위정치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Vol. 14, No. 1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5).

<sup>79</sup> 본 절의 내용은 이재승, “한국의 동아시아 에너지외교 연구: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한국의 역할』 (국제정치학회/동북아역사재단 공동 주최 학술회의, 2010.4.28) 및 박용덕, 『에너지 국제협력 추진체계 개편 및 선진화 방안』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Energy Partnership)은 ASEAN+3 에너지협력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역내 에너지협력은 경제 발전 수준, 에너지 자원 부존 상태, 에너지 시장구조 등을 고려한 가운데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향후 ASEAN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차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 ③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 역내 보유한 에너지 자원의 이용률을 증대시킨다.
- ④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인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천연가스, 석탄,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한다.
- ⑤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EAS의 경우 ASEAN+3 에너지 장관회의 직후 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에너지협력 태스크포스와 실무 그룹을 발족시켰다.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차 EAS에서 16개국 정상들은 지역 내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기술과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 에너지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월 15일에 개최된 제2차 EAS에서는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Cebu) 선언’을 공표하였다. ‘Cebu 선언’에서 동아시아 정상들은 동아시아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수단들을 논의하였다.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Cebu 선언’의 목표로는 다음이 선정되었다.

- ① 화석연료의 효율 및 환경성과 향상
- ②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 ③ 모든 경제 발전 수준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지역·국제 에너지 시장 형성
- ④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 ⑤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2007년 11월 21일에 개최된 제3차 EAS에서는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이 공표되었다. 싱가포르 선언의 에너지 안보 증진 관련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에너지원 단위(Energy Intensity)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협력
- ② 국가별로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
- ③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준 벤치마크 설정
- ④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 강화
- ⑤ 건물, 산업공정/장비, 자동차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
- ⑥ 비용효과적인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 ⑦ 안정성, 안보 그리고 비확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민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

### (3) 기타 소지역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 기제<sup>80</sup>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이하 ACD)〉

18개 아시아 외교부 장관들이 개시한 아시아 협력대화(ACD)는 아시아 최초의 대륙을 포괄하는 포럼으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시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ACD는 아시아 내에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극대화하여 아시아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한다. 또한, ACD는 협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을 증진하고 지역 내 무역과 금융시장을 확대하여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의 경제적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 표 II-3 ACD 회원국 현황

창설국가 (18개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b>2003년 가입</b>	<b>2004년 가입</b>	<b>2005년 가입</b>	<b>2006년 가입</b>
카자흐스탄	부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오만	몽골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sup>80</sup>- 본 절의 내용은 이재승, “범아시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외교전략 수립 방안: Trans-Asia Energy System (TAES)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정책용역보고서, 2007.12), pp. 45~92의 내용을 일부 요약, 발췌함.

에너지협력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2004년 채택된 ‘칭다오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 간의 에너지 정보 교환을 늘리고, 에너지 탐사 협력을 촉진하며, 재생·청정에너지의 사용 증대를 위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ACD 에너지 포럼에서는 아시아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에너지의 중요함을 강조한 ACD 에너지 행동계획의 구상이 합의된 바 있다.

#### 〈중앙아시아 경제협력기구(ECO)〉

이란, 터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상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ECO)는 구성원 간 경제, 기술 그리고 문화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5년에 설립되었다. 공통된 문화·역사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ECO는 지역 내 자원 활용도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 의사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현존하는 인프라와 비즈니스의 연계를 추구해 왔다.

ECO의 에너지협력 목표는 지역 내 에너지 정책 공조의 차원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국제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또한 ECO 회원국의 전력 배전망을 상호 연결하여 에너지 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회원국의 보유 자원과 국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에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회원국 수요에 적합한 원유, 가스 및 전력의 생산 및



거래를 위한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의 국제시장 접근성 증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다.

####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상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중국, EU, 이란, 일본, 한국, 미국을 참관인으로 두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이하 SAARC)은 남아시아 국민의 협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여 회원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속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로 국제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SAARC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남아시아 지역연합 행동통합계획(SAARC Integrated Programme of Action: 이하 SIPA)의 직접적인 권한 아래에 이루어져 왔으며 SAARC 에너지센터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에너지 무역의 혜택과 제약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2007년에 열린 SAARC 정상회담을 통해 방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파키스탄의 석탄 추출에서 인도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양자 간 무역 진흥이 시도되었다. 그 외에 이란·파키스탄·인도 파이프라인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아시아개발은행에 파키스탄과 인도 간 에너지협력과 지역 간 전력 흐름을 촉진하는 공동 전력망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AEC)는 CIS 국가들이 출범시킨 기구로 12개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가운데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AEC는 포괄적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세계무역기구 가입, 관세제도의 조화, 공동 국경 안보 정책의 수립, 규범화된 환율 규제 정책 도입 등을 추구하고 향후 경제통합 분야에서 독립국가연합을 대체할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AEC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공동시장을 안건으로 회원국들의 공동 에너지 정책 제창에 대한 예비 합의를 이루었다. 이는 EAEC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 공급자 중의 하나로서 부상시킬 기회로 점철되고 있으나 초국가적 조정기구의 필요성과 러시아의 수익성 독식이 공동시장의 탄생에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2007년에는 EAEC의 단일 에너지 시장에 대한 합의 초안이 도출되어 공동 석유 및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합의 초안이 진행되었다.

## 〈벵갈만 기술·경제협력 이니셔티브(BIMSTEC)〉

벵갈만 기술·경제협력 이니셔티브(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이하 BIMSTEC)는 1997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태국의 경제협력으로 시작하여 2003년 네팔과 부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04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BIMSTEC은 남아시아와 남동아시아의 연계를 통해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13억 인구와 7,500억 달러의

I

II

III

GDP를 바탕으로 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2005년 제8회 BIMSTEC 장관회의에서 전력 교류 개발과 BIMSTEC 회원국 간 가스 파이프라인 의제가 선정되어 뉴델리에 BIMSTEC 에너지 본부를 세우기로 결정되었고, 본부는 경험 공유와 역량 확립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얀마는 에너지 실무 그룹을 통해 현재 탄화수소와 수력자원, 천연가스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정보센터, 회원 간 에너지 교류 네트워크 활동을 지역별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메콩 강 유역 소지역(GMS) 프로그램〉

메콩 강 유역 소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 GMS)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역내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범되었다. GMS 프로그램은 에너지부문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국가 간 에너지 지역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총체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GMS 프로그램의 에너지 전략은 회원국 경제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최신 에너지 서비스를 모든 국가가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환경,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 등과 같은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연구 중이다.



#### (4) 특징과 평가

이러한 지역적 기구들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적 이니셔티브에서 진척되고 있는 협의의 수준은 여전히 낮고,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스템의 도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sup>81</sup>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협력체에 비해서 아시아 에너지협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협력의 범주 안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중 상당수는 녹색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조 수혜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UNESCAP은 범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교역을 촉진하고 에너지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범아시아 통합 에너지 시스템(Trans-Asia Energy System: 이하 TAES)을 제안한 바 있다.<sup>82</sup> 그러나 TAES 구상 역시 현실적인 구체화 작업에서 여러 문제점과 정치적 의지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 속도 역시 빠르지 못하다. 따라서 에너지 및 기후 변화와 관련한 신아시아 외교는 이러한 역내 에너지·기후 변화 협력을 보다 활성화 및 구체화하는데 기여하는 기제로 작동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sup>81</sup> 아시아 차원의 에너지 협력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hankan S. Karki, Michael D. Mann and Hossein Salehfa, "Energy and Environment in the ASE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nergy Policy*, Vol. 33, No. 4 (March 2005); Niklas Swanstrom, "An Asian Oil and Gas Union: Prospects and Problems," *Th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3, No. 3 (November 2005).

<sup>82</sup> 이재승, "범아시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외교전략 수립 방안: Trans-Asia Energy System(TAES)을 중심으로."

### 3. 사회·문화 교류 분야

#### 가. 의미와 중요성

신아시아 외교 추진에 있어서 사회·문화협력과 교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아시아 외교가 천명한 3대 협력의 분야를 보면 우선 경제·개발협력, 녹색성장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 교류의 강화가 포함된다. 마지막의 인적 교류 강화는 큰 범주에서 파악할 때 사회·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는 신아시아 외교의 3대 핵심 영역의 하나이다.

신아시아 외교에서 천명한 목적 외에도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과거 국가 대 국가의 대결, 그리고 냉전기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군사력, 물리적 힘이 중심이 되는 하드파워, 즉 경성 권력이 한 국가의 국력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 그리고 국가 - 사회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시기가 되면서 연성권력, 즉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소프트파워에서 더 나아가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통합, 그리고 네트워크의 힘을 더욱 강조하는 스마트파워가 강조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면서 스마트파워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를 통한 국경, 사회를 넘어선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소프트파워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 다양한 인적 교류, 상대방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국가 간, 사회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화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단기적이며 힘 혹은 경제적

이익에 기반 한 교류 관계와 달리 한번 형성되면 다양한 환경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한번 구축된 사회·문화적 교류의 기반,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상호 이해와 공감대의 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여 공통의 세계관과 인식에 기반을 둔 인식공동체를 형성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인식공동체는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상관성을 갖는데, 공통의 인식 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국제사회 혹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연대를 구성하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 강력한 연대는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군사·물리적 강압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는 특히 사회·문화 교류의 증진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이고, 반대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를 높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인식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익도 고려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아시아 외교가 추구하는 신뢰할만한 중견국가(middle power)로 부상하는데, 사회·문화 교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신아시아 외교에서 특히 사회·문화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 ASEAN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취약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은 막대한 경제력을 동원하여 ASEAN 국가 더 나아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편

으로 유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의 규모나 이들 국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보다 작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증진이라는 부분은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보다 많은 사회·문화적 협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표 II-4 ASEAN의 사회·문화부문 사업 현황(2000~2005년)

		문화 정보	AUN	환경	사회 개발	관광	2005년 계
2005년	소 계	1	2	1	2	0	6
	ASEAN자체	0	0	1	0	0	1
	한·ASEAN	1	1	0	1	0	3
	중·ASEAN	0	0	0	0	0	0
	일·ASEAN	0	0	0	0	0	0
	기타·ASEAN	0	1	0	1	0	2
2004년	소 계	26	1	3	5	0	35
	ASEAN자체	16	0	1	1	0	18
	한·ASEAN	9	1	1	1	0	12
	중·ASEAN	1	0	1	2	0	4
	일·ASEAN	0	0	0	1	0	1
	기타·ASEAN	0	0	0	0	0	0
2003년	소 계	11	1	3	12	0	27
	ASEAN자체	11	0	0	12	0	23
	한·ASEAN	0	1	2	0	0	3
	중·ASEAN	0	0	0	0	0	0
	일·ASEAN	0	0	1	0	0	1
	기타·ASEAN	0	0	0	0	0	0

		문화 정보	AUN	환경	사회 개발	관광	2005년 계
2002년	소 계	22	2	4	26	1	55
	ASEAN자체	18	2	3	24	1	48
	한·ASEAN	2	0	1	1	0	4
	중·ASEAN	2	0	0	1	0	3
	일·ASEAN	0	0	0	0	0	0
	기타·ASEAN	0	0	0	0	0	0
2001년	소계	22	4	11	11	6	54
	ASEAN자체	18	0	8	8	3	37
	한·ASEAN	1	2	1	1	1	6
	중·ASEAN	2	1	1	2	1	7
	일·ASEAN	0	0	0	0	1	1
	기타·ASEAN	1	1	1	0	0	3
2000년	소 계	32	1	3	15	1	52
	ASEAN자체	32	0	3	14	1	50
	한·ASEAN	0	0	0	0	0	0
	중·ASEAN	0	0	0	0	0	0
	일·ASEAN	0	0	0	0	0	0
	기타·ASEAN	0	1	0	1	0	2
분야별 계	소 계	114	11	25	71	8	229
	ASEAN자체	95	2	16	59	5	177
	한·ASEAN	13	5	5	4	1	28
	중·ASEAN	5	1	2	5	1	14
	일·ASEAN	0	0	1	1	1	3
	기타·ASEAN	1	3	1	2	0	7

자료: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평가와 과제,”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6), p. 75.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회·문화 교류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많은 갈등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상호 간에 오해가 축적되고 이런 오해는 종종 갈등으로 발전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풍습을

가진, 그리고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로 나뉘어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문화 교류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러한 신뢰는 결국 평화, 갈등의 해소로 이어진다. 아울러 사회·문화의 이런 중립적 입장에서의 의미와 중요성 외에 한국의 입장에서의 중요성도 존재한다. 사회·문화적 교류의 촉진을 외교적 수단으로 하여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간단히 말해 한국의 소프트파워의 증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립적 의미에서의 사회·문화 교류와 한국의 입장에서 소프트파워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다.

## 나.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 및 추세

사회·문화 교류의 범위는 매우 넓다. 사회와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는가에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의 범위가 결정되고, 사회·문화의 정의를 확장한다면 인류의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문화 교류를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정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문화 교류는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문화적 현상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기 보다는 보다 눈에 보이는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문화의 이동 수단이 되는 인적 교류에 보다 초점을 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문화적 교류라는 것은 사회와 문화적 특성의 담지자인 사람들 간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가를 검토하여 사회·문화적 교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것

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교류라고 할 때 이 말이 갖는 함의는 단순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문화의 교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문화가 서로 만나는 수단인 인적 교류라는 것은 사회·문화 교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일차원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가 목적은 아니었으나 인적 교류의 결과로 사회·문화적 교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주노동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인적 교류까지 포함할 것이다.

### (1) 세계의 사회·문화 교류 현황과 특징

사회·문화 교류를 문화의 담지자(carrier)의 이동, 즉 인적 교류란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인적 교류는 이민, 이주노동, 관광, 그리고 교육을 위한 유학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이들의 이동은 단순한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는 현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은 교통수단, 통신수단, 경제적 여유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했고, 직관적으로 이런 사람의 이동의 증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과 혼합도 증가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인적 교류라고 할 수 있는 이민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자신이 출생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억 9,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이 출생한 지역을 떠나 다른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다.

이 이주민 통계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통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는 자발적인 이주를 포함하여 난민과 이주노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00년 통계로 이주노동자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연간 8,000만 명의 사람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나들며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표 11-5 지역별 이주민 수

지역	2000년		2005년	
	백만 명	비율(%)	백만 명	비율(%)
아프리카	16.5	9.3	17.1	9
아시아	44.4	25.1	53.3	28
유럽	64.1	36.3	64.1	34
중남미	6.3	3	6.6	3
북미	40.4	22.9	44.5	23
오세아니아	5.1	2.6	5	3
전체	176.7	100	190.6	100

자료: Piyasiri Wickramasekara, "Diasporas and Development: Perspectives on Definitions and Contributions," *Perspective on Labour Migration*, No. 9 (Geneva: ILO, 2009), p. 5.

●표 11-6 전 세계 이주노동자 규모(2000년)

지역	난민 제외		난민 포함	
	백만 명	비율(%)	백만 명	비율(%)
아프리카	5.4	7	7.1	8
아시아	22.1	27	25	29
유럽	27.5	34	28.2	33
중남미	2.5	3	2.5	3
북미	20.5	25	20.5	24
오세아니아	2.9	4	2.9	3
계	80.9	100	86.3	100

자료: ILO,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2<sup>nd</sup> Session, 2004.

관광을 통해서도 문화의 교류와 전달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 관광객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문화를 자신이 관광한 국가에 남겨 놓을 수도 있으며, 또 자신의 체험을



돌아와서 주변에 재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이차적인 문화의 교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09년 한 해 거의 9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9억 명에 가까운 관광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관광객은 유럽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아시아·태평양이 뒤따르고 있다. 연간 9억 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는 비교적 관광이라는 것이 기간이 짧고 따라서 문화 교류의 심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규모의 면에서 보면 엄청난 문화적 교류가 전 세계적으로 관광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표 11-7 전 세계 관광객 수와 관광 수입

구분	여행객 수(백만 명)	관광 수입(십억 달러)
	2009년	2009년
세계	880	852
유럽	460	413.3
아시아·태평양	181.6	203.2
미주	140.1	165.2
아프리카	45.6	28.7
중동	53.2	41.8

자료: 세계관광통계 요약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http://www.tour.go.kr/stat/st\\_wsum\\_viv.asp](http://www.tour.go.kr/stat/st_wsum_viv.asp)>.

## (2) 선진 모범 사례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일본어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동남아 국가에 지일(知日) 혹은 친일(親日) 세력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보다 선진화된 일본에

서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에서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일본에서 대학교육과 그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해왔다. 이렇게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서 교육 배경과 높은 학력을 바탕으로 바로 사회의 엘리트층에 포함되었다. 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고위직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학의 교수직에 많이 편입되었다.

이렇게 육성된 인사들은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대학의 경우 자신의 일본에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일본에 우호적인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왔다. 더욱이 이런 교수들의 영향력하에서 성장한 차세대 학자군은 지도교수의 소개로 다시 일본의 장학금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동남아 국가 내 지일 혹은 친일 인사들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전략은 막대한 경제적 자원은 물론이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투자된 자금이 단기간에 효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효과를 바라보고 실시한 정책이다. 비록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일단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어떤 친일, 지일 인사를 길러내는 전략보다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일본의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 2008년 다양한 학술 지원, 학자·학생 교환 지원 사업들 중에서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적은 것이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크게 ① 문화 예술 교류 프로그램, ② 해외 일본어 교육 진흥 프로그램, ③ 일본화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표의 사업들은 이 중 일본화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일본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학자와 학생들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해외 일본학을 진흥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일본에 대한 연구 및 일본에 대한 인식, 즉 일본의 소프트파워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 II-8**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지원 사업

1. 일본학 연구기관 지원
  - 미국 내 22개 기관 지원
  -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기관 지원
  -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25개 기관 지원
  - 베이징 일본 연구센터 지원: 12명의 교수 지원, 25명 대학원생 지원, 10명의 일본인 교수 파견
2. 일본 연구 장학금
  - 시작 이후 지금까지 6,000명의 학자가 지원금을 받음
  - 2008년 한해 19개국 41명의 학자와 50명의 박사과정 학생 장기 지원
  - 18개국 26명의 학자 단기 지원
3. 일본 연구 네트워크 강화
  - 일본 연구에 관한 학술회의, 조사 지원
  - 일본에서 공부한 ASEAN 학자들의 네트워크 지원(9개 프로젝트)
4. 지식인 교환 지원
  -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의 소장학자 방문 지원(17개 장학금)
  - Keizo Obuchi 장학금 지원
5.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 아베장학금(2008년 한해 13명의 연구자 지원)
  - 장학금 프로그램
    - \* 선정된 주제에 관한 18명에게 장학금 지급
  - 38개의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시민사회 교류에 5개 프로그램 지원
  - 17개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자료: Japan Foundation 2008 연례보고서, <<http://www.jpf.go.jp/e/about/outline/ar/2008/index.html>>.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일찍부터 자신의 문화를 대외에 홍보하고 언어를 교육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화 교류를 해왔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파워를 증진해왔다. 이런 노력에는 대표적으로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영국문화원, 미국문화원,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이 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중국 역시 중국어 교육을 통하여 중국의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교육부(中國教育部)와 중국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中國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의 공동 작업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중국어 교육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이징에 공자학원총부(孔子學院總部)를 설립하고 2004년 11월에 첫 번째 공자학원을 한국에 설립했다.<sup>83</sup> 이렇게 시작된 공자학원의 역사는 2009년 6월까지 전 세계 83개 국가에 282개의 공자학원과 25개 국가에 241개의 공자교실(Confucius Classroom)을 설치하는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표 11-9 공자학원, 공자교실 현황(2009년 6월 현재)

대륙	공자학원		공자교실	
	국가 수	학원 수	국가 수	교실 수
아시아	28	70	10	27
아프리카	15	21	2	2
유럽	29	94	7	34
미주	87	11	5	176
태평양	10	2	1	2

자료: 공자학원 웹사이트, <[http://college.chinese.cn/en/node\\_1979.htm](http://college.chinese.cn/en/node_1979.htm)>.

<sup>83</sup> 서울 공자아카데미 웹사이트, <<http://www.cis.or.kr/intro/intro.htm?mn=1>>.

아울러 중국 정부는 외국의 학생들은 중국에 초청하여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데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에는 미국의 430개 학교의 교장과 교육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중국어를 배우는 미국 유학생 1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84</sup>

## 다. 아시아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과 특징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 인적 교류는 결혼이민과 은퇴이민을 포함한 포괄적 이주, 이주 보다 단기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주노동, 관광, 유학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인적 교류라기 보다는 문화적 생산품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화, TV 드라마 등의 수출입과 방영에 따른 문화적 교류 역시 최근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볼 것이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이라는 입장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 한류의 영향력과 의미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 (1) 아시아의 문화 교류 현황

#### (가) 이민

2005년 UN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9,0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중에서 5,300만 명의 이민자가 아시아로 향했다고 한다. 1970~1980년대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주로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이 많은

<sup>84</sup> “중국어 세계어로? 전 세계 500여 곳에 공자학원 설립,” 『매일경제』, 2010년 10월 10일,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47421>>.

지역으로 향했지만, 1990년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이민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이민의 유입과 유출을 동시에 겪고 있지만 역내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즉 브루나이,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이 순유입을 경험하고 있고, 중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유입과 유출이 모두 활발하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은 순유출이 순유입보다 많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85</sup> 이런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이민의 유입이나 유출을 통해서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들이 다른 사회로 지속적으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단일 민족의 신화가 보다 지배적인 국가에 순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민 중에서 특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주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의 한 보고에 의한 대략 2,500만 명의 아시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sup>86</sup> 매년 약 200만의 새로운 노동력이 자신의 모국을 떠나는 추세이며 이와 비슷한 숫자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과거에 많은 노동력이 유출되었던 반면, 현재는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노동력 유출 국가에서 해외로 나오는 노동자 수와 그 목적지는 대개 아래와 같다.

---

<sup>85</sup>- Stephen Castle, "Mi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July 2009), <[www.migrationinformation.org](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

<sup>86</sup>- ILO, "Labour migration in Asia," <<http://pstalker.com/ilo/h-flows.html>>.

표 II-10 아시아의 노동력 이동과 목적지

출신국	노동자 수	주요 목적지	연도
미얀마	1,840,000	태국	2006
태국	340,000	중동, 대만, 싱가포르,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2002
라오스	173,000	태국	2004
캄보디아	183,541	태국	2006
베트남	400,000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2005
필리핀	8,233,172	중동, 말레이시아, 일본	2006
말레이시아	250,000	일본, 대만	1995
싱가포르	150,000	-	2002
인도네시아	2,700,000	말레이시아, 중동, 대만, 싱가포르, 한국	2007
중국	530,000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2004
계	14,799,713		

자료: Graeme Hugo, "Labour Migration for Development: Best Practices in Asia and the Pacific," *ILO Asian Regional Programme on Governance of Labour Migration Working paper*, No. 17 (March 2009), p. 5.

#### (나) 관광

관광 역시 사람의 이동, 즉 인적 교류를 통해 문화가 서로 전파되고 섞이는 좋은 경로가 된다. 2009년 아시아에 유입된 관광객의 수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연간 1억 8,000만 명에 이른다. 한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여행객의 약 80%가 다른 지역이 아닌 같은 지역을 여행한다고 한다.<sup>87</sup>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약 1억 4,000만 명에 해당하는 아시아인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셈이 된다.

<sup>87</sup> UNWTO, *Tourism Highlights 2010 Edition* (Madrid: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0), p. 7 <[http://www.unwto.org/facts/eng/pdf/highlights/UNWTO\\_Highlights10\\_en\\_HR.pdf](http://www.unwto.org/facts/eng/pdf/highlights/UNWTO_Highlights10_en_HR.pdf)>.

표 II-11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유입된 해외 여행자 수

국가	해외 여행자 (도착, 천 명)		
	2007년	2008년	2009년
아·태 지역	182,046	184,044	181,189
호주	5,644	5,586	5,584
캄보디아	1,873	2,001	2,046
중국	54,720	53,049	50,875
피지	540	583	539
괌	1,225	1,142	1,053
홍콩	17,154	17,320	16,926
인도	5,082	5,283	5,109
인도네시아	5,506	6,234	6,324
일본	8,347	8,351	6,790
한국	6,448	6,891	7,818
라오스	1,142	1,295	1,239
마카오	12,942	10,610	10,402
말레이시아	20,973	22,052	23,646
몰디브	676	683	656
뉴질랜드	2,466	2,459	2,458
네팔	527	500	510
파키스탄	840	823	855
필리핀	3,092	3,139	3,017
싱가포르	7,957	7,778	7,488
스리랑카	494	438	448
대만	3,716	3,845	4,395
태국	14,464	14,584	14,145
베트남	4,229	4,236	3,747

자료: UNWTO, *Tourism Highlights 2010 Edition* (Madrid: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0), p. 7 <[http://www.unwto.org/facts/eng/pdf/highlights/UNWTO\\_Highlights10\\_en\\_HR.pdf](http://www.unwto.org/facts/eng/pdf/highlights/UNWTO_Highlights10_en_HR.pdf)>.



특히 관광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나는 문화 교류에 해당하지만, 한 사람의 여행자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양방향의 문화 전파가 일어나게 된다. 즉, 여행자가 자신은 다른 국가에 가서 그 국가의 문화를 소비하는 동시에 자신의 출신국의 문화를 여행지에 옮겨 놓게 되는 것이다. 연간 14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인이 자신의 모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문화적 경험, 그리고 그들이 남겨 놓고 오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면 한 해에도 엄청난 사회·문화적 교류가 관광을 통해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 (다) 유학

다양한 형태의 유학 역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앞서 언급한 이민, 이주노동, 관광과는 질적으로 좀 다른 형태의 사회·문화 교류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 아래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의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 국가에 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는 2000년 이래로 급속하게 증가해왔다.<sup>88</sup> 점차 세계화, 지역화의 추세가 강해지고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출신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대개는 아시아의 다른 선진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는 경향이 이런 유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학을 통한 인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경우 다른 형태의 인

---

<sup>88</sup> 이 통계는 UNESC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UNESCO의 유학에 관한 통계 자료는 완전한 자료는 아니며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학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이 누락된 국가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2배 이상의 아시아 역내 유학의 증가라는 큰 경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적 교류에 비해 보다 심도 있는 사회·문화적 교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관광의 경우 가장 피상적인 문화 교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관광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 시간 동안 관광객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는 이주해가는 국가에서 비교적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관광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학의 경우 자신이 목적지로 하는 국가에서 학교(많은 경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등록하고

표 11-12 아시아 국가의 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

국가	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몽골	120	140	324	499	645
브루나이	70	40	143	68	146
홍콩	...	2,467	3,608	6,102	7,164
마카오	...	17,453	12,611	11,741	12,498
인도네시아	...	...	...	...	2,914
일본	54,385	80,406	118,661	117,793	118,124
라오스	74	95	172	254	330
말레이시아	16,217	27,068	...	25,866	...
미얀마	...	...	...	54	...
필리핀	...	3,615	3,703	...	2,177
한국	2,828	6,822	14,273	30,214	38,372
태국	...	...	...	...	9,213
베트남	596	1,036	2,034	3,210	3,333
인도	4,004	4,452	7,624	...	...
계	78,294	143,594	163,153	195,801	194,916

\* 이 표는 모든 유학생을 반영하지 않으며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고 처리됨.

자료: UNESCO 통계, <<http://stats.uis.unesco.org/>>.

수업을 듣게 되므로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시에 수업 등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사회의 비교적 지식인층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문화적 특성까지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학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사회·문화 교류가 일어나는 채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지역협력을 통한 사회·문화 교류

개별 국가 간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에 못지않게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는 지역협력체의 틀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의 ASEAN과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ASEAN+3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와 함께 사회·문화 부분을 지역협력과 통합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ASEAN의 경우 ASEAN 통합의 세 개의 기둥 중 하나를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SEAN은 ASEAN의 통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ASEAN 각 국가 간에 사회·문화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 속에서 진정한 ASEAN 정체성이 만들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협력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에서 ASEAN은 ASEAN 각 국가의 문화와 예술은 물론 ASEAN 지역 전체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출판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 간 예술인의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sup>89</sup> 또 ASEAN 국가들끼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 ASEAN 문화정보포털(ASEAN Culture and Information Portal, <http://www.aseancultureandinformation.org/coci/>)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ASEAN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ASEAN 미디어넷(ASEAN Medianet, <http://www.aseanmedia.net>)이란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문 역시 ASEAN의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은 ASEAN의 사회·문화 교류에서 하나의 목적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ASEAN에서 교육관련 협력과 교류는 ASEAN 교육장관회의(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단위의 국가 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ASEAN에서 교육관련 교류와 협력의 목적은 ① ASEAN 국가의 국민들, 특히 젊은 층에 ASEAN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② 교육을 통해서 ASEAN 정체성을 강화하고, ③ 교육부문에 있어서 ASEAN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며, ④ ASEAN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대학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ASEAN은 ASEAN 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ies Network: 이하 AUN)를 ASEAN 사무국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SEAN 국가의 주요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기구는 ASEAN 내는 물론 ASEAN과 ASEAN 외부의 주요 학술 교류 및 대학 간 교류를 담당한다. 특별히 AUN

---

<sup>89</sup>- ASEAN 웹사이트, <<http://www.aseansec.org/19598.htm>>.

은 ① ASEAN 학자, 과학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② 지역 내 학술적,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며, ③ ASEAN 학술공동체 내에 정보를 확산하고, ④ 지역정체성과 ASEAN 의식(ASEANness)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9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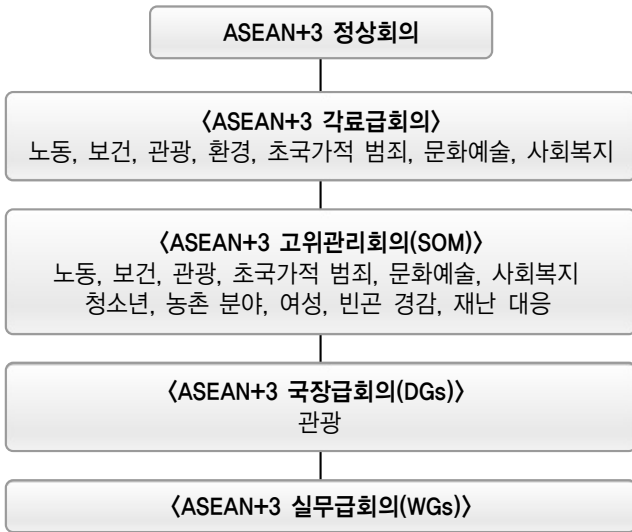
또한, ASEAN은 ASEAN의 청년들이 ASEAN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ASEAN 국가들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ASEAN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ASEAN 청소년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 on Youth)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ASEAN 청소년 관련 협력은 특별히 ① ASEAN에 대한 인식과 시민적 책임의식의 고양, ② ASEAN 청년의 고용 증진, ③ 정보 교환 및 파트너십의 증진 등을 목표로 ASEAN 청소년의 교류 포털인 Youth@ASEAN(<http://www.aseanyouth.org/>)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ASEAN 내 청년 교류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른 ASEAN 국가를 체험할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 등 청년 교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ASEAN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 차원에서도 사회·문화 교류는 동아시아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ASEAN+3 지역협력은 정상회의 밑에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관련 장관회의를 설치하고 매년 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중요 교류 사업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장관회의는 그 산하에 다양한 등급의 국가 간 회의를 두어 사회·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

<sup>90</sup>- ASEAN 웹사이트, <<http://www.aseansec.org/19600.htm>>.

그림 11-9 사회·문화부문 관련 ASEAN+3 조직도



1997년부터 시작된 ASEAN+3 지역협력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EAVG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2001년 EASG가 조직되어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협력 사업들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협력 사업들은 장기 9개, 단기 17개로 총 26개 사업인데, 여기에는 총 7개의 사회, 문화, 교육 관련 협력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부터 기존의 ASEAN+3 지역 협력에 덧붙여 생긴 EAS에서도 사회·문화협력이 폭넓게 정의되어 정상과 그 하위 관료들 간에 논의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EAS에서는 좁은 범위의 문화뿐만 아니라 관심의 범위를 넓혀 질병, 환경, 빈곤 문제까지 모두 사회·문화적 교류에 포함시키는 협력의 구상을 가지고 있다.

표 II-13 ASEAN+3의 협력 사업

		내용
단기 협력 조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li> <li>○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지위 및 특혜조치 부여</li> <li>○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확대를 위한 투자 유인 환경 조성</li> <li>○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설립</li> <li>○성장지대 내 자원·인프라 공동 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참여 장려</li> <li>○인프라, IT, 인적자원 개발 등 3개 우선분야 지원 및 협력 제공</li> <li>○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협력(FDI 및 전략적 제휴)</li> <li>○인터넷 IT 공동개발 및 통신 인프라 구축</li> </ul>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적, 마약거래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li> <li>○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li> </ul>
	사회,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 감소 프로그램 수립</li> <li>○기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조</li> <li>○포괄적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li> <li>○동아시아정체성 함양을 위해 문화, 교육기관과의 공동 노력</li> <li>○예술·문화재·유산의 보존 위한 네트워크 증진 및 전문가 교류</li> <li>○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li> </ul>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시아 포럼 설립</li> </ul>
	중·장기 협력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li> <li>○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확대</li> <li>○ASEAN 투자지대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시아 차입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 설립</li> <li>○금융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역내 긴밀한 환율공조체제 추진</li> </ul>
	환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정책 및 전략 기본방향 수립 및 범 ASEAN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형태의 이행계획 수립</li> <li>○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해양환경협력 증진</li> </ul>
	사회,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참여 및 국가-시민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공조에 있어서 NGO와 긴밀한 협력</li> </ul>
	제도	○EAS

표 II-14 EAS 고위관료회의에 따른 문화 및 인적 개발 협력 사업

협력 분야	우선 현안	담당 기구	비고
전염병	조류 독감	AHMM & SOMHD <sup>1)</sup>	
환경 보호	자연재해 경감	AMME & ASOEN <sup>2)</sup> AMMH <sup>3)</sup>	
문화 교류	교육	AMCA & SOMCA <sup>4)</sup> COCI <sup>5)</sup> ASED & AUN <sup>6)</sup>	교육 사업은 인적 자원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임.
인적 교류	교육	ASED & AUN	
빈곤 감소		AMRDPE & SOMRDPE <sup>7)</sup>	빈곤 감소는 17개 협력 분야의 단기 권고안에 역시 포함됨.

- 주: 1)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Health Department  
 2) ASEAN Ministers' Meeting on the Environment & ASEAN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3) ASEAN Ministers' Meeting on Haze  
 4) ASEAN Ministers' Meeting on Culture and Art &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Culture and Art  
 5) ASEAN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  
 6)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 ASEAN University Network  
 7) ASEAN Ministers o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 (3)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

한류(韓流)는 1999년 중국의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예인들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의 유행을 경계하는 뜻으로 처음 사용한 말이었다. 그래서 한류는 그와 음이 같은 '한류(寒流)'를 함유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말이다. 이미 대만에는 '하한주(哈韓族)'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의미 역시 '한(韓)'



은 ‘한(寒)’과 통하는 말로서 말라리아에 걸려 추워서 떠는 열병환자라는 뜻을 지닌다. 일본의 ‘일(日)’을 태양과 관련시킨 ‘하르주(哈日族)’라는 말이 열사병에 걸린 환자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겨난 말이다.<sup>91</sup>

표 II-15 세계 및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세계시장	1,518.7	1,597.7	1,680.7	2,165.7	2,790.4	3,595.4
국내시장	39.2	44.4	48.6	78.3	126.1	203.1
한국 점유율	2.6%	2.8%	2.9%	3.6%	4.5%	5.6%

자료: 박재복,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68.

한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세계 시장의 약 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여 년이 지난 2015년 이후에는 약 5%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화 산업의 경우 1998년 ‘쉬리’의 성공 이후 대형 히트작이 연이어 출현했다. 2004년 영화 ‘실미도’가 최초로 1,000만 관객동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태극기 휘날리며’는 1,175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기록을 경신했다. 그 후 ‘왕의 남자’가 1,230만의 관객기록을 세웠으며, ‘괴물’은 1,298만의 관객으로 그 기록을 다시 돌파하였다. 한국 영화의 인기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한국 영화 점유율(매출기준)은 2003년 50%를 넘어섰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60%까지 치솟았다. 세계적으로 자국 영화 점유

<sup>91</sup> 유상철 외, 『한류 DNA의 비밀: 소프트파워, 소프트 코리아의 현장을 찾아서』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p. 1.

율이 높은 프랑스나 일본도 30~40%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기록이다.<sup>92</sup>

표 II-16 한국 영화 수출 실적 추이(1998~2005년)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액	3,379	6,462	7,357	11,250	14,952	30,979	58,285	75,995
증가율	-	94%	18%	59%	33%	107%	88%	30%
평균수출가	93	80	186	110	112	189	300	376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또한 해외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에만 전 세계 62개국에 총 194편의 영화를 수출해 5,828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무려 280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도 2003년의 107%, 2004년의 88%에 달해서 그 위세를 구가하고 있다. 평균 수출가도 2004년 편당 평균 30만 달러, 2005년 37만 6,000달러에 달한다. 한국 영화는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은 아니다. 한국 영화는 세계 3대 국제영화제에서 지난 5년간 6개의 주요 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표 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한국 영화의 수출은 동아시아 지역(일본, 태국, 대만, 중국, 홍콩 등)에 편중되어 있다. 2004년에는 75.7%에 달하고, 2005년에는 85.9%에 달한다. 특히 일본에 수출이 편중되어 2004년에는 69.3%, 2005년에는 79.4%에 이른다.

92. 이안재, “한류 열풍의 해부,” 김상배 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p. 51.

● 표 II-17 주요 8개국 국가별 수출 현황(2003~2005년)

(단위: 천 달러)

	일본	미국	프랑스	태국	독일	대만	중국	홍콩	기타	계
2003	13,893 (44.8%)	4,486 (14.5%)	709 (2.3%)	1,449 (4.7%)	1,909 (6.2%)	907 (2.9%)	806 (2.6%)	834 (2.7%)	5,988 (19.3%)	30,979 (100%)
2004	40,401 (69.3%)	2,361 (4.0%)	2,084 (3.6%)	1,772 (3.0%)	1,558 (2.7%)	1,069 (1.8%)	206 (0.4%)	702 (1.2%)	8,132 (14.0%)	58,285 (100%)
2005	60,323 (79.4%)	2,014 (2.7%)	1,505 (2.0%)	1,520 (2.0%)	1,237 (1.6%)	997 (1.3%)	530 (0.7%)	1,145 (1.5%)	6,722 (8.8%)	75,995 (10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할리우드 영화 평균 제작비의 10분의 1, 일본 드라마 평균 제작비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자본의 한국 영화 산업이 이러한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2003년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의 편당 영화제작비 차이는 미국이 1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4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제작비도 증가하고 있다. <표 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까지는 총 500~600억 원 정도에 머물던 연간 총제작비가 1999년을 기점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1년 사이에 75%나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에는 한 편당 총제작비 40억 원을 넘어섰다.<sup>93</sup>

한편, 한류 열풍의 일등공신인 TV드라마의 경우도 ‘드라마 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적을 보여 주었다. 1990년대 이후 ‘사랑이 뭐길래(1992)’, ‘모래시계(1995)’, ‘첫사랑(1997)’, ‘허준(2000)’, ‘대장금(2004)’, ‘주몽(2006)’ 등과 같이 시청률 50%이상을 기록한 작품이 다수 등장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국내 드라마의 해외

<sup>93</sup> 양종희·김우식·이호영·최항섭, 『한국의 문화산업체계』 (서울: 지식마당, 2006), p. 188.

표 II-18 한국 영화의 제작편수 및 제작비(1996~2005년)

(단위: 억 원)

	순제작비 (A)	마케팅비 (P&A) (B)	총제작비 (A+B)	제작편수	연간 총제작비 (추산)
1996	9.0	1.0	10.0	65	650.0
1997	11.0	2.0	13.0	59	767.0
1998	12.0	3.0	15.0	43	645.0
1999	14.0	5.0	19.0	49	931.0
2000	15.0	6.5	21.5	59	1,268.5
2001	16.2	9.3	25.5	65	1,657.5
2002	24.5	12.7	37.2	78	2,901.6
2003	28.4	13.2	41.6	80	3,328.0
2004	28.0	13.6	41.6	82	3,411.2
2005	27.3	12.6	39.9	87	3,471.3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수출이 급증했다. <표 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던 1990년대 중반의 추세에 비해서 2002년에 들어서면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게 되고, 이후 그 격차를 더욱 벌이게 된다. 2004년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액은 7,0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2000년 대비 5.5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액 증가는 수출편수의 증가와 함께 편당 수출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다. 드라마 수출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2004년 NHK 방송에서 20%의 시청률을 기록한 ‘겨울연가’의 열풍이다.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배용준을 ‘윤사마’로 부르며 일으킨 열풍은 한류의 바람을 거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겨울연가’ 한 편의 경제적 효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만 2조 3,269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이다.<sup>94</sup>

94. 유상철 외, 『한류 DNA의 비밀: 소프트파워, 소프트 코리아의 현장을 찾아서』, p. 20.

○ 표 II-19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1995~2004년)

(단위: 천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	42,218	63,904	57,278	27,036	28,732	29,093	20,442	25,111	28,062	31,096
수출	5,536	5,996	8,318	10,017	12,736	13,111	18,920	28,813	42,315	71,461

자료: 문화관광부,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박재복,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p. 84에서 재인용.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드라마 수출이 주로 대만,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표 II-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의 경우 이들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나라들도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이고, 미국과 독일은 2.4%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류가 동아시아 현상임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2001년 119만 달러에 9.7%의 점유율, 2002년 231만 달러에 10.8%의 점유율, 2003년 628만 달러에 19.0%의 점유율, 그리고 2004년 3,60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sup>95</sup> 한편 애니메이션 분야의 해외 수출도 2002년에는 70만 달러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500만 달러에 달하고, 2004년에는 6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요 수출국도 2002년에는 동남아 국가들이던 것이 2003년 이후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한류 열풍의 또 다른 주역인 음악 산업도 최근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국내 음악 산업은 지난 수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로 심각한 침체를 겪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저작권법

<sup>95</sup> 위의 책, p. 90.

표 11-20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주요 수출국(2003년)

국가	대만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	미국
점유율	24.5%	19.0%	18.6%	3.3%	3.3%	2.6%	1.7%	1.2%	1.2%	1.0%	0.4%

자료: 『주간조선』, 2004년 3월 11일.

을 강화하려 하자 음악서비스의 유료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DMB 등 신규매체의 등장에 따라 소비채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SKT, KTF, LG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유료 음악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또 하나의 기회는 해외 시장에 있다. 가수 ‘보아’의 성공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류열풍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 무대에 선 한류 스타 ‘비’의 성공을 놓고 국내에서는 이제 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가는 징표라는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런 한류의 성공에서 중요한 점은 한류의 부상이 동아시아인들에게 일정한 정도로 네트워킹의 요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소비되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교류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젊은 층에서 소비되는 대중문화는 자국 문화와 서구 문화, 또는 여타 동아시아 문화가 복합된 형태였다. 이렇게 각 지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뒤섞이고 엇갈리는 과정에서 한류의 대중문화가 수용된 것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의 시청자들은 유사한 산업화의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여타 동아시아 지역의 영화나 TV드라마를 보면서 일종의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름대로 ‘즐길만한 시차’<sup>96</sup>로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서구 국가들보다는 이웃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준거집단으로 삼고자 하는 막연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류의 성공은 한국인의 손을 거친 서구 문화에 대한 동아시아인들의 심정적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류 현상을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문화 변환’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 라. 추진방안

2009년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발표 이후 신아시아 외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신아시아 외교의 3대 축의 하나인 사회·문화협력 및 인적 교류의 활성화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신아시아 외교의 사회·문화협력 사업은 주로 가장 핵심 대상이 된 ASEAN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문화협력 중에서도 특히 인적 교류 분야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인적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 및 교류만이 ASEAN 지역과 공감대를 높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 대상 국가에 대한 지원은 물적 지원만을 해놓고 그치는 다른 국가들의 협력 사업과 달리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한국인이 뛰어 들어서 협력 대상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통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sup>96</sup>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머리말.

지금까지 신아시아 외교에서 ASEAN을 대상으로 행해진 사업들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원을 추가로 설치하여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 사업에서 시작하여 청년봉사단 규모의 확장, 월드프렌즈코리아를 통해 1만 명 규모의 IT 지원 인력을 동남아에 파견하고, ASEAN 협력 기금을 200만 달러 추가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 ASEAN의 유능한 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국비장학생의 규모 역시 확대되었다.

향후 신아시아 외교에서 사회·문화협력 역시 가장 일차적으로는 인적 교류 분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적 교류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차세대의 인적 교류이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간의 아시아적 유대관계는 향후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이 교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에 큰 변수가 된다.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선입견이 보다 적은 시기에 다양한 국가들의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도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이 청소년들이 자라나 사회의 핵심 세력이 되었을 때 청소년기의 이러한 경험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아시아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기반이 되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사회·문화협력에서 보다 강조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교육이다. 한류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21>에서 보듯이 2006년에서 2010년 3월까지 4년이 안 된 기간 동안 국내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모든 나라에서 감소 없이 순증가를 기록했다.

표 II-21 국내 아시아 유학생 수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3월)
중국*	25,033	34,856	44,171	51,908	55,538
베트남	1,707	2,281	2,393	2,499	2,627
일본	1,025	1,034	1,044	1,118	1,257
몽골	824	1,193	1,717	2,241	2,516
우즈베키스탄	265	486	470	438	451
인도	396	463	533	610	643
말레이시아	284	356	376	441	497
방글라데시	271	317	386	491	531
네팔	250	292	328	366	376
파키스탄	165	269	319	326	371
계	30,220	41,547	51,737	60,438	64,807

\*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은 한국에게는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며 향후 이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자리 잡았을 때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소프트파워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고려해보면 이들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많은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I  
II  
III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장학금의 기회는 적지 않게 있지만, 이러한 기회에 대한 정보가 실제 수요자와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한자리에 모아 관리하는 일종의 포털이 영문으로 제공된다면 한국에서 투여하는 노력과 아시아 국가 학생들의 희망사항이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로 학생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빈곤한 국가들, 교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직접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역할도 고려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학교, 교실, 교육자재들이 많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런 국가들에게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 교실, 교육자재들이 한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학교에서 공부한 개도국 학생들에게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경우 지식인 학살의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담당할 지식인 계층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이런 국가들은 대학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역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가르칠 교원의 수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두 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지만, 한국어 교수요원을 찾지 못하여 한국어 강좌를 폐지한 일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 중 매우 시급한 것은 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준비이다.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문화 교류는 급증하고 있으나 매우 산발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별 국가, 국가 내 정부의 이니셔티브, 민간 차원의 이니셔티브들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는 상태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중복적인 사업 등으로 인해 재원만 낭비되고 투입된 재원에 비해 실질적 효과는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조정제도 혹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다자기구 내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협력 및 교류의 경험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제도적 차원의 정비 및 준비를 한다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아시아 외교 하의 사회·문화협력은 지금까지 대부분 ASEAN에만 집중되어 왔다. 중앙아시아와 ‘알타이 문화공동체’에 관한 아이디어가 제기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지역에 대한 뚜렷한 사회·문화협력방안은 제기되고 있지 않다. ASEAN과의 사회·문화협력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아시아 외교가 지향하는 모든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관계 강화라는 목표에 비추어 다른 지역과의 문화 교류 역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문화 교류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은 정부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역시 그 역할을 담당할 민간부

문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류의 방향 설정과 실제 집행에 있어서 시민 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문화, 인적 교류의 올바른 방향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인적 교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국내적 인 사항들도 있을 수 있다. 우선은 한국 내 외국인 신부의 증가, 이주 노동자의 유입,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해외 이주 및 관광, 유학이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 제도,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인권이 종종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외부에 나가서 아무리 사회·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그리고 이를 통한 소프트파워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선의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 수많은 협력 사업과 그에 따른 한국의 좋은 이미지 축적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무시, 외국인 신부 살해와 같은 좋지 않은 한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일시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에 대한 협력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발맞추어 국내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차원의 보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신아시아 외교 대상 지역의 입장 및 협력방안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요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외교 역량 투입과 주변 4국 등 중점 외교 대상 지역에 부가된 지역에 대한 외교의 확충이라 할 수 있는 바, 본 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논의된 분야별 신아시아 외교 추진방안을 대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지역을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로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집합적 국가군 또는 대표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동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시대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이 공산화되어 있었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과거에 월남을 지원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였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대상 지역에서 다소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을 포함해서 ASEAN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경제 발전에 매진하여 경제적 역동성을 보임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날로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각국은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는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단일 국가로서는 국제적 영향력을 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ASEAN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일찍 출범한 지역협력체인데서 제도화가 가장 진전된 기구이므로, 동남아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은 ASEAN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아시아 외교 추진 대상 지역으로서의 동남아시아를 분석함에 있어 ASEAN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중앙아시아는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독자적 존재성을 보여줄 수 없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독립국가의 건설과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국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원유 가격의 상승과 자원 확보 경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아시아 대상 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는 경제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서남아시아에 대한 신아시아 외교 추진은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인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오세아니아를 아시아의 일부분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출범한 EAS에 호주가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점이 시사하듯이 호주는 아시아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신아시아 외교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도 호주를 신아시아 외교 대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4대 대상 지역에 대한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방안을 앞의 장에서 분석된 3대 분야별로 제시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3대 분야 이외에 추가해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또한, 신아시아 외교 추진 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을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동남아시아

## 가. 동남아시아의 의미와 중요성

### (1) 동남아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ASEAN 국가들은 모두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지리상 거리가 가까웠으나 독립 직후에는 국민국가 건설 등 국내적 과제에 매몰되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따라서 독립 직후 초기 유일한 ASEAN 국가와의 관계는 1949년 필리핀과의 수교, 그리고 필리핀, 태국의 한국전 파병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전쟁 후 동아시아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ASEAN 관계는 냉전의 대치 상황 속에서 동남아시아 일부가 한국과 같은 편으로 간접적으로 묶이게 되고 이어 한반도에서 정통성 경쟁을 위해 남북의 수교 경쟁이 시작되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남한은 1960~1970년 기간 동안 98개국(전체 수교국의 52%), 북한은 같은 기간 83개국(전체 수교국의 51.8%)의 국가와 수교를 맺는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은 특히 197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sup>97</sup>

이러한 수교 경쟁은 냉전이 끝남을 계기로 막을 내리고 한국과 ASEAN의 관계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후 일본 제조업의 동남아 진출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관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한국의 대ASEAN 직접투자과 무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긴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작이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지역

<sup>97</sup> 이 숫자는 국가통계 데이터베이스인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한 수치임.

● 표 III-1 남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교연도

국가	남한	북한	국가	남한	북한
브루나이	1984	1999	미얀마	1975 (83) 1989	1975 (83) 2007
캄보디아	1970 (75) 1997	1964	필리핀	1949	2000
인도네시아	1966, 1973	1964	싱가포르	1975	1975
라오스	1974 (75) 1995	1974	태국	1958	1975
말레이시아	1960	1973	베트남	1956 (75) 1992	1950

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한·ASEAN 관계에 있어서 일대의 분수령을 만들었는데, 이전의 관계가 주로 수동적이거나 외부의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그리고 단기적 이익에 주목하여 형성된 것인 반면, 1990년대 이후 한·ASEAN 관계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양상을 보인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동남아 경제와 동북아 경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등장했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표 III-2 한·ASEAN 간 관계 발전 주요 일지

연 도	내 용
1989년	ASEAN의 부분 대화 상대국 지위 획득
1991년	ASEAN의 전면 대화 상대국 지위 획득
1994년	ASEAN 지역포럼(ARF) 가입
1997년	ASEAN+3 비공식 정상회의에 초청됨
2004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가입 대화 상대국 15주년 기념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포괄적 협력 동반자 선언 행동 계획 발표
2005년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이에 따라서 한국은 처음으로 ASEAN 국가들과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단위에 속한 국가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지역협력의 추동력을 제공한 EAVG, EASG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요 이정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심국가 역할을 했다.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은 다른 분야와 달리 구체적 협력 사업 등을 적시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실험 문제와 한반도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은 ASEAN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로 한국은 ASEAN의 통합 노력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2009년 6월에 있었던 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모두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고, 특히 6월의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한 우려를 담은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며, 6자회담의 당사국이 모두 포함된 ARF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ASEAN의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은 ASEAN의 통합 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지속 표명해왔으며, ASEAN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ASEAN 통합이니셔티브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안보 분야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테러, 해적, 마약밀매, 인신매매, 돈세탁, 무기밀매, 국제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자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무역, 투자, ODA 등에서 ASEAN 국가와 상당히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등 새로 부상하는 경제적인 이슈들에서도 ASEAN은 한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SEAN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연 902억 달러), 2위 투자 대상

지역(연 58억 달러), 2위 건설수주 시장(연 91억 달러)이고 한국의 ODA 수혜 상위 10개국 가운데 5개국이 ASEAN 국가일 정도로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98</sup> LNG, 원유, 유연탄, 나프타, 동괴, 병커 C유, 동광, 펄프 등은 ASEAN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며, 이들 품목이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sup>99</sup> 이 품목들은 산업화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종류인 점을 감안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원이 풍부한 ASEAN 지역이 한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ASEAN 국가들의 경우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인프라 건설 등의 수요가 자연히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부문에 한국의 진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한국의 국가적 경제이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산업화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중의 모순된 과제를 가진 ASEAN 국가들의 경우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므로 이 부분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크고, 아직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개발과 경제 성장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수요가 많으므로 협력하기에 좋은 상대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과 ASEAN의 주요 관심사항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교역의 확대, 개발협력,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그리고 녹색성장 등의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한·ASEAN 간의 주요 협력 상황은 양자 간의 무역 확대에

<sup>98</sup> 한국수출입은행, “2007년도 우리나라 ODA 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http://www.koreaexim.go.kr/kr/file/311/081112\\_07.pdf](http://www.koreaexim.go.kr/kr/file/311/081112_07.pdf)>.

<sup>99</sup> 박변순, “한국-ASEAN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6), p. 38.

대해서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협력체계 건설에서 협력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한·ASEAN FTA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ASEAN과 2006년 상품 분야 협정, 2007년 서비스 분야 협정에 서명하고, 상품 분야 협정은 2007년, 서비스 분야 협정은 2009년에 정식 발표되었고, 상품 분야 FTA 발효 후 무역이 약 23%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9년 한·ASEAN 간 투자부문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한·ASEAN 간의 FTA가 최종 마무리 되었고, 특히 투자협정에서는 서비스 분야 투자협정상 보호조항을 적용하고, 국내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를 보호하는 등 그간 ASEAN이 체결한 ASEAN-일본 FTA, ASEAN-호주·뉴질랜드 투자협정에 비해서 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며, 중·ASEAN 투자협정에 비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개발협력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ASEAN 지역에 대한 ODA를 지속 확대해가고 있다.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ASEAN에 공여하는 ODA의 규모를 연 2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4억 달러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SEAN 저개발 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ASEAN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연수생의 규모를 앞으로 7년간 연 1천명 수준으로 확대, 총 7,000명을 초청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ASEAN 양자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협력 차원의 경제협력에서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ASEAN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바, 특히 EAFTA의 창설, 아시아 채권 시장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이하 ABMI)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신용보



증투자기구(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이하 CGIM)에서 협력하고 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 한·ASEAN 간의 협력은 ASEAN 국가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은 이미 물 관리, 저탄소 도시, 신재생에너지, 산림, 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 등 5개 중점 협력 분야에 1억 달러를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에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수요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도 한류의 진원지가 ASEAN 국가들이며, 이런 교류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고, 사회·문화 분야 교류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ASEAN과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ASEAN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300만 명을 넘어 전체 해외 출국자의 30% 이상이 ASEAN 국가로 향하고 있고, ASEAN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도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sup>100</sup> 이를 통해 ASEAN의 문화가 한국에 유입되는 동남아류(Southeast Asian Wav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적 교류에서 단순 교류인 관광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적으로 한국과 ASEAN 간의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학생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7년 현재 한국에 1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는 ASEAN 국가는 6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으로 이 국가들에서 온 학생의 수가 4,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에서 ASEAN 국가로 어학연수, 학위과정 이수

---

<sup>100</sup>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 ASEAN+3와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8), pp. 32~33.

등의 목적으로 떠나는 학생 수가 2007년 1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숫자는 불과 6년 전 4,000여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sup>101</sup> 특히, ASEAN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라 고등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한류의 영향, 한국 대학의 유치 노력 등으로 ASEAN 출신 학생들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간 학생들이 가지는 한국에 대한 호감은 이들이 각 국가의 엘리트로 성장할 미래에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는 한국의 문화가 ASEAN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문화상품이 ASEAN 국가에서 많이 소비가 되는 한류를 타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ASEAN 국가와 협력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앞으로 더욱 확대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미 한국과 ASEAN은 중국이나 일본이 ASEAN과 진행한 사회·문화부문 협력 사업에 비해 훨씬 양적으로 많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0~2005년 사이에 ASEAN과 이루어진 문화정보, 교육부문의 대학 간 교류, 환경 문제, 사회 개발, 관광 등의 사회·문화협력에서 한·ASEAN 간에는 모두 28건의 협력 사업이 진행된 반면, 중국과 ASEAN 사이에는 14건, 일본과 ASEAN 사이에는 3건의 협력 사업만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다.<sup>102</sup>

이러한 추진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당시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와 관련하여 기존 300만 달러 수준의 한·ASEAN 협력 기금을 200만 달러 증액하여 500만 달러 수준으로 조성할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증액된 200만

<sup>101</sup> 위의 글, pp. 32~33.

<sup>102</sup>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 평가와 과제,” 외교 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6), p. 75.

달리는 전적으로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만 쓸 것을 명시하였다.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라는 타이틀 하에 한국에서 ASEAN 국가로 1만 명 규모의 IT 기술 전수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것을 약속하고, 더불어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lobal Korea Scholarship)을 통해 현행 연간 100여 명에 정도 수준인 ASEAN 국가 출신의 국비 장학생 규모를 2012년까지 두 배인 200명 규모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2) 동남아시아의 대한민국 정책

동남아시아의 대한민국 정책은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라는 맥락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ASEAN의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ASEAN은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에 있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변함없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 한·ASEAN 정상회의 공동선언, 2002년 ASEAN+3 정상회의 의장선언, 2004년 ASEAN+3 정상회의 의장선언, 2005년 ASEAN+3 정상회의 의장선언, 2007년 ASEAN+3 정상회의 의장선언 등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아울러 ASEAN은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협력기구인 ARF, 그리고 최근 구성된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이하 ADMM+)를 주도하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ASEAN 지역 국가들의 입장에서 지역의 안보, 나아가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란 문제는 그들의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 등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반면 ASEAN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남한의 동시 수교 국가들이다. 적어도 1970년대 까지 북한은 외교적으로 동남아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많은 수가 가입된 비동맹회의의 영향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동남아 지역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성으로 인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대북한 정책 및 입장 역시 동남아 국가들의 대한국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 수교 국가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을 크게 자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남아 국가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입지는 외교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좁은 것이 사실이다. 양자적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 우선순위는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 더 가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는 점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크게 작용한다. 반면 일본은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꾸준한 경제관계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후 동남아에 쏟아져 들어온 일본 자본이 동남아 경제 성장을 추동했다는 점에 의해서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동남아에서의 입지,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은 훨씬 협소한 것이 최근까지의 경향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협력 이후, 그리고 신아시아 외교 추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는 실정이며 외교적 우선순위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자신들과 비교적 유사한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ASEAN+3 등의 장에서 ASEAN과 힘을 합쳐 공동의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ASEAN 국가들에게는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처럼 위협적이지 않으며, 역사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협력 대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한국 역시 보다 큰 중국이나 일본의 일방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의 힘을 가진 ASEAN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서 강대국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자(casting vote or veto power), 양자 사이의 심각한 충돌을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조정자(coordinator), ASEAN 국가들을 이끌고 중국과 일본처럼 역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자(leader)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ASEAN이 좋은 협력 상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ASEAN의 대한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한국의 대ASEAN 입장은 수렴하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대상은 매우 좋은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특히 대륙부 동남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은 한국의 지원, 무엇보다도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모범으로 삼거나 발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국과 일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의 규모와 국토, 인구의 크기 등에서, 그리고 과거 중국과 불편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발전 모델로 삼기

에는 한계가 있다. 유사하게 일본의 경우도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모델로 삼기에는 경제의 규모와 발전 정도의 차이에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다 최근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자신들과 보다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한국이 이들 국가들에게는 좋은 발전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지원과 발전 경험의 공유를 원하고 있다.

## 나. 분야별 입장 및 협력방안

### (1) 경제협력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도 동남아는 한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이며, 가장 중요하고 흑자를 내는 무역 상대이다. 또한 한국과 ASEAN이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부문 진출도 활발해서 중동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며, 한국의 해외 투자의 2대 대상 지역이며,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이 확고부동한 1위의 해외 투자국이다. 여기에 동남아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하면 동남아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같은 자원부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처럼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처럼 향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이다. 더욱이 동남아가 ASEAN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통합을 고려하면 그 잠재력은 더욱 커진다. ASEAN 경제가 통합될 경우 GDP 1조 2,000억, 인구 약 6억의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모두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03</sup>

표 III-3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률(2005~2011년)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동남아 전체	5.8	6.1	6.5	4.3	1.2	5.1	5.3
브루나이	0.4	4.4	0.2	-1.9	-1.2	1.1	1.5
캄보디아	13.3	10.8	10.2	6.7	-2.0	4.5	6.0
인도네시아	5.7	5.5	6.3	6.0	4.5	5.5	6.0
라오스	6.8	8.7	7.8	7.2	6.5	7.0	7.5
말레이시아	5.3	5.8	6.2	4.6	-1.7	5.3	5.0
미얀마	4.5	7.0	5.5	3.6	4.4	5.2	5.5
필리핀	5.0	5.3	7.1	3.8	0.9	3.8	4.6
싱가포르	7.6	8.7	8.2	1.4	-2.0	6.3	5.0
태국	4.6	5.1	4.9	2.5	-2.3	4.0	4.5
베트남	8.4	8.2	8.5	6.2	5.3	6.5	6.8

자료: ADB Statistics,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 Macroeconomic Management Beyond the Crisis*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2010) <<http://www.adb.org/Documents/Books/ADO/2010/default.asp>>.

동남아 경제에 대해 언급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경제적 다양성 혹은 역내 경제적 격차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발전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른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도 차별

<sup>103</sup>.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 (Washington, D.C.: World Bank, 2010), p. 6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GEP2010/Resources/GEP2010Summer2010-EAPAnnex.pdf>>.

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크게 동남아 경제를 나눈다면 선진국 혹은 선진국에 근접한 경제,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직 후진적 경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로 나눌 수 있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이미 선진국 경제이거나 동남아에서는 비교적 산업화되고 부유한 편에 속한다. 개발도상국을 꼽으라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정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아직 후진 경제이지만 잠재력이 큰 경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4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 개관

국가	면적	인구	GDP	GDP/C	무역액*	해외 투자
	km <sup>2</sup>	천명	백만 달러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브루나이	5,765	406.2	14,146.7	34,827.0	9,568.2	176.8
캄보디아	181,035	14,957.8	10,368.2	693.2	8,886.7	530.2
인도네시아	1,860,360	231,369.5	546,527.0	2,362.1	213,339.2	4,876.8
라오스	236,800	5,922.1	5,579.2	942.1	2,962.1	318.6
말레이시아	330,252	28,306.7	193,107.7	6,822.1	280,221.4	1,381.0
미얀마	676,577	59,534.3	24,972.8	419.5	10,191.3	578.6
필리핀	300,000	92,226.6	161,357.6	1,749.6	83,868.6	1,948.0
싱가포르	710	4,987.6	182,701.7	36,631.2	515,617.1	16,256.2
태국	513,120	66,903.0	264,322.8	3,950.8	286,266.8	5,956.9
베트남	331,051	86,024.6	96,317.1	1,104.2	125,921.9	7,600.0
ASEAN	4,435,670	590,638.3	1,499,400.8	2,533.5	1,536,843.3	39,623.0

\* 추정치

자료: ASEAN 홈페이지, <<http://www.aseansec.org/19226.htm>>.

ASEAN 국가들의 경제에 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안은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이하 AFTA)로 요약되는 ASEAN의 경제통합 추진이다. ASEAN은 2010년 베트남 정상회

의를 기해 ASEAN의 경제부문 통합의 성과를 담은 ‘ASEAN 경제공동체 성적표(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를 발표했다.<sup>104</sup> 이 성적표에 따르면 2010년 ASEAN 선발 6개국 간에 공동 유효 특혜관세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고 ASEAN 국가 간 2009년 평균 관세는 2000년의 4.4%에서 하락하여 0.9%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9년 12월 현재 ASEAN 경제공동체 관련 법적 조치들 가운데 73%가 이미 효력을 발휘(총 124개 중 91개)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의 50%에 비해서 2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ASEAN 경제공동체 건설에 있어 4대 부분 평균 73.6%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단일 시장과 생산은 82%,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부문에서는 50%, 평등한 경제발전부문에서는 100%,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부문에서는 100%의 목표치가 달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ASEAN의 경제통합을 더욱 확대하면 ASEAN+3 국가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경제협력이 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ASEAN+3 지역협력은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가장 주력으로 추진해왔다. 1997년 역내 국가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유사시 IMF나 강대국 등 동아시아 지역 외부 세력이 아닌 내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CMIM이 경제협력 중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 간 스왑협정으로 시작된 CMI는 보다 큰 규모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08년 다자화를 추진하여 현재는 CMIM의 형태를 띠며, ASEAN과 동북아 3국이 일정한 액수의 출연을 약정한 형태로까지 발전한 상황이다. 이와 더

---

<sup>104</sup>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http://www.asean.org/publications/AEC%20Scorecard.pdf>>.

불어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외환보유고를 효과적으로 역내에서 이용하기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ABMI)도 추진되고 있으며,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신용보증과 투자 메커니즘(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도 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경제협력이란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는 다소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ASEAN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응하고, 중국과 일본이 ASEAN을 놓고 벌이는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경쟁적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인 경제 외교의 기조 측면에서 이런 접근법은 뒤바뀐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ASEAN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경제적 자원이 그들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이들 두 국가의 ASEAN 지원을 경쟁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경쟁 구도 속에서 혹은 경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가진 제한된 자원이 중국과 일본에 경쟁할 수준은 되지 않지만 ASEAN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ASEAN이 요구하는 바, 지원을 바라는 바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한 협력 대화를 통해서 필요와 수요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여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협력 효과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아시아 외교 하에서 ASEAN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발협력이다. ASEAN 국가 중에서 아직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들은 외부의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신아시아 외교의 장기적 목표 중

하나가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와 이를 통한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한국의 지위 향상과 소프트파워 확대라고 할 때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력에 걸맞은 지원은 필수적이다.

개발 원조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ODA의 확대이다. 이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한국의 대동남아 ODA 확대가 공약된 바 있는데, 이를 향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OECD DAC에 가입 이후 그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ODA를 확대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되는 ODA를 동남아 지역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ODA의 성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국의 ODA와 달리 보다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고 비연계 용자(untied loan)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5 ASEAN 국가들에 대한 양자 간 ODA 공여 실적 (1997~2007년,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7~'07
베트남	6.75	11.62	7.17	16.03	38.13	22.61	12.68	31.35	15.29	10.08	24.67	196.38
캄보디아	1.78	0.30	0.25	0.66	1.13	22.71	10.76	23.88	17.77	13.83	35.28	128.35
라오스	0.81	0.22	0.30	0.60	0.67	1.47	2.11	3.64	9.77	13.55	17.90	51.04
미얀마	16.45	13.30	7.79	0.84	0.42	7.20	6.64	2.93	8.11	8.53	-	72.21
인니	15.39	19.55	9.33	3.79	23.0	14.67	30.17	16.93	18.32	18.90	28.78	198.83
필리핀	0.76	0.40	1.05	3.0	3.38	6.54	6.04	8.20	7.52	7.06	28.16	72.11
소계(a)	41.94	45.39	25.89	24.92	66.73	75.20	68.40	86.93	76.78	71.95	134.79	718.92
(비중,%) a/b	37.7	36.4	19.7	19.0	38.9	36.4	27.9	26.3	16.6	19.1	27.3	25.8
양자 간 ODA(b)	111.3	124.7	131.4	131.2	171.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2,785.8

자료: 권율,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ASEAN 개발협력의 과제,”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신아시아외교 워크숍 발표문 (외교안보연구원, 2010.6.10), p. 13.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하나의 단일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는 범주화를 하여 차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ASEAN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경제국가,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중진국이면서 자체적으로 다른 국가에 ODA를 지원할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 그리고 아직 지원이 많이 필요한 국가들로 나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산업 구조에 따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이 농업이 여전히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베트남처럼 초기 산업화 단계에 들어선 국가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ODA, 혹은 지원 전략은 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다.

산업 구조가 농업 위주인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발전에 관한 지원이다. 이미 몇 가지 농업 기술 전수와 협력에 관한 지원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에 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데, 농업을 산업의 주로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는 이들 국가의 전반적 국민 소득으로 이어진다. 높아진 국민소득은 해당 국가 국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낸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일수록 경제 문제로 인한 인간안보의 문제, 내전 등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기술 지원 등의 협력은 곧 이들 국가의 사회적 안정과 내적 평화를 도모하는 길이며, 이런 사회적 안정이 향후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된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를 보면 개발 수요가 큰 인도

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개발 원조와 개발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시에 국가적으로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크며, 아울러 엄청난 자원을 가진 자원부국이다. 국내 정치의 안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주화 이후 경제 성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많은 개발협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역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동시에 아직 산업화 등 개발의 여지가 큰 상황이므로 개발협력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얀마의 경우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여 개발의 여지는 많으나 국내 정치 사정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군사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미얀마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국제사회의 눈에 한국의 개발협력은 자칫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을 위해 공헌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정치변동 이후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를 하고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특히 대륙부 동남아와 관련하여 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을 구상할 때 메콩 강 개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을 거쳐 흐르는 메콩 강은 엄청난 경제적 자원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천이며, 메콩 강 개발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메콩 강은 4,800km에 이르는 대륙부 동남아 최대의 강이고 메콩 강 유역(Great Mekong Subregion: 이하 GMS)의 최대 자원은 수자원이며, 아마존 강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하천 유역 생태계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또한 주석, 구리, 철광석, 천연가스, 금 등의 자원이 보고되고 있으며, 연간 수산물 어획량만 해도 2억 달러의 가치를 자랑하고 있으면 유역 거주 인구 6천만에 달한다. 메콩 강 유역을 개발하기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은 1995년 협정을 맺고 메콩 강 개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ADB, UNESCAP 등이 유역 개발 사업, 수자원 관리, 홍수 방지 사업, 유역 환경 보전 사업, 수산업 관련 사업, 교통망 사업, 수력 발전 사업, 농업·관개·임업관련 사업, 관광, 훈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메콩 강 개발은 주변 국가들과 이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개발의 결과는 지역 주민의 소득 개선, 생활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수력 발전, 농업 생산량 확대, 관광자원, 수산업 확대, 그리고 교통망 개발을 통한 주변 국가 간 교역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동남아에서 가장 빈국인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국가가 빈곤 퇴치 등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산지로 둘러싸인 동남아 대륙부 북부 지역을 메콩 강을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로 연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파급효과는 아시안 하이웨이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까지 이를 수 있다.

현재 메콩 강 개발은 중국과 일본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미국도 차츰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메콩 강 개발의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위해 이 개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메콩 강 개발 관련 일·ASEAN 정상회의 등을 지속 개최하여 이 사업에 있어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은 제한된 경제적 자원으로 인해 메콩 강 개발에서 중국, 일본과 같은 정도로 참여하기는 어렵지

만, 개발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하는 것이 동남아와 개발협력이라는 명제하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가들이 이 두 강대국에 대해서 가지는 우려도 일정 부분 있으므로 이런 틈새를 잘 이용하면 한국이 메콩 강 개발에 적은 자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다 산업화한 국가들은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들과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에게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중진국의 수준에 올랐거나 초기 산업화 수준에 진입한 국가들과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를 인식한 이후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민감한 접근 없이 산업화한 국가들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해당 국가의 자존심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며, 한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술, 지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선진 국가의 대열에 들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경제협력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의제는 거의 없다. 대신에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 FTA,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건설 등에 있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싱가포르와는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에도 개발협력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호혜적인 방향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경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전 기술 개발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말레이시아, 태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이미 초기 산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경우 산업화의 심화를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이미 베트남은 고속철도 등의 건설, 홍 강 유역 개발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부분에 한국의 기업이 진출하여 베트남에도 이익이 되고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에너지 및 기후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있다.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들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산업화 혹은 경제 성장 목적을 위해 동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한편, 다른 방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원의 개발과 환경 문제로부터 유래하는 이중 압력에 처해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이러한 이중 압력에 대한 돌파구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흐름과 대처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보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산업화, 경제 성장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동원될 수 있는 녹색성장 기술이 ASEAN의 자원부국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동남아 국가 전체적으로 현재 74%의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등의 원료에 22%, 그리고 지열 등에 3%, 수력에서 1%의 전력을 얻고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2030년까지 12배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sup>105</sup> 최근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는 큰 영토에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밀림의 보존에 따른 압박도 있고, 큰 인구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 이후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압력 역시 크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열을 이용한 발전과 바이오연료의 개발에 적극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지열자원의 40% 다시 말하면 28,000MW에 해당하는 지열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열 에너지 이용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sup>106</sup>

다른 한편으로 유리한 기후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바이오연료를 개인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잡초로 분류되던 자트로파(Jatropha)라는 식물을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전 세계적인 바이오연료 붐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이미 2006년에 향후 5년간 11개의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고, 13억 리터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표로 22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아울러 팜오일, 카사바, 사탕수수 등에서 얻어지는

---

<sup>105</sup>- Michael Richardson, "ASEAN's Soaring Energy Challenge," *The Straits Times*, July 26, 2010.

<sup>106</sup>- Josh Franken, "Analysis: Indonesia-Energy on the boil," *The Jakarta Post*, July 26, 2010.

바이오연료 생산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팜오일은 1 헥타르당 가장 높은 기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바이오 연료 재료인 콩에 비해 7배, 포도씨에 비해 3배가 많은 양이다.

에너지와 동남아 국가들이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은 바로 남중국해 문제이다. 동남아의 몇몇 국가들과 중국에 의해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무역의 교통로이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양루트이다. 아울러 이 바다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바로 남중국해의 석유, 가스, 그리고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자원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와 파라셀(Paracel)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갈등의 가장 직접적 원인 중 하나가 누가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해저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국은 이미 자국에서 필요한 화석연료를 스스로 자급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동남아 국가들도 자신들이 가진 화석연료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남아나 중국 모두 화석연료 확보가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 지속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국영석유회사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290억 달러를 들여 남중국해의 심해 유전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화석연료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남중국해의 에너지 자원은 단순한 자원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안보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07</sup>

---

<sup>107</sup> Michael Richardson,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 April 2009), <<http://www.iseas.edu.sg/aseanstudiescentre/ascd2.htm>>.

녹색성장 기술의 협력 이면에는 ASEAN 국가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도 동남아의 몇몇 국가들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 한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지만 관련 기술, 그리고 자본이 있는 경우 이러한 ASEAN 국가들과 에너지협력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동남아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협력방안은 전력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다. 동남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IEA에서 펴낸 『세계 에너지 전망 2009(World Energy Outlook 2009)』에 의하면 동남아에서 2007년과 2030년 사이 에너지 수요는 76% 정도 늘어날 것이라 한다.<sup>108</sup> 특히 유사한 기간, 즉 2005년부터 2030년까지 동남아에서 전력의 수요는 매년 4.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빠른 산업화, 경제 성장, 전력 인프라의 증가, 도시화,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이 원인이 된다. 특히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캄보디아(9.2%), 라오스(12.1%), 미얀마(9.4%), 베트남(6.1%) 등에서 전력의 생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라오스의 전력 생산 증가 예상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얀마가 3위, 캄보디아가 4위를 차지하는 정도이다.<sup>109</sup>

이런 전력 수요의 급증과 전력 생산의 급증이 의미하는 바는 전력

---

<sup>108</sup>. IEA Press Release, “The time has come to make the hard choices needed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nhance global energy security,” says the latest *IEA World Energy Outlook* <[http://www.iea.org/press/pressdetail.asp?PRESS\\_REL\\_ID=294](http://www.iea.org/press/pressdetail.asp?PRESS_REL_ID=294)>.

<sup>109</sup>. APEC and ADB, *Energy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October 2009), pp. 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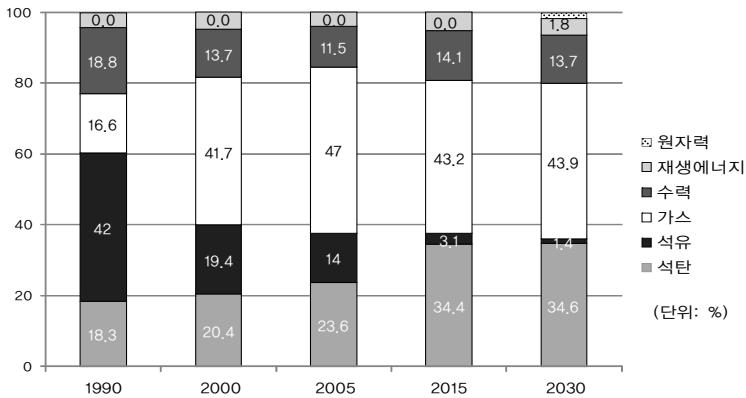
생산을 위한 많은 투자와 설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기술적 낙후로 인해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력 생산의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협력할 사안은 매우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단순 전력 생산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과 같은 부분에서 향후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효과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생산된 전력의 효율적 활용은 이들 국가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 문제 등 기후 변화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일부 동남아의 보다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기후 변화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국의 고도화 되는 산업화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 발전 관련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국가들은 한국의 발전된 핵 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시 이루어진 한국과 동남아 개별 국가 간의 정상회의에서 몇몇 국가들이 한국과 원자력 발전 기술 관련된 협력을 하기를 희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청정에너지 협력과 발전소 건설, 말레이시아 역시 녹색성장과 핵 발전 시설, 브루나이도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으며, 현재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히 핵 발전 시설을 주장하는 베트남 역시 핵 발전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sup>110</sup>

<sup>110</sup> 이재현, “한-ASEAN특별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20 (외교안보연구원, 2009).

특히 2010년 7월에 열린 ASEAN 외무장관회의 및 확대외무장관회의 자리에서 베트남이 동남아 국가들도 핵 발전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ASEAN 국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개별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이미 ASEAN 10개국 중에 브루나이, 라오스를 제외한 8개국은 공식, 비공식으로 핵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1만 5천에서 1만 6천 MW급 원전 8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2025년까지 6천 MW급 원전 4기를, 태국 역시 2022년까지 2천 MW 원전 2기를 계획하고 있다. 1인당 전력 소비가 상당히 높은 싱가포르 역시 원전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말레이시아도 2021년까지 1천 MW급 핵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sup>111</sup>

그림 III-1 동남아시아의 발전 수단별 증감 예측



자료: APEC and ADB, *Energy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October 2009), p. 45.

<sup>111</sup>- Ernest Z. Bower, "ASEAN going for nuclear power," posted on *East Asia Forum*, July 16, 2010, <<http://www.eastasiaforum.org/2010/07/16/asean-going-for-nuclear-power/>>; "Malaysia aims to have nuclear power plant by 2021," *AFP*, May 4, 2010.

녹색성장, 기후 변화 협력과 관련하여 규모가 큰 협력 아이টে므로는 메콩 강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메콩 강 개발 사업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도 될 수 있지만, 녹색 성장 관련 협력에서도 언급할 만한 협력 사업이 많다. 특히 메콩 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주변의 자연생태계가 아직 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잘 보존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환경을 이용하여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수자원 관리를 통해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 발전 사업, 그리고 수산자원을 잘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키는 협력 사업, 물길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의 효과적 보존을 통해 에코·투어리즘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협력 사업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은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망한 녹색성장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메콩 강 개발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 표 III-6 국가별 메콩 강 유역 개발 수자원 분포

	운남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전체
메콩 강 유역 면적(km <sup>2</sup> )	165,000	24,000	202,000	184,000	155,000	65,000	795,000
저수량 비율(%)	21	3	25	23	20	8	100
유량 비율(5)	16	2	35	18	18	11	100

자료: Mekong River Commission, "Overview of the Hydrology of the Mekong Basin," <[http://www.mrcmekong.org/download/free\\_download/Hydrology\\_report\\_05.pdf](http://www.mrcmekong.org/download/free_download/Hydrology_report_05.pdf)>.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향후 대ASEAN 협력 중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는데,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보다 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루어졌던 해외 투자가 본국에 유치하기 어려운 공해 유발 산업인 경우가 많은데, 세계적으로 높아진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이런 식의 해외 투자는 어려워 질 것이다. 동남아 국가 중 초기 산업화 단계에 들어선 국가들 역시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유인은 많이 있지만 해외 투자가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우려 역시 크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공해 유발 산업이 해외 투자라는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동남아 개도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한·ASEAN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FDI 유치 자체의 유치에 못지않게 어떤 산업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따라서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FDI 역시 이런 부분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문화 교류

최근 한류 등의 인기로 인해 한국은 ASEAN 국가와의 사회·문화 교류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ASEAN+3 지역협력에서 중국,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이 훨씬 많은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아시아 외교에서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사업에 사회·문화와 인적 교류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비교우위를 더욱 살려야 할 것이며, 특히 인적 교류, 면대면 접촉을 통한 개발 경험 전수 등의 방법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대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사회·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교육과 관련하여 지식기반이 부족한 캄보디아나 첨단산업기술이 부족한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교육관련 지원 수요가 많이 있다. 또한 산업화 한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의 측면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들도 있다. 이런 수요에 대해 현지에서 직접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방법 혹은 보다 많은 양질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향후 이들이 사회 엘리트층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지한 파를 만드는 역할과 한국의 이미지 향상, 소프트파워 증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교육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유망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현재 베트남보다 더 많은 젊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며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기초교육도 그렇지만 고등교육에서는 거의 인프라가 부재한 상태이며, 이런 고등교육 인프라 부족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보다 중요하게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런 캄보디아의 상황은 크메르루즈 통치하에서 많은 지식인이 학살되어 지금 현재 국내 고등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받은 인구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교수 인력의 확보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주변 국가에게 크게 바라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과 교육관련 협력에서 향후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이 가능하다.

표 III-7 캄보디아 전체 인구 중 24세 미만 인구 비율 예측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캄보디아	56.1	51.9	47.9	45.4	43.9
라오스	59.8	56.0	52.6	49.5	47.5

자료: UNDP,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http://data.un.org/Explorer.aspx?d=PopDiv>>. UN 세계인구전망을 바탕으로 재계산.

표 III-8 캄보디아, 라오스 인구증가율 예측

	1990~ 1995년	1995~ 2000년	2000~ 2005년	2005~ 2010년	2010~ 2015년	2015~ 2020년	2020~ 2025년	2025~ 2030년
캄보디아	3.22	2.29	1.66	1.64	1.66	1.59	1.38	1.15
라오스	2.68	2.33	1.69	1.81	1.76	1.7	1.56	1.36

자료: UNDP,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UN 세계인구전망을 바탕으로 재계산.

인적 접촉의 확대라는 부분은 인적 접촉의 증가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문화협력, 경제협력에 있어서 방법론적 측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협력에 있어서 단순히 자원만 지원하고 뒷짐 지고 서있는 식의 대ASEAN 개도국 지원보다는 자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경험이나 지식, 기술의 전수를 위해서 직접 한국인이 현지에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투입된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적 접촉을 통한 지원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아울러 우리 국가브랜드와 지위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동남아의 비교적 경제 성장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반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 전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의 요청은 매우 강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개방 정도와 정치 상황은 아직 발전 경험을 크게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며 라오스 역시 경제적 단계가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크게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다. 반면 베트남은 이미 어느 정도 초보적인 산업화에 들어선 상황이어서 한국 모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캄보디아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목표로 했던 국민의식 개혁과 안정적 소득 확보 등이 필요한 발전 단계이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의 초기부터 적용되기 가장 적절한 상황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개발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안목을 가진 고급 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모델을 따라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훈센 총리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류 등을 통해 국민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상황이어서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한 협력은 한국의 거점국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ASEAN 국가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거점 국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LMV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

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들을 거점국가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들 국가들과 해당사안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거점국가로 한국은 이들 국가 외에서 대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유사한 역내 중견·개발도상국으로서 가지는 공통점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와는 자원협력, 싱가포르와는 FTA 관련 협력이 주요 사안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달리 CLMV 국가들은 아직 뚜렷하게 가까운 국가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CLMV 국가들은 지금 미발전국에서 개도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서두르는 단계에 있으며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라는 한국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이들 국가와 보다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는 것은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우선 역내에 발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가 중 일본은 이들 국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이고 발전단계도 너무 격차가 있어 모델로 삼고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중국의 경우 발전 단계에서 일부는 이들 국가와 경쟁 상대이며, 또 다른 차원에서는 거대한 국토와 자원이라는 점 때문에 발전모델로 삼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들은 모두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로서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국가들이며 중국의 경험을 발전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역사적 감정상 적절치 않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이들과 유사한 국토, 인구 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발전 수준에서도 일본처럼 아주 선진국도 아니며, 중국과 같은 예외적인 특성을 가진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발전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발전모델과 경험에 대한 수요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으나, 한국의 경험 전수는 산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되어 온 인상이 있다. 따라서 발전 경험의 전수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모델의 적용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의 분쟁 및 위기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층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가장 좁은 범위, 즉 동남아 지역 내의 분쟁과 관련된 사항이다. 비교적 동남아 내의 국가 간 분쟁은 1967년 ASEAN의 창설 이후 잘 관리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ASEAN의 창설 목적이 외적, 지역 내적, 그리고 개별 국가 내부로부터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초기부터 안보협력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런 안보협력체를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분쟁의 강도를 낮추거나 분쟁이 수면위로 떠올라 국가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냉전시기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긴장을 제외하면 1960년대 이후 큰 긴장 상태는 동남아에 존재하지 않았다.

동남아 지역 내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라면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해결 과정에 있는 몇 개의 육상, 해상 영토 관련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화이트 록(White Rocks: Pulau Batu Putih 혹은 Pedra Branca)을 놓고 벌어졌던 해상 영유권 분쟁이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보르네오 섬 인근 해안에 있는 작은 섬인 Sipidan과 Ligitan을 놓고 벌인 영유권 분쟁도 있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내적으로 ASEAN에서 해결을 본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경 분쟁으로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에 국경에 놓인 프라비아(Preah Vihear) 사원을 놓고 벌이는 국경 분쟁이 있는데, 양국 간 비정기적인 교전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sup>112</sup> 그 외에 동남아 국가들 간에 군사적 긴장이라 부를만한 긴장 상태는 크게 존재하지 않으며 ASEAN을 통해서 상호 자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제적 분쟁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동남아 개별 국가 내의 종족·종교 갈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의 이슬람 테러단체와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과 웨스트 파푸아(과거 이리안자야)의 분리주의 운동, 인도네시아 암본, 말루쿠 등에서 있었던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 그리고 태국 남부의 무슬림과 불교도 사이의 갈등, 그리고 미얀마의 소수민족 탄압과 무장투쟁 등의 분쟁이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동남아 국가와 외부 세력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이 외부 세력 중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다. 먼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육상 경계선 설정에 있어 중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올해 베트남과 중국 사이

---

<sup>112</sup> 크메르 제국 멸망 후 태국 영토로 편입, 프랑스 식민지 시기 캄보디아에 반환, 1959년 태국 군대의 재점령, 1967년 국제법정 판결, 캄보디아 편입, 태국의 개발을 우려 국경 폐쇄, 2003년 재개방, 세계문화 유산 등록 추진, 태국의 반발, 2008년 군사적 충돌.

육상 국경 설정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sup>113</sup> 남중국해 해상의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육상 국경 문제 해결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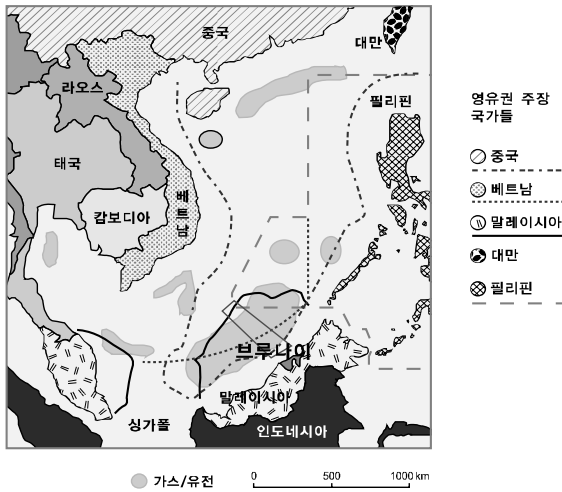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와 몇몇 동남아 국가들로 둘러싸인 반폐쇄식 바다(semi-closed sea)이다. 전체 면적은 4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수산물 등 해양자원은 물론이고 석유, 천연가스 자원과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해저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인도양과 동북아를 잇는 수로로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를 놓고 경쟁을 벌이며, 이 경쟁은 남중국해에 있는 두 개의 군도, 즉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와 파라셀(Paracel)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브루나이는 루이사 리프(Louisa reef)의 영유권을, 중국, 베트남은 이 지역 해안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그리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대륙붕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이 지역 군도들의 발견 및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sup>113</sup> "China-Vietnam land border demarcation agreements take effect Wednesday," *Peopledaily*, July 14, 2010,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001/90776/90883/7066239.html>>.

그림 III-2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자료: Michael Richardson,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이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신의 힘을 내세워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양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입장이고,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요구에 맞서 다자, 즉 ASEAN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ASEAN과 중국 간에 2002년에 서명된 ‘남중국해 당사자 간 행동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의해서 영유권 분쟁 문제를 우호적인 방법으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모색한다는 데 형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의 변화 시 구속력을 갖지 않은 선언에 의해서 규제된다는 점에서 갈등이 증폭될 경우 다시 한 번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주요 분쟁 사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며 작은 규모이지만 서로 어업권 분쟁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중국 간에 어선 나포, 어선에 대한 사격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시각을 넓혀서 보면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바닷길(Sea Lane)에 위치하고 있는 동남아를 놓고 강대국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이런 경쟁을 간단히 살펴보면 2010년 7월 미국이 EAS에 가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EAS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제도(Political-Security Institution)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2011년부터 EAS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 혹은 관리하려는 미국 간의 경쟁이 동아시아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최근 10여 년간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통해서 동남아를 매우 우호적 관계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관계에서 이익 등 다양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안보, 지역 갈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G2 혹은 세계적 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이 결핍된 요소 즉,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건설하려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와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출구가 좁고, 한국, 일본을 지나야 하는 태평양쪽보다는 보다 넓고 동남아를 통해 인도양으로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되는 남중국해는 중국에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EAS 가입은 지역협의체에 직접 들어와 하나의 행위자로 이런 중국의 다양한 야심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ASEAN은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존재 의미를 보장받고 실질적 이익을 얻어내는 약자의 외교를 매우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1997년 출범한 이후 한동안 동남아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 사이에서 양 강대

국들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어 냈다. 2005년 이후 중국의 부상이 더 강력해지고 일본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어려워 졌을 때는 EAS를 출범시키며 호주, 인도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다른 강대국을 통해 견제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온 셈이다. 중국의 부상이 더욱 강력해지고 G2라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ASEAN은 냉전 이후 동남아에서 발을 뺐던 미국의 동아시아 다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2009년 열린 미·ASEAN 정상회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으며, 미국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EAS 가입이 표면화 되었다. 이렇게 볼 때 ASEAN은 중국이라는 지역 강대국을 맨 먼저 일본, 그리고 이후 일본·인도·호주를 통해서 견제했고, 이제 더 강해진 중국을 미국을 끌어들여 견제하면서 양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 이익을 모색하고 있다.

분쟁과 위기 관리에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경쟁적인 군비 증강이다. 2000년대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군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이 군비를 크게 늘이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역시 군비 확장 폭이 매우 크다. 가장 큰 폭의 확장을 보이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이 기간 100% 이상의 군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는 69%, 태국과 베트남도 50% 이상의 군비가 증가했다. 또 싱가포르는 이 기간 동안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10개국 안에 동남아 국가로는 처음 진입하기도 했다. 이런 군비 증강과 남중국해의 문제 등이 겹쳐지면서 동남아 지역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 III-9 동남아시아 국가의 최근 군비 증가

(단위: 백만 달러\*)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브루나이	404	308	248	301	339	353	342
캄보디아	146	125	102	102	109	120	123
인도네시아	3,514	2,970	4,840	4,731	5,037	5,478	5,011
라오스	92.9	24	17.8	17.2	17.4	19.3	21.2
말레이시아	2,350	2,122	3,691	3,948	3,864	4,314	4,412
미얀마	-	-	-	-	-	-	-
필리핀	1,233	1,270	1,275	1,287	1,310	1,538	1,402
싱가포르	5,375	5,997	6,661	7,076	7,136	7,412	7,513
태국	4,095	2,702	2,673	2,693	2,807	3,500	4,117
베트남	-	-	1,370	1,430	1,683	2,170	2,138

자료: SIPRI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http://milexdata.sipri.org/result.php4>>.

\* 2008년 기준 경상가적

이러한 동남아 지역의 군비 확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국내적으로 군의 정치 개입 등의 경험에 의해서 군이 매우 현대화 되고 강력한 집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는 국내적 상황에서만 그럴 뿐 국가의 기본적 크기, 군의 현대화 측면이나 대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군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국가의 규모와 필요성에 맞는 정도로 최근에 군사력을 확장하는 일종의 정상화 단계에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5개국 방위협정(Five Power Defense Arrangement)에 의해 오랫동안 대외적 방어를 타국에 일정 부분 의존해온 결과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충분히 갖춘 군대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 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의 군사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과 대결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국가

I  
II  
III

와 영해 방어를 위한 군사력 증가에 주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군비 증강의 이면에는 개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란 경제력이 바탕이 된다.

분쟁 및 위기 관리에 관해서 한국과 ASEAN 국가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은 한국의 객관적 능력이 분쟁이나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주권 문제와 내정 문제에 매우 민감한 ASEAN 국가들의 경우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국내 문제나 지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 나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과 ASEAN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직접적 개입보다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EAS 가입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 남중국해, 혹은 더 넓은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반의 안보 문제에 불안 요소를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보다 작은 국가들인 한국이나 ASEAN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 따라서 ASEAN과 한국은 함께 이런 불안 요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거나 잠재적 분쟁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내는 방향에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힘의 정치와 세력균형 등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외교를 통해서 이런 분쟁의 요소를 지역 중진국들이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 요소의 관리 방안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다자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 다자협력의 틀의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야 강대국 간의 긴장을 낮추고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남아 몇몇 국가 간에 있었던 국경, 해상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ASEAN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 문제는 한국의 경우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독도 문제, 그리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동북공정의 문제와 일정 부분 유사점,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SEAN 국가들과 한국이 이런 영토 문제를 둘러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분쟁 및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군비 확장과 관련하여 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중국, 러시아 등으로 무기의 구매처를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군용기 등은 러시아산 수호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도 최근 미사일, 군용 차량 등의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에 매우 적극적이다.<sup>114</sup> 이것은 동남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선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의 군 현대화 계획에 한국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동남아의 군비 확장이 지역 불안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의 규모에 맞는 군

<sup>114</sup> “중국산 무기 동남아시아 싹쓸이…동남아시아의 전황,” 『한겨레신문』, 2010년 8월 3일.

현대화 추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한국과 방위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 혹은 방위 산업 수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정책적 고려 사항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남아 지역은 한국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측면에서 직결되어 있으며,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을 할 여지가 매우 크다. 더 나아가 동남아 지역은 주변의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집결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으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지역이다. 경제적으로 몇몇 보다 발전된 국가를 제외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기를 원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 지역은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이며 자원의 공급처로 유용한 지역이다.

에너지 기후 변화 협력과 관련하여 역시 동남아 지역은 경제 성장 및 이를 위한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요구와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력에 놓여 있는 만큼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의 협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 스스로도 최근 군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동남아 지역의 지역적 불안정은 언제든지 지금의 균형과 안정을 위태롭게 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동남아 지역의 잠재적 불안정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불안정성의 억제 혹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의 지속과 관련하여 한국과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기에 좋은 대상이다. 이런 협력적

관계의 강화는 반드시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그리고 그에 기반한 공통의 인식과 정체성에 바탕을 둘 때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 상호 이해와 공통의 이익, 정체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상호 불신, 그리고 상대방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의심에 의해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바,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 동반 관계의 건설을 위해서 사회·문화적 교류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다양한 협력 분야 중에서 우선적으로 경제협력이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적이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제협력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동남아로부터 얻는 이익 못지않게 동남아가 한국으로부터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한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힘의 차이로 인해 동남아가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상대적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및 기후협력은 경제협력의 시작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제협력처럼 단기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관련 협력인 관계로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심어 놓은 후 한국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 그리고 동남아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이런 협력 사업들은 모두 사회·문화적 협력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협력은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협

력을 통한 상호 공감대의 형성, 더 나아가 인식공동체의 형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제협력, 에너지협력은 그 기반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지역의 지역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협력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문제이고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주권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이 분야에서 협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 역시 상기한 사회·문화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이익공동체, 인식공동체의 형성이 전제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동남아의 지역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협력은 우선은 다자적 차원에서 간접적 지원을 시작으로 해야 하며, 보다 양자적이고 직접적 지원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 2. 중앙아시아

### 가. 중앙아시아의 의미와 중요성

#### (1) 중앙아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고대부터 실크로드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여 아시아 및 유라시아 문명을 전 방위로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독일인 등과 같은 백인계 인종, 위구르인, 이란인, 아랍인 등과 같은 이슬람 문화권의 민족들, 그리고 우리와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는 투르크계 민족 등이 다문

화를 이루며 장기간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민족들이 모두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국가의 민족이라는 점이다. 현재 러시아, 독일, 중국, 이란, 아랍 등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의 디아스포라들을 이용하여 자국의 진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아시아는 지금도 과거 실크로드에서 행하였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중앙아시아와 역사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왔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라시아프(Afrasiyab) 벽화에 새겨진 고구려 사신의 모습,<sup>115</sup> 8세기 이곳으로 당(唐)의 군대를 지휘하여 침략하였던 고선지(高仙芝)의 흔적,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의 존재는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sup>116</sup> 그리고 19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곳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우리의 교류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상호 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전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자국의 경제 성장과 이슬람 원리주의와 대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국가 발전을 달성한 한국을 롤 모델로 인식하였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들이 직면한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sup>115</sup> 일부 학자는 통일신라의 사신이라고도 한다.

<sup>116</sup> 구소련 붕괴 이후 현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카자흐스탄에 13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16만 명, 키르기스스탄에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할 당시에 ‘세계 경영’을 화두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도약하는 데 베이스캠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해당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을 위해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하는 상생(相生)적 전략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 초기에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해당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이 지역 국가들은 한국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1998년도 한국의 경제위기와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앙아시아가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친한(親韓)적 분위기가 나타났으며,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 표 III-10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교역 현황(2008~2009년)

(단위: 백만 달러,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연도	합계 금액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008	1,698	16	32.4	347	-36.3	38	72.5	22	224.9	1,122	50
	2009	1,385	82	-42.1	251	-17.6	20	-36.7	60	264.7	967	5.4
수입	2008	619	2	92.4	350	36.5	3	-91.6	0.2	-74.5	262	153.1
	2009	193	0.6	-76.2	138	-56.4	18	484.8	0.7	353.5	36	-83.5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표 III-11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투자 현황(2008~2009년)

(단위: 천 달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008	65,168	192,258	33,179	862
2009	26,696	101,021	6,412	135

주: 2009년 투자현황은 9월 말까지의 누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그러나 경제적인 상호 이해관계를 통해 교류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 간의 정치적 교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가치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석유와 가스 매장지로,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 요충지로 세계무대에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과 EU, 중국, 러시아 등이 구소련 붕괴 이후부터 일찍이 이것에 가치를 두고 정치적 교류를 활성화시킨 것에 비해 한국의 움직임은 상당히 늦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경제 교류는 발전하였지만 자원 개발에는 위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한국이 이 지역과 정치적 교류를 확대시키려고 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상위 국가들과 충돌하는 부분과 이들보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였다.<sup>117</sup>

<sup>117</sup> 구소련의 붕괴와 9·11 테러 이후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한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개발하는 상위 국가들과 경쟁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보다는 역할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표 III-1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 현황 (2006년)<sup>118</sup>

국가	석유(십억 배럴)			가스(조 세제곱미터)		
	매장량	세계 비중(%)	가채 연수(년)	매장량	세계 비중(%)	가채 연수(년)
카자흐스탄	39.8	3.3	76.5	3.00	1.7	100이상
우즈베키스탄	0.6	-	13.0	1.87	1.0	33.7
투르크메니스탄	0.5	-	9.2	2.86	1.6	46.0

자료: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8권 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 2.

● 표 III-13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의 수교 일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992.1.28.	1992.1.29.	1992.1.31.	1992.4.27.	1992.2.7.

● 표 III-14 한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관 설립 시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993.7.	1993.12.	2007.9.	2008.2.	2007.6.

실제로 <표 III-13>에서 나타나는 공식적인 외교 수립과 <표 III-14>에서 나타나는 해당국에 대사관 설립은 차이를 보인다. 초기에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키르기스스탄을 겸임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

<sup>118</sup> 잠재 매장량 기준으로 석유는 약 2,500~3,000억 배럴, 가스는 약 15~20조 m<sup>3</sup>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자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8권 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후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공관이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한국이 다른 3국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3국이 가지는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공관이 설립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 (2) 중앙아시아의 대한국 정책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국의 경제 발전의 롤 모델로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5개국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모델을 연구하여 자국에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정하였으며, 후자는 한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5대 중점 외교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sup>119</sup>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한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과 남북 화해·교류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대북 정책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sup>120</sup> 게다가 이미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KEDO) 회원국으로 북한 경수로 건설에 자국 인력을

<sup>119</sup> - <<http://uzb.mofat.go.kr/kor/eu/uzb/affair/relation/index.jsp>> (검색일: 2010.8.6).

<sup>120</sup> -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8년 9월 시행된 제42차 IAEA 총회에서 한국 측이 제안한 북한 핵 관련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투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121</sup>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 및 참가 조기 결정,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지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2007년~2010년) 입후보 지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만국우편연합(UPU) 이사국 입후보 지지, 반기문 장관의 UN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최초 공개 지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2012년 제18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 18) 한국 유치 지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sup>122</sup>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과 가치 부여는 다른 아시아 지역권보다 훨씬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러한 이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초기에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나. 분야별 입장 및 협력방안

### (1) 경제협력

#### (가) 입장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대외 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 KOICA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는 ODA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을

---

<sup>121</sup> 우즈베키스탄은 북한 내 신포 경수로 건설현장에 2001년 3월에 건설노동자 500명을 파견했으나, 경수로 건설 중단으로 전원 철수하였다.

<sup>122</sup> <<http://news.mofat.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2655&ssid=19&mvid=755>> (검색일: 2010.8.6).

통해 유상으로 지원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차관 사업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외 원조 대상국의 선정은 개발도상국의 국민총생산 규모, 한국과의 정치외교 관계, 교역 규모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중점 지원 국가에 공통으로 선정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규모, 한국과의 관계,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 등이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 및 기타 동구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비해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 KOICA의 중앙아시아 무상원조는 1992년 18만 9,000달러를 시작으로 2006년에 585만 달러, 2008년에는 1,388만 4,000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그만큼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사업별 무상원조 실적을 보면 연수생 초청(19.4%), 봉사단 파견(26.8%), 프로젝트 지원(12.8%)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요 조사에 의해 시작되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의 무상원조 수요가 특히 위의 3개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수생 초청은 중앙아시아의 공무원 및 학생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 및 산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유상차관으로 지원되는 EDCF는 차주인 대상국 정부가 자국의 사업 시행기관, 즉 발주처를 통해 한국에게 사업을 발주하고, 한국은 발주된 사업을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한 후, 현물을 대상국에 지원하는 구속성 현물차관 형식을 띠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중점 지원 국가로 지정되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EDCF 자금은 1990년대 중후반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부문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EDCF 자금은 다양한 경제·사회 인프라 부문에 지원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EDCF 차관을 통해 IT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과 교육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EDCF 자금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집중되었으나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이후 석유 및 가스 수출증가로 오일머니가 넘쳐나면서 더 이상 한국의 EDCF 차관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유상차관과는 달리 한국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현지의 한국대사관과 기획재정부의 협력하에 과제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연구원(KIET) 등의 주관으로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개도국에 이전시켜주는 지식 공유사업(KSP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중점 국가로 선정되어 있으며 경제개발계획 관계 부처에 KOICA의 무상차관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에 대한 조언, 관계자 초청, 또는 필요시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토 개발 등 개발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통해 후속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공단 개발, 석유·가스화학 관련 사업, 신도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 등의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23</sup>

중동을 대신할 미래 에너지 자원 생산지인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

---

<sup>123</sup> 윤성학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 237~240.

라 세계의 열강들이 가지는 동일한 과제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원 개발에 국한되는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2차 산업을 경제 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노하우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ODA와 EDCF를 통한 대중앙아시아의 대외 원조는 지금보다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차적인 경제 교류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나) 협력방안

현재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대외 원조 액수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대외 원조를 통한 부차적인 발전 전략도 부족한 상황이다.<sup>124</sup> 일본은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에 25억 달러가량의 ODA를 지원했다. 이 결과 일본 정부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을 공급받는 성과를 거뒀고, 이토 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시미즈상사 등 일본 종합상사도 우즈베키스탄 공항 현대화·TV송신설비 확장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 가스발전소 건설 수주,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현대화 설비 공급 계약 등을 따냈다.<sup>125</sup> 중국 역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ODA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

<sup>124</sup> 한국의 ODA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삼성경제연구소,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제730권 (삼성경제연구소, 2009).

<sup>125</sup>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375805>> (검색일: 2010.8.1).

는 바와 같이 우리의 ODA 규모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sup>126</sup>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을 통해 2008년도 8월에 한국 정부는 ODA 규모를 오는 2012년 국민소득(GNI)대비 0.15%, 2015년 0.25%로 확대해 나가기로 발표했다.<sup>127</sup>

그러나 문제는 ODA의 규모가 아니라 지원 전략의 부재에 있다. 먼저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난 후 우리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고성장을 하고, 또 이들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가 계속 오르자 일본 상사들의 전략은 점차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다. 이제는 ODA를 통한 ‘안전한’ 사업뿐 아니라, 그간의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 입찰에도 참가하고, 또 현지 고위층과의 네트워크 및 정보력을 바탕으로 자원 획득이라는 또 다른 ‘대박’사업까지 노리고 있다. 일본의 이토추 종합상사는 ODA 자금을 활용해 2000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연 생산 9만 톤의 소규모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건설을 수행하였다. 플랜트 건설 후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수(Off-take),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2007년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에서 도입하려던 우라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렬이 난 반면, 우리보다 뒤늦게 협상에 뛰어든 일본이 우라늄 공급권을 받아간 사례는 일본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노리고 있던 ‘대박’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1991년

---

<sup>126</sup>. 2008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9위를 차지하였으며, 액수는 7억 9,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5위로 93억 6,200만 달러가 넘었다. 통계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2007년 25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미국과 유사한 수치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17051004&spage=4#>> (검색일: 2010.8.1).

<sup>127</sup>.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81413545977632>> (검색일: 2010.8.1).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씨앗처럼 뿌려둔 약 25억 달러 이상의 일본 ODA 자금이 이제는 서서히 꽃망울을 터트리는 순간이다.<sup>128</sup>

둘째, 중국의 대외 원조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수혜국의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결국 중국과의 끈끈한 경제블록 형성을 통해 ‘윈-윈’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국은 대외 원조에는 어떤 조건도 없으며 저개발 및 후발 개도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술,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저개발국에 무상지원, 무이자차관을 제공하고 도로·전력 등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국은 이들 수혜국과의 우선적인 경제협력협정 체결에서부터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남미, 중앙아시아 등에서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sup>129</sup>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협력방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사고에 입각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ODA 수준은 사실상 일본이나 중국보다 규모나 전략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EDCF를 통해 교육 기자재와 교육 프로그램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분야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과 차별성을

128. 『LG주간경제』, 2007년 6월 20일, pp. 36~37.

129.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1/e2010011218043469890.htm>> (검색일: 2010.8.1).

가질 수 있다. 즉, 아랄 해와 카스피 해의 오염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2차 산업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 에너지 효율성 강화, 대체에너지 도입 등과 같은 우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ODA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ODA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들을 앞서고 있다. 그 이유는 독립 이후 해당국 정부가 원하는 2차 산업을 한국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육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한국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해당국에 대한 물량 공세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정국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2) 에너지 및 기후

### (가) 입장

UNESCAP의 200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환경 문제는 인위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아랄 해의 고갈과 오염, 카스피 해의 개발과 오염 그리고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식수원의 부족, 수로의 부족, 토양의 오염과 염전(鹽田)화 등 5개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sup>130</sup> 전자는 구소련 시기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수행했던 핵 실험과 우주선 및 미사일 발사 실험, 독립 이후 카스피 해의 유전 개발, 그리고

---

<sup>130</sup> <<http://www.unescap.org/esd/environment/soe/2000/documents/CH20.PDF>> (검색일: 2010.8.1).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경작되었던 면화 재배에 있다. 후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막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동부지방인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는 핵 실험으로 인해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아랄 해는 면화 재배를 위해 아무다리야 강의 물을 경작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강의 하류가 고갈되어 수원이 1/3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아랄 해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염분과 중금속 오염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sup>131</sup> 그런데 이와 같은 인위적인 환경 문제의 개선은 당사국의 관심, 경제 발전 정도,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무임승차 격으로 핵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해당국의 세미팔라틴스크 핵 실험장(The Semipalatinsk Test Site: 이하 STS)의 핵 폐기를 유도하였다. 1991년 8월 29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세미팔라틴스크 지역의 폐쇄(On Semipalatinsk ground closure)’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면서 해당국은 핵 보유국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해당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아랄 해의 고갈을 막기 위한 댐 건설을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코누르의 우주선 발사기지에서 배출되는 연소 폐기물과 잔재로 인해 대기 및 토양오염, 광산 개발에 따른 토양오염, 카스피 해 유전 개발을 통한 해양오염, 낙후된 공장설비로 인한 대기

<sup>131</sup> 텐산 산맥에서 발원하여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시르다리야, 아무다리야 강은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아랄 해로 들어가는데, 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1년에 5km씩 해안이 잠식되어 2009년 현재 호수의 약 40%가 사라진 상황이다. 아랄 해 고갈로 엄청난 환경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UN, ADB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WHO 보고에 의하자면 이 지역은 유아사망률과 인후암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윤성학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 전략』, pp. 49~50.

오염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재배가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다리야 강의 수자원을 경작지로 끌어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달리 아랄해의 고갈을 막기 위한 경제력과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환경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연이 제공하는 문제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반건조 기후를 가지기 때문에 비를 통한 수자원의 확보보다는 댐산 산맥의 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댐산 산맥에 수원(水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댐을 건설하여 수로를 차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자원 문제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잠재적인 불화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양국은 수자원을 확보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댐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은 댐이 건설되면 면화 재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수자원을 둘러싼 공생 관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봄과 여름에 눈이 녹으면 타지키스탄은 수력 발전을 통해 주변국으로 전기를 수출하고, 댐에 물을 방류하여 우즈베키스탄이 그 물로 면화를 재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수량이 줄어들면 수력 발전이 힘들어지므로 우즈베키스탄은 전기를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4계절 중에서 겨울이 되면 타지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타지키스탄은 자국의 겨울철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려고 시도하였다.

타지키스탄으로 전력을 보내는 구조 역시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의 출발점은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전기를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받아서 재수출하는 데 있다. 2007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기를 2012년까지 매년 겨울철마다 타지키스탄에 12억 kW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합의하였다. 여기서 양국이 가지는 문제점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기가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여 타지키스탄으로 간다는 데 있다.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1kW당 0.3센트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2010년 1월에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전기선을 끊어버렸다. 우즈베키스탄은 매년 동절기에 물 부족을 경험하면서 타지키스탄에 수력 발전기를 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물이 방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물 사정이 좋지 못한 우즈베키스탄이 이러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자국을 전력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로군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협곡에 세워지는 로군담은 높이가 335m에 달하며, 3,6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공사계획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독립 이후 전개되었다. 그러나 타지크 내전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최근에 다시 재개되었지만, 문제는 타지크 정부가 외국 자본을 받지 않고 건설하겠다는 점에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발전소를 민영화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며, 부족한 공사 비용을 국민의 기부를 받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타지크 정부는 이미 댐 건설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기부 가능한 모금액이 1억 5,400만 달러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는 타지크의 214만 7,000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한 달 평균 월급인 미화 80달러 정도를 기부하면 도달하는 금액으로 추정된다. 타지크 언론들은 이런 움직임에 회의적이며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로군 수력 발전소



건설 최종 단계에는 25억 달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펀드 모집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sup>132</sup>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발원하는 물을 면화 재배에 활용하기 때문에 양국과 수자원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3국은 여러 차례 수자원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물을 공급하는 대신에 천연가스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원을 가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물을 무기로 주변국들을 점차 위협하고 있으며, 물을 공급하는 대가로 자국에 필요한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원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89년 대표적인 면화 재배 지역인 페르가나에서 수자원을 둘러싸고 민족 간 충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독립 이후 ‘역내수자원협력위원회(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이하 ICWC)’를 조직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133</sup> 그러나 지금까지 이 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수자원 문제가 국가 간 분쟁으로

---

<sup>132</sup>.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113009.shtml>> (검색일: 2010.8.1).

<sup>133</sup>. ICWC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자원부(ministers of water resources) 장관들이 분기별로 모여서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강의 물 분배, 수질관리, 모니터링을 합의제결정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1998년 시르다리아 협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http://waterwiki.net/index.php/ICWC\\_-\\_Interstate\\_Commission\\_for\\_Water\\_Coordination](http://waterwiki.net/index.php/ICWC_-_Interstate_Commission_for_Water_Coordination)> (검색일: 2010.8.1).

까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sup>134</sup>

중앙아시아의 환경 문제가 가지는 특징은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랄 해와 카스피 해는 국제 바다이며,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강은 국제 하천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 이후 ‘역내아랄 해기금(International Fund for the Aral Sea: 이하 IFAS)’을 설립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적 협약도 체결하였다.<sup>135</sup> 그러나 실제로 각국의 개별적인 상황으로 역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세계적인 추세인 녹색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3년부터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 3월 교토의정서에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참여하였다.<sup>136</sup>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 1월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 1월에 유엔개발계획(UNDP)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녹색투자(Green investment)를 체결하였다.<sup>137</sup>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2005년~2010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부

---

<sup>134</sup>-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42808.shtml>> (검색일: 2010.8.1).

<sup>135</sup>- 중앙아시아 5개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은 1998년 4월 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체결한 ‘Joint Declar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inisters of Central Asia’가 대표적이다. 자세한 협약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www.unescap.org/esd/environment/soe/2000/documents/CH20.PDF>> (검색일: 2010.8.1).

<sup>136</sup>- 카자흐스탄 정부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문헌 참조. Концепц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03~2015 годы - Астана, 2003, Концепция переход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на 2007~2024 гг. - Астана, 2006.

<sup>137</sup>- <<http://iqtisod.zn.uz/1744>> (검색일: 2010.8.1).

프로그램(전체 에너지 생산의 2.5% 증대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태양열 발전을 전력 생산 증진 정책으로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sup>138</sup>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2차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녹색성장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와 추진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 (나) 협력방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 시기에 형성된 인위적 환경오염과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과 사막화 현상 때문에 대기와 토양의 환경오염과 경작지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문제는 단일국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5개국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은 더욱 힘든 국면에 있다. 게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각국이 처해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이 달라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환경오염의 개선, 수자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녹색성장의 추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방안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의 개선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구소련으로 물려받은 핵 실험장이었던 세미팔라틴스크 지역의 토양오염,

---

<sup>138</sup> 윤성학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pp. 49~50.

지금도 운영 중인 바이코누르 우주선 기지의 대기 및 토양오염, 면화 재배를 위해 고갈되고 있는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야 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생한 아랄 해의 고갈과 환경 문제 등은 단일국이 해결할 과제가 아니므로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4년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이하 UNCCD)과 카스피 해 환경 프로그램(CEP), 텐산 산맥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프로젝트, 아랄 해를 위한 협력 발의 등 3가지 협력사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서방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전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더욱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한국이 협력을 위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을 한국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유도하는 역할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 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 먼저 한국이 중앙아시아 역내 기구인 IFAS에 회원국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후 이 기구가 필요로 하는 자원 문제의 국제사회 지원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ODA를 환경 문제에 지출하는 것과 해외봉사단들이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진다.<sup>139</sup> 후자를 위해서는 ‘주고받는 거래(give-and-take)’가 필요하다. 구소련부터 축적되어 온 토양오

<sup>139</sup>. 아랄 해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수목 사업 등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염 처리기술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부분을 지원하여 기술력을 이전받아야 한다.

둘째, 수자원 문제 해결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 분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국은 일차적으로 특정국을 위해서 댐을 건설하는 등 균형 잡치지 못한 협력은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수원에서 떨어져 있어서 수자원 배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이 상류에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댐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한국의 강력한 지지 세력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CWC에 회원국으로 참가하여 해당국들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아무다리야 강 주변의 도시들은 목전에 물이 흘러가지만, 하루에 상수도 공급을 6시간(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만 받는다. 이러한 문제는 수자원의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상수도 시설이 현대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보유한 첨단 상수도 기술이 접목된다면, 아이러니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친환경 기술 도입, 자원 보존, 에너지 효율성 강화, 대체에너지 도입을 위한 조건 등이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위와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스텝 지역에 풍력 발전소와 태양열 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력 사업 등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촌지역은 마을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의 풍력 혹은 태양열 발전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2차 산업에 경제 발전을 맞추고 있는 중양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친환경적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양아시아의 환경오염, 수자원 문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협력방안은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담스러운 재정적 협력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 (3) 사회·문화 교류

#### (가) 입장

1937년도에 중양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을 통해 한류가 소개되고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구축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고려인이 소개한 한류는 음식 문화에 국한되지만 이후 한국 기업의 진출과 현지 중양아시아인의 한국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등에 힘입어 한류는 이미 문화 교류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가치인 장유유서와 효(孝)가 이 지역과 코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는 한류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한국 상품에 대해 높은 가치가 중양아시아 각국에서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 중양아시아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류로 인해 중양아시아인의 한국 방문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중앙아시아로 평가받는 것과 연계성을 가진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족들 역시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코리아 매력 확산에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적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인 공간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주로 경제적 목표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정부 주도의 문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설립된 ‘한국교육원’이다. 이 기관은 한국 문화의 소개, 한국어 교육에서 출발하여 점차 사업 분야의 범위를 확장하여 고려인만을 위한 기관이 아닌 전체 해당국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한류’이다. 고려인은 물론 해당국 거주 이민족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인프라 부족, 왕래의 어려움, 한국 문화예술인들의 인식 부족, 홍보 부족, 그리고 부정기적인 교류의 특징 때문에 동아시아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평가될 만큼 현지 국민의 호응이 높음에도 중앙아시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출연자들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대변해 준다. 따라서 한국 문화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해당국의 특수성 이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홍보의 강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협력방안

중양아시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구소련 붕괴 이후부터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후발 경쟁국들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과 국내의 인식 부족으로 초기의 투자에 대한 호응과 현재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상품의 우수성과 국가적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문화 진출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대한 전략 목표를 수립하기 전에 첫째, 현지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 둘째, 세대 간 문화 성향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 셋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문화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 넷째,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 등과 같은 전제조건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키는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인의 세대, 학력, 직업 등을 중심으로 문화 성향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민족·다문화 공간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의 구성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 성향 조사를 통해 한국문화의 진출 가능성과 분야를 선택한다. 동아시아에 나타났던 한국형 대중문화(한류)에 국한된 문화 진출과 성공 사례는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소비에트세대, 개혁 및 개방세대, 독립세대를 중심으로 학력 및 성별을 토대로 시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동질성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토착민족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과 접촉했던 북방의 유목민 출신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대가족제도 선호, 장유유서의 전통, 마을공동체, 민간신앙, 고려인을 통한 한국 문화의 체험 등은 중앙아시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개발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국민이 가지는 전통적 의식과 사고방식이 한국문화와 공유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면 소개될 한국 문화의 분야가 확정될 것이다.

셋째, 다른 해외 문화의 중앙아시아 진출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 이슬람권 문화의 진출, 역사적 관계를 통한 인도, 러시아 문화의 진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의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진출 전략에 참고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되는 터키 문화, 인도 문화, 그리고 러시아 문화가 자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넷째, 제도적 인프라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에 한국 문화의 소개는 기존의 한국교육원과 재외공관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문화의 소개 개념에서 탈피하여 진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도적 인프라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의 유라시아 확장 및 서진을 고려한다면 점진적으로 기관의 확대 개편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한국대중문화센터, 태권도 전문체육관 건립 등이 있다.

## 다. 정책적 고려사항

중앙아시아는 정치·경제적 중간세력이 부재한 블루오션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강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이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강화, 송유관과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과 같이 정치적·경제적 파워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3강의 경쟁을 ‘신 거대 게임(The New Great Game)’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3강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외 관계 및 경제협력의 국가적 이익이 해당국의 중요한 국가적 전략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미국·EU와 중국·러시아(SCO를 중심으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각국은 SCO를 중심으로 후자에 의존적이지만 전자와의 관계를 통해 후자를 견제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는 주변 4강과의 관계가 공고히 된 위에서 외교의 지평을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하고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세부적으로 3강의 경쟁 구도와 크게 양대 구조(미국·EU와 중국·러시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이들과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소통을 증대할 수 있는 중견세력 및 중견국가가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일본과 EU 회원국은 미국에 의존적이고 주변의 중동, 인도 등은 중앙아시아 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경제적 역량을 인정받은 한국이 중견세력으로 그 기능을 한다면 이해당사국들로부터 명분과 인정도 받고 효과도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비록 터키가 이러한 역할을 추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적 역량의 부족과 중앙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재 구소련 공화국에 속했던 15개 중에서 북한대사관이 설치된 곳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두 곳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유일하며, 해당국은 절대적인 친한(親韓)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상위 그룹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외에도 남북과 동시에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하위 그룹의 국가 형성에 중앙아시아 5개국이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국가들은 지금도 러시아와 국제질서 및 지역정치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루트의 확보와 우리의 입장 지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남북통일에 대한 남한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우리는 ‘다국경,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게 된다.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이미 이러한 사회를 유지한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사한 환경의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사회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국경,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전략에 또 다른 벤치마킹 대상 지역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국경 시대에 대면하게 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중앙아시아를 통한 양공작전이라고 여겨지는데, 가로축으로 ‘중앙아시아-중국-한국’ 그리고 세로축으로

‘중아시아-러시아-한국’이라는 구도 속에서 양국을 압박하는 파트너로 이 지역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압박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아시아 각국들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산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아시아가 가지는 최대의 가치와 장점이 ‘유라시아 물류의 허브’ 기능과 ‘에너지 자원의 미래 공급처’이기 때문에 친한(親韓)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유라시아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1) 사안별 정책 우선순위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 대상 지역으로서 중아시아는 지리적인 장점과 이를 통한 지정학·지정학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입장과 이를 해결하려는 협력방안을 경제, 에너지 및 기후,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중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체제 전환기의 극복 과정을 살펴보면, 중아시아 5개국이 1991년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정치·경제의 체제 전환은 아직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은 과거 우리가 가졌던 안보 문제+경제 문제와 유사한 양상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5개국은 체제 전환이라는 환경 속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I  
II  
III

둘째, 성장과 환경 사이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2차 산업을 통한 성장은 궁극적으로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개발도상국형인 자원 개발과 굴뚝산업의 성장을 통해 나타나는 환경오염은 선진국이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각국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두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므로 자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를 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자체의 예산으로 문화 교류를 쌍방 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교류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상호 간 문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국의 국립무용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만 가능하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취지인 첫째, 21세기 ‘위대한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신아시아 협력 외교구상, 둘째,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첫째,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아시아 협력 제안, 둘째,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셋째, 문화코리아 매력 외교 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제협력 분야와 관련,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로 경제 진출을 단행하여 상호 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ODA와 EDCF를 통한 우리의 맞춤형 지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면,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체제 전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위대한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참여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에너지 및 기후 변화의 대처와 사회·문화 교류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과 관련, 이 문제는 중앙아시아 5개국들의 복잡한 문제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의 협력방안은 해당하는 세계기구들과 공조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지원은 다른 국가에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댐을 건설해 주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적성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5개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앞의 두 가지 전략이 우선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문화의 교류와 관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우리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지속적으로 이식시켜야 한다. 물론 우리의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해당국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류를 통해 지한파와 친한파를 양성하는 것은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우리의 상품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당국으로부터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강화가 절대적이다. 특히 성장하는 유년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 (2) 고려사항

### (가) 중앙아시아 국가별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각국의 관계는 비록 ‘투르크(Turk)’라는 동일한 민족성과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적·문화적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스피 해 석유 개발을 통해 이 지역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헤게모니 다툼은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를 먼저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마저도 이들 국가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 전략은 ‘다자 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양자 간’으로 가야만 한다. 두 국가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양국의 관계는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 두 국가 중에서 한 국가만 먼저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중앙아시아 지지 구도는 붕괴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양국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따라오기 어려운 국가라고 하더라도 후자를 우선적인 파트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지는 인구, 경제력,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지금도 ‘한국·중앙아시아’라는 타이틀로 회의나 포럼이 개최되는 데 이것은 이 지역의 각국으로부터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전략적 부재라고 판단된다. 지금의 다자 관계는 양자 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양자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나오는 공통의 분모를 찾아서 다자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만 중앙아시아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도 앞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가지는 관계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력을 바탕으로 차별화하여 접근해야 하는데, 1강(카자흐스탄), 2중(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약(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달리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일한 접근은 5개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에 대한 민족적·문화적 가치의 존중

비록 중앙아시아에 지금도 러시아인이 존재하고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각국의 중심 세력은 토착민족인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타지크인, 투르크멘인이며 이들의 문화가 상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당 지역에서 한국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정작 이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가치는 무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종류의 행사에서 여전히 러시아어만 대회 타이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좋은 본보기인데,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중앙아시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다) 중앙아시아에서 4강과의 이해 충돌에 대한 대책

현재까지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4강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이들과 경제적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 특히 2차 산업, IT 그리고 3차 산업에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의 전 분야에 대한 경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확실한 영역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조업은 우즈베키스탄에 IT는 카자흐스탄에 그리고 3차 산업은 키르기스스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해당국 정부가 이미 2차 산업의 육성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우선으로 경제 발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자원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 IT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인프라가 부족한 이곳에 제조업보다는 IT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은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관광대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3. 서남아시아

#### 가. 인도의 의미와 중요성

##### (1) 인도와 한국과의 관계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방문 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천명하였고, 그 후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는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지역으로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ASEAN), 서남아시아(인도),<sup>140</sup> 중앙아시아(5개국),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서남아시아의 맹주인 인도는 2009년 8월 7일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발효는 2010년 1월 1일)하였고, 2010년 1월 25일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인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의 또 다른 핵심 축을 마련하게 되었다.<sup>141</sup>

근년에 들어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0년 1월 말 인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5일 인도 총리실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수교 3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

<sup>140</sup> 지리적으로 서남아시아라는 것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의 7개국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는 1985년 12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제1회 남아시아 7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과 함께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헌장’을 채택하면서 정식으로 SAARC를 발족시켰다. 이 글에서는 서남아시아의 맹주인 인도를 위주로 언급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sup>141</sup> 유명환, “새로운 비전 연 한·인도 관계” 『중앙일보』, 2010년 1월 26일, p. 33.

다.<sup>142</sup> 양국 정상들은 양국 관계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1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인도 수형자 이송조약, △IT협력 양해각서(MOU),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MOU 등 주요 협정 및 MOU를 체결 및 서명하였다. 그리고 CEPA의 원활한 이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통상장관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sup>143</sup> 재무장관 회의와 산업부서 간 투자촉진협의회를 활성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정상회담은 우리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상당 부분 없애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sup>144</sup>

이 대통령의 인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도와 ‘특별한 사이’로 알려졌던 이명박 서울시장은 퇴임 이후 ‘인도의 실리콘밸리’라는 방갈로르를 방문하였고, 인도경제인연합회 연설에서 “한·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인도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상원, 하원 주요 인사 및 주정부의 장관과 고위관리들의 한국 방문과 한국 인사들의 인도 방문이 이어져 왔다. 특히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소망갈리 몰라야 크리쉬나(S. M. Krishna) 인도 외무장관과 만나 천안함 사태 국제 공조와

142. 한국이 전략적 관계를 맺은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인도가 13번째이고, 인도는 한국과 9번째로 전략적 관계를 맺게 된다.

143. 제5차 한·인도 공동위원회(2007.9.17)가 열려 양국 간 제반 협력 사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144. CEPA가 한국과 인도 양국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다양한 통상과 기술상의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도 측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글로는, Rajani Baburajan, “CEPA: Making a New Era in Indo-Korean Partnership,” *Asia-Pacific Business & Technology Report*, Vol. 1, No. 4 (September 2009), pp. 10~11을 참조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협력 등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제6차 한·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성숙한 세계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따라 한·미 전략동맹관계에 이어 인도와도 다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분야가 경제이고 외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65주년 경축사(2010.8.15)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포괄적인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그리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면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반도의 통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북아 협력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인도 포함)와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면서 우선 미국과는 전략동맹의 비전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해가고 있다. 신아시아 외교가 이번 정부에서 부상하게 된 대외적 요인들로는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의 부상, 한국과의 FTA 체결, 에너지 안보·자원 외교, 테러와의 전쟁, 지역 강대국 간의 역학 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된 중국, 그리고 중국에 필적할 수 있는 신흥강대국 인도는 넓은 국토와 인구, 경제 규모 및 잠재력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도가 한국에 주는 의미와 전략적 중요성은 단순히 무역과 투자, 외교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차원 그리고 안보군사적 차원까지 실로 광범위하다.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인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의 대외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소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도로부터 교훈과 협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인도의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는 분명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격하게 공존하는 국가이고, 빈부 격차의 심화,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 법제도 및 행정부의 집행 과정상의 차이 때문에 한국이 공통점을 발굴하고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국가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추진해온 우리의 외교와 통상 정책이 인도라는 신흥 강대국을 잘 파악하고 상대하려면 많은 시간과 재원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증진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대외 정책, 평화 정책, 통일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조능력(enabler)이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분야별로 갱신하고, 인도의 대외 정책을 분석하며,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인도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인도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분야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미 GDP 세계 10위권(구매력지수 PPP로는 4위권)에 진입한 인도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할 뿐이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인도라는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를 활용하여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데 있어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에서 작성되었다.

## (2) 인도의 대외정책

### (가)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 정책

인도의 등장을 중국과 함께 “등장하는 영향의 중심(emerging centers of influence)” 또는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다른 주요한 영향의 중심(other key centers of influence)”으로 평가했던 미국은 인도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을 선언하였다.<sup>145</sup>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도 인도와의 경제, 외교, 국방 등 여러 분야의 관계를 강화하고, 외교, 국방, 재무장관, 정상회담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도와 ‘글로벌 안보, 인간 개발, 경제 활동, 과학

<sup>145</sup>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QDR 2010)와 백악관에서 발표한 ‘2010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2010)’를 참조할 것. 미국은 인도와 경제, 사회, 환경 및 안보 분야의 동반자 관계 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동반자 관계를 통해 인도가 전 지구적 대테러 노력과 비확산에 기여하면서, 빈곤 퇴치, 교육, 위생,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의 국방 및 군사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로서는, Peter R. Lavoy and Robin Walker,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A Track-Two Dialogue for Long-Term Cooperation,” a report from the conference organized by the Center for Contemporary Conflict,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and the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New Delhi, April 25~26, 2007을 참조.

기술' 분야의 밀접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도 신흥 강대국인 인도와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인도의 대외 관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 이외에도 미국, 일본, EU, 한국, 호주, 이란, 이스라엘 등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의 관계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인도의 전략적 관심은 남아시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50여 개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투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도가 전통적인 비동맹주의와 자주외교와는 상당히 다른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반미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의 아시아 내 주둔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하에서 반대하였던 것이 인도였다.<sup>146</sup>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아시아 내 주둔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전혀 고려하려 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영국의 세력에 균형을 가하기 위하여 소련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면서 우방으로 오랫동안 지원하였던 미국의 정책은 인도로 하여금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비동맹주의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특히 9·11 테러 사태 이후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은 큰 변화를 가져왔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게 되었다. 또 인도는 근년에 들어와서 21세기 중반까지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3의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확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안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sup>146</sup> Stephen P. Cohen, *Emerging Power Indi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p. 231.

미국이나 일부 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인도는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서나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의 기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영토와 주권의 보전이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역내 이슬람화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인도로 하여금 주변국들로부터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하였다.<sup>147</sup> 그리하여 인도는 1998년 성공적으로 핵 실험을 마친 이후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안보 전략 교리를 작성(1999년)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가장 큰 안보적 위협과 도전을 불안정하고 숙적인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 경제대국과 군사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sup>148</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강대국들이 벌여온 핵무기 개발 경쟁에 반대하고 핵무장 해제와 비동맹주의를 표방하여 온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이하 NAM)<sup>149</sup> 또는 G77의 주도 국가였던 인도기<sup>150</sup> 다시 안보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

147- <[www.dni.gov/nic.PDF\\_GIF\\_research/defensemktks/indi.pdf](http://www.dni.gov/nic.PDF_GIF_research/defensemktks/indi.pdf)>.

148. Stephen F. Burgess, "India's Emerging Security Strategy, Missile Defense, and Arms Control," *INSS Occasional Paper* 54 (Colorado: USAF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USAF Academy, June 2004).

149. 비동맹이란 1954년 네루가 스리랑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5대 기둥의 하나로 사용하였던 용어로서, 1955년 반동회의를 거쳐 1961년 베오그라드에서 비동맹운동이 창립되었다. 2010년 현재 118개의 가입국과 18개의 옵서버 국가가 있다.

150. 독립한 이후로 인도의 외교 정책의 기초가 언제나 다른 국가들과 반대였다던 점을 문화적, 종교적 영향은 받은 역사적 유산이라는 흥미로운 관찰로는 Mehmet Ozkan, "Tenets of Indian Foreign Policy and Indo-U.S. Partnership," i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July 22, 2010, <[http://www.idsa.in/idsacomments/TenetsofIndianForeignPolicyandIndoUSPartnership\\_mozkan\\_220710](http://www.idsa.in/idsacomments/TenetsofIndianForeignPolicyandIndoUSPartnership_mozkan_220710)>을 참조.

하고 강대국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현실은 아이러니하지만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원활한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공급이다. 인도에 있어 향후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에너지가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과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되어 왔다. 여느 선진공업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원유와 석탄, 원자력 및 천연자원을 확보하는데 국력을 결집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안보 전략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초점이 지속적으로 맞추어질 것이다.<sup>151</sup>

셋째는 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이다. 이미 오랫동안 인도 해군의 목표였던 해상교통로의 보호는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는 인도의 비전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인 ‘2004 인도 해양독트린(2004.6.23 공개)’에도 잘 반영되어 있었다.<sup>152</sup>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해양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표된 이 독트린 하에서 인도는 2015년까지 2척의 항모를 포함한 20척의 함정, 항공기, 장비 구매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소개하였고, 2020년에 이르러서는 핵미사일발사잠수함을 획득(2030년까지는 24척 계획)하고 인도양에서 걸프 만까지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수역에서 해상교통로의 통제를 목표로 타격 능력, 지휘 통제, 정찰, 첩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 후 2009년 8월에는 급속하게

---

151. 김창수, “아시아·태평양: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한국국방연구원 편, 『2025년 미래 대예측: 미래의 세계를 읽는다』 (서울: 김&정, 2005), pp. 37~57을 참조.

152. India Defence Consultants, “Indian Maritime Doctrine Revisited: An IDC Analysis,” New Delhi, April 10, 2005; “Sharpening India’s Maritime Strateg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 speech at the National Defence College, November 2005를 참조.

변화하는 지전략적 환경, 작전의 복잡성, 해양 분야의 변환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도 해군이 새로운 해양독트린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sup>153</sup> 해상교통로의 확보, 해저자원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남극 개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양력(해군력)의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넷째는 다양한 비 재래식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대테러전과 관련한 정보를 폭넓게 교환하고 미국과 많은 합동군사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의 성취는 인도 정부가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군과 민간 정부 부처 간의 조정, 특히 군과 안보기관, 외교통상부, 재무부, 상공부, 에너지부 간의 시너지 효과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도의 대외 정책의 기초를 살펴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구즈랄(I. K. Gujral) 총리 같은 이는 자서전 성격의 저서에서 인도의 대외 정책을 인도하는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인도인의 공감을 사고 있다. 즉, 호의적 근린 정책, 타국의 국익에 반하는 영토 진입 반대, 내정불간섭, 영토 보전과 주권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그것들이다.<sup>154</sup> 이러한 차원에서 인도는 비동맹 국가들 가운데서도 남미의 신흥 강대국인 브라질 및 아프리카의 맹주 남아공과의 관계도 중시해서 'IBSA(India-Brazil-South Africa)'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인도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동방정책(Look-East Policy)'은 애초에 는 중국이 버미(현재 미얀마)에 대해 눈독을 들이는 것에 대한 대응의

---

<sup>153</sup>-Ch. Narendra, "Indian Maritime Doctrine released," *Allvoices*, August 28, 2009, <<http://www.allvoices.com/contributed-news/4025698-indian-maritime-doctrine-released>>.

<sup>154</sup>-I. K. Gujral, *A Foreign Policy for India* (New Delhi: External Publicity Divisio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1998), pp. 23~24.

일환이기도 했었는데, 이 동방정책은 동남아 국가들을 넘어서 동북아 국가들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도가 경제 성장과 함께 지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과 동남아 제국(특히 태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이들과 FTA를 형성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인도는 정치·군사적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 포위전략(중국 포위전략)을 고려한 대응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항미(抗美) 3각 관계” 내지 “3국 공동전선”의 구축이라는 다소 과장된 평가가 있지만,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좀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인도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미국 및 중국과 공생하기 위하여 유리한 균형 전략, 즉 ‘양다리 걸치기(hedging)’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sup>155</sup>

한편, 서남아에서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중국 그리고 이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한 파키스탄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에서 미국과 협력

---

<sup>155</sup> 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인도가 벌이는 새로운 세력 게임에 대한 최근의 글로 Ashley J. Tellis, C. Raja Mohan, Alyssa Ayres and Richard Ellings, “Power Realignment in Asia: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December 2, 2009, <<http://carnegieendowment.org/events/?fa=eventDetail&id=1501>>; C. Raja Mohan and Ashley J. Tellis, “The Strategic Dimensions of U.S.-India Relations,” September 20, 2010, <<http://carnegieendowment.org/events/?fa=eventDetail&id=3020>>.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도 중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인도와 미국이 중국의 급격한 국력 신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국이 하여야 할 일은 대중국 봉쇄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효율적 통치라는 주장은 George Perkovich, “Toward Realistic U.S.-India Relations,” *Carnegie Report* (October 2010)을 참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 인도의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와 중국 간의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경쟁 관계, 남아시아에서의 인도의 지역 패권 추구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 안보에서 인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도의 등장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내 국가들을 끌어당기는 경제적 자석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란,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전략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서방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는 지역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은 인도가 중국에 대해 잠재적으로 ‘지정학적 평형추(geopolitical counterweight)’가 되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대미국

냉전 이후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했던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sup>156</sup> 심지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맹 관계로까지 격상시키려는 미국 내 일부의 노력(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대테

<sup>156</sup> 인도는 2005년 부시 행정부의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of 2005)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전략협력, 에너지와 기후 변화, 교육과 개발, 경제, 무역, 농업, 과학기술, 보건과 개혁이라는 5대 주요 분야에서 전략대화를 추진해 왔다. 자세한 논의로는 Thomas Mathew et al., “India-United States 2020: United States, Europe, Nuclear Cluster,” *IDS Policy Brief*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October 2010).

러 전쟁)<sup>157</sup>에 대해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중국이 인도양 연안국가들(방글라데시,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대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도도 점차로 대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로부터의 국토 방호,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해상교통로의 보호 등은 인도와 미국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일례로, 인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연계전략(Af-Pak 전략)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미국 측에 제공하고 있다.

인도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 국방, 외교, 발전의 3D 전략을 추진 중인 미국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 및 차관급회의(국방정책단회의, India-U.S. Defence Policy Group meeting)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sup>158</sup> 2009년 11월 만모한 싱 총리의 방

157. 이와 관련된 자료로서는 Lavoy and Walker,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A Track-Two Dialogue for Long-Term Cooperation”을 참조할 것.

158. 인도와 미국은 2005년 국방 본틀(Defense Framework), 2007년 소위 ‘123 합의’라는 것에 합의하여 국방 분야의 협력을 시행해오고 있다. 미제7함대 예하 전력은 인도양에 전진주둔하면서 인도와는 Habu Nag(2006년부터 연례적으로 시행한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구조 연습, 최근에는 2010.9.29~10.5), Spitting Cobra라는 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양국의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글로는 P. Stobdan (eds.), *India-Russia Strategic Partnership: Common Perspectives*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0)을 참고할 것. 양국 국방장관 및 국방차관회의는 Ministry of Defence, Government of India, *Annual Report 2009~2010*, p. 176.



미에 대한 답방으로 2010년 1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4개국 순방 중 인도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양국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부각했었지만, 이제는 공통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인도의 대미정책은 추진될 것이다.

#### (다) 대중국

중국과 1954년 평화공존 5원칙(영토보전과 주권의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에 합의한 이후 인도는 오랫동안 가장 큰 인접국 중국을 협력의 대상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개발도상국, ‘유사한 세계관’ 그리고 제국주의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비동맹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영토 문제, 티베트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의 요인도 안고 있었다. 1996년에 중국과 수립한 ‘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는 2005년 4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인도 방문기간에 동 언문이 채택되고 양국의 관계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sup>159</sup> 그만큼 과거의 대결 구도를 종식하고 정치, 외교,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전략을 지지하기 위하여 인도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도는 대테러 전쟁에서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sup>159</sup> 중국과 인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병광,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파키스탄, 한국 사례의 비교와 시사점,” 『외교안보연구』, 제6권 1호 (외교안보연구원, 2010.3), pp. 37~64 가운데 특히 pp. 46~49를 참조.

그렇지만 최근의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태세 등은 인도의 대중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물론 과거에도 인도의 국방 정책, 특히 해양독트린이 인도양에서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근년에 들어와서도 인도는 인도양에서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국방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경계하고 견제하려는 양면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160</sup> 최근 인도가 미국과 시행하고 있는 안보대화나 군사훈련 및 연습은 대부분 중국 견제(특히 인도양에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통한 중국과의 우호관계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만으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제2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중국과의 관계(친디아, Chindia)를 증진하는데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인도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 이어 인도가 새로운 아태 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면 지정학적 상황이 엄청난 변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인도는 미국 및 중국, 일본, 한국(통일한국)과 모두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아·태 지역의 신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는 인도가 새로운 균형자 내지 안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

<sup>160</sup> 예를 들면, 인도의 국방백서(Ministry of Defence, Government of India, *Annual Report 2009~2010*, pp. 6~7)는 이 점을 암시하고 있다.

## (라) 대일본

인도는 일본과 ‘전략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를 맺고 있다. 인도는 지속적인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이룩하여 언젠가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독일과 일본에 이어서 인도와 브라질이 함께 이 지위를 얻기 위하여 외교력을 총동원해 일본과 다층적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일본의 공적 개발 원조(ODA)를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일본의 자금과 기술로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2004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별도로 갖고 전 세계적 차원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안보 분야의 협력에도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 후 2010년 8월 21~22일에는 제4차 인도·일본 전략 대화를 뉴델리에서 거행하여, 일본의 오키다 카츠야 외상과 인도의 크리쉬나(S. M. Krishna) 외무장관 간에 양자,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현안을 토의했다. 인도는 일본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첨단기술 교역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는 일본과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안보구조에 대해서도 협력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대화’라는 것을 신설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행 중인 양국의 개발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국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본과 민간 원자력협력을 추진 중이다.<sup>161</sup> 이러한 인도와

<sup>161</sup> Joint Press Interaction of External Affairs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of Japan, August 21, 2010, <<http://meaindia.nic.in/speech/2010/08/21>>.

일본의 특별한 관계와 급속한 친밀관계는 중국 견제와 중국시장에서 인도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일본과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인적 교류와 합정의 상호 방문은 물론이고, 방산협력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조를 위한 다자 연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군의 동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을 검토(2010.5)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대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는 재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무역과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에너지 공급, 첨단 무기의 수입 이외에도 테러 및 기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에 있어 러시아는 전략적 우위 부여, 카슈미르와 테러,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 원자력 제공 때문에 중요한 국가이다.<sup>162</sup> 또한,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SCO 차원에서 인도는 참관국으로 러시아는 회원국으로 다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양자 차원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 군사연습을 시행하고 있다.<sup>163</sup>

---

<sup>162</sup> 자세한 논의는 P. Stobdan (eds.), *India-Russia Strategic Partnership: Common Perspectives*, pp. 149~164를 참조할 것.

<sup>163</sup> 최근의 사례로는 인도의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시행한 EX INDRA-10 (2010.10.23)을 들 수 있다. 동 연습은 3단계에 나누어 소규모 전투팀 차원에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고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PIB Press Release,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EX Indra-10: India-Russia Joint Exercise Culminates at Ranikhet," October 23, 2010을 참조할 것.

다음으로, 인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해서도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를 위하여 협의하고 지원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는 파키스탄의 안보이고 인도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주변 지역의 철도와 도로망 건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대륙과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중동과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망, 물류망을 구상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인도는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인도의 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즉,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에 참여함으로써 “안정, 독립, 번영의 아프가니스탄”을 지향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군사적 차원의 지원만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행하고 있다.<sup>164</sup>

인도 정부는 강한 아프가니스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아프가니스탄을 기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내륙국인 중앙아시아와 이란으로 나가는 관문이므로 인도의 전략적 사고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의 회원국들로 고도의 외교 회담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는 이를 통해 아프간 재건 사업(사회간접자본, 전신 전화,

<sup>164</sup> 조지 C. 마셜 유럽안보연구센터(George C. Marshall European Center for Security Studies, GCMC, 벨기에 브뤼셀 소재),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정책재단(FRP)과 정책연구센터(CPS)가 공동주최하고 주우즈베키스탄 미국 대사관이 후원한 국제회의(주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문제와 재건 전망,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09.6.17~18)의 제3분과 회의(주제: 아프간 분쟁 해결과 안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2009.6.18)에서 니르말라 조시(Nirmala Martand Joshi, 인도-중앙아 재단 이사장 겸 인도 국립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내용.

전력 발전, 교육, 건강 등)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다른 근린 국가인 이란과도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현재에도 이란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165</sup> 그렇지만 이란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작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인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대이란 정책 집행에서 협력의 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와 이란의 경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를 고려하면 양국은 앞으로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는 다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3) 소결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전략적 중요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의 국가안보전략과 대외 외교 정책을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한국에 대한 인도의 외교 정책을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의 대외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인도는 과거 냉전시대, 비동맹중립주의시대와는 달리 이념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실적 국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인도의 대외 정책에서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과 인도 간의 외교 관계 증진과 나아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sup>165</sup> 최근의 인도와 이란의 관계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S. M. Krishna, speech at “IDSA-IPIS Strategic Dialogue on India and Iran: an enduring relationship,” New Delhi, July 5, 2010을 참조할 것.

일찍이 인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인도 정부는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다짐해 왔다. 특히 양국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을 제안해 왔다.

인도는 대외 정책의 기초인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 및 남북 등거리 외교 추구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과는 1962년 3월 1일 영사 관계가 수립된 이후 동년 7월 21일 주뉴델리 총영사관을 개설하였고, 1968년 10월 주평양 인도 총영사관 개설에 이어 1973년 12월에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간디 수상의 재집권에 따라 그의 친소정책에 편승하여 인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였지만, 결국 북한과 인도의 관계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하다가 근년에 들어와서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퇴보하고 말았다.

## 나. 분야별 입장 및 협력방안

### (1) 경제협력

인도는 2009년 말 현재 GDP 1조 2,961억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성장률은 7.4%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급성장하는 경제이다. 한국은 인도와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 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FTA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CEPA를 체결하고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인도는 아직 EU, 중국, 일본과는 FTA를 맺고 있지 않아 한국으로서는 인도 시장을 ‘선점’하게 된 셈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양국은 경제·통상협력

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양국 교역액을 2014년까지 300억 달러로 증대한다’는 다소 안전하고 달성이 쉬운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좀 더 일찍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인도 교역 규모는 2002년의 26억 달러에서 2004년의 55억 달러, 2008년의 156억 달러, 2009년의 122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sup>166</sup>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월 말 정상회담에서 인도에 진출한 380여 한국 기업의 투자 및 기업 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고, 만모한 싱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과 투자의 규모는 양국 경제의 크기와 구조적 보완성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근년에 들어와 양국 간 상품 거래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상호 보완 분야에서 수요 구조와 비교우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수출이 주로 낮은 부가가치 상품과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국이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소수 상품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도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좀 더 다양하다. 인도의 경제전문가들은<sup>167</sup> “인도는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

<sup>166</sup> 양국의 수출입 동향과 FDI 동향에 관한 자세한 글로는 박선민·이은미, “한인도 교역 10년의 평가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Trade Focus』, Vol. 9, No. 22 (한국무역협회, 2010.4)를 참조할 것.

<sup>167</sup> Pravakar Sahoo, Durgesh Kumar Rai and Rajiv Kumar, “India-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orking Paper*, No. 242 (New Delhi: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과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국들을 넘어서 점차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쌍무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sup>168</sup>

## (2) 에너지 및 기후, 과학기술 분야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한국과 인도 양국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원자력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과 기술의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전력난 해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는 향후 20여 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시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69</sup>

2010년 1월 말 거행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인도의 원자력 건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인도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그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

---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December 2009), foreword and p. 29.

<sup>168</sup>- *Ibid.*, p. 29.

<sup>169</sup>- 유명환, “새로운 비전 연 한·인도 관계,” 『중앙일보』, 2010년 1월 26일, p. 33.

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도 “한국은 인도의 원전 건설에 참여하고 미래의 원전 기술도 공동 개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2년까지 원전 40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이미 중동 지역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성공한 한국으로서는 인도와의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을 가속하고 있다. 인도는 공개 입찰보다는 단독 지명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과 인도 정부 간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물질 및 인도 장비 등의 이전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에도 실무 협상을 개최하였다.<sup>170</sup>

후발주자인 인도는 선진공업국들이 경험한 많은 에너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인도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 부족의 해결, 환경오염의 정화 등을 통해 성장의 패턴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sup>171</sup>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고도 성장의 각종 문제를 미리 경험한 한국으로부터 인도는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동시에 녹색성장이라는 블루오션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과 함께 태양

<sup>170</sup> 인도는 현재 원전 19기(4,183MW용량)를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2만 MW, 2032년까지 6만 3,000MW 규모로 용량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김병수, 『연합뉴스』, 2010년 7월 2일.

<sup>171</sup> 진윤정, “2010 인도,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꿈꾼다,” 『친디아 저널』, Vol. 49 (포스코경영연구소, 2010.9), pp. 41~42.

광, 풍력, 조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미래의 전력, 즉 새로운 에너지 경제의 보조능력(enabler)<sup>172</sup>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건설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2003년 전력법(The Electricity Act of 2003)을 제정한 인도는 전력과 관련한 법규를 개정하고 외국 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sup>173</sup> 특히 재생가능한(renewable)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결합한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 정부가 신아시아 외교구상에서 에너지협력의 주 대상지로 선정한 중앙아시아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지만, 인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오랜 역사적, 지리적 관계를 활용하면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협력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를 공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함과 동시에 IT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전자정부를 비롯해 사회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인도 정부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sup>172</sup>-The Electricity Advisory Committee, “Smart Grid: Enabler of the New Energy Economy,” (December 2008). 동 보고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에너지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 광범위한 해결책(a broad range of solutions that optimize the energy value chai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ttp://www.oe.energy.gov/DocumentsandMedia/final-smart-grid-report.pdf>>.

<sup>173</sup>-스마트 전력의 장단점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글로는 Amanda Han, “Smart Grid,” *Asia-Pacific Business & Technology Report* (September 22, 2009), pp. 16 ~18을 참조할 것; <<http://www.biztechreport.com/story/216-smart-grid>>.

많은 대기업이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전문가, 종업원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도인 두뇌인 첨단 분야 및 기초 분야의 많은 과학자, 기술자, 교수와 학생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인도인들의 지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로서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정보기술을 무기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시장에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 개발한 상품을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는 중국, 한국, 미국, 일본과 함께 철강 생산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고 제철소의 합병과 신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가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철강에 대한 국내적 수요를 시급히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철소인 포항제철(POSCO)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POSCO는 인도 동부 오리사 주의 파라딕(Paradip) 항구로부터 남방 10킬로미터 떨어진 자гат싱푸르(Jagatsinghpur)라는 지역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4천여 에이커의 부지 매입과 현지에서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철광석 광산을 매입하여 3단계에 걸쳐 연 400만 톤(MTPA)의 철을 생산하는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sup>174</sup>

---

174. POSCO의 인도 현지 법인인 POSCO-India의 홈페이지(posco-india.com/website/project/details.htm)를 참조할 것. 수년 동안의 현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인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의 개입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4월 말에만 해도 금년 안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되었지만, 최근 또 다시 걸림돌을 만나게 된 듯하다. 이정화, 『이주경제』, 2010년 10월 13일 <www.ajnews.co.kr>. POSCO는 오리사 주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더 이상 지연할 수만은 없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인도 측에 전달한 바 있고, 동시에 인도의 카르나타카 주에도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 (3) 사회·문화 교류

뭄베이(Bombay: 현재의 뭄바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인 “발리우드(Bollywood)”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 산업이 발달하여 있는 인도에서는 매년 1,0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5% 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힌두교와 인도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에서도 생소한 주제와 저급한 제작 기술 때문에 대체로 인도 영화가 흥행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그러나 인도와 인도 문화가 발전하고 세계화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해지면 어느 외국 영화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sup>175</sup>

종교 면에서 인도(서남아시아)는 한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국민이 모두 종교심이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도가 많은 종교의 발상지로서 여행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익숙한 비하르 주의 보드 가야(붓다 가야),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바라나시(Varanasi, 영어식은 베나레스 Benares)와 부근의 사르나트(Sarnath, 녹야원 鹿野苑) 등 불교 성지, 그리고 서부 인도(아잔타와 엘로라의 석굴군, 산찌의 탑), 남부 인도(아마라바티, 나아가르주나콘다) 및 파키스탄(페샤와르), 네팔(룸비니, 카트만두)에 집중된 불교 유적지들이 불교성지 순례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sup>176</sup> 그리고 현지에 불교 사원 및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데 한국의

---

<sup>175</sup> 현재도 잘 알려있지는 않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힘든 인도를 포함한 제3세계 영화(한글 자막)와 우리 영화(영어 자막)를 주 3회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sup>176</sup> 인도정부관광국, 『인도 독립 50주년 기념 인도불교유적관광』 (1997); 정창권,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개정판)』 (서울: 민서출판사, 1998).

불자들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제인교(배화교)의 다양한 유적과 사원이 인도대륙에 산재하여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와 참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종교 여행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성 토마스)가 기독교를 전파하였던 남부 인도의 케랄라 주와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아(Goa), 그 밖에도 유럽으로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구제, 교육, 선교 등에 힘썼던 대도시들, 특히 콜카타(캘커타), 뭄바이(뭄베이), 방갈로르(방갈루르), 첸나이(마드라스) 등에도 한국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인도의 종교적, 문화적 교류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와 한국의 문화 및 사상 교류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인도는 한반도에서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던 많은 왕조들에 심대한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은 불자와 승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종교학자, 문화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의 대상이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도의 문화와 종교는 여전히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사실 한국과 인도가 양국 관계를 말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기원전 1세기경 인도 아유타국(阿踰陀國: 아요디아 Ayodhya라고도 함)의 허황옥(許黃玉) 공주가 불상과 경전, 스님과 함께 배를 타고 와서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결혼해 허황후(許皇后) 현록(懸錄)이 됐

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다. 양국 간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접촉이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러한 종교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평화사상, 평등사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갈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기타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정치·안보 분야 협력(제7항~11항)을 경제·무역 분야 협력(제12항~16항), 과학기술 분야 협력(제17항~20항), 사회·문화 분야 협력(제21항~22항),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제23항~28항)보다 앞서 기술한 것이 특이하다. 통상적인 서술의 순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제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활발히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공동성명 가운데 “양국은 고위급 교류와 접촉의 꾸준한 증가와 국방, 무역,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확대를 환영하였다(제3항)”와 “양국이 직면해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국경지역의 지역협력체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제4항)”는 내용은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외교안보정책을 외교부 차관급회담으로 격상시키고 2010년에 첫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제9항), 국방 분야의 정기 대화와 교류, 방산협력과 합작투자 가능성 검토, 국방군수 산업 공동위원회 개최에 합의한 것(제10항), 국제 해상교통 안전과 보안 관련 해군과 해안경비대 협력

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제11항)은 다른 어떠한 정상 간의 공동선언보다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인도는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다. 오랫동안 비동맹운동(NAM)의 핵심 국가를 자임해 왔고,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많은 외교적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힌디어 이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어권의 중국과 일본과 같은 언어상의 제약이 없다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경제력의 지속적인 상승과 영향력의 확대로 인도와 외교적, 군사적 교류의 확대를 원하는 국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방과 군사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시행하고 있는 인도의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고 있다. 2007~2008회계연도(2007.4.1~2008.3.31)에는 8,900억 루피(약 211억 달러)로 전년도의 8,300억 루피에 비하여 17.8% 증액되었고,<sup>177</sup> 2008~2009회계연도에는 1조 560억 루피,<sup>178</sup> 2010~2011회계연도에는 1조 4,737억 7,000만 루피로 현재의 환율(USD1=INR44.32)로 계산한다면 약 333억 달러로 GDP의 2.12%<sup>179</sup>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도 엄청난 교류와 협력의 잠재력이 있다. 이미 양국은 공고한 정치 및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177- "India's Defense Budget Rises 7%, to \$20.11 Bn," *Defense Industry Daily*, March 1, 2006. GDP의 2.5%를 약간 밑도는 금액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에 따르면 의하면 9,500억 루피로 같은 기간 동안 13.04%의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PIB Press Release, Public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June 10, 2008.

178- SIPRI는 인도의 2009~201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366억 달러로 추계하고 있다.

179- Laxman Kumar Behera, "India's Defence Budget 2010-11: An Analysis," *Journal of Defence Studies*, Vol. 4, No. 2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April 2010), pp. 50~60.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였고, 또한, ‘한·인도 방산·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05.9 체결)에 의거, 한·인도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국 간에는 정보기술 및 훈련기 수출 등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는 2011년 상반기 5억 달러 규모의 훈련기 60기 정도를 발주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180</sup> 한국은 공군 기본 훈련기인 KT-1의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등 방산 분야의 핵심은 한국의 IT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윈-윈’하자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안보, 국방, 군사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방산·군수협력 관련 양해각서(2005.9)의 이행; 안보교류 및 비밀보호 양해각서, △방위력생산 관련 시설 및 산업현장 상호 방문 및 협력;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 투자 가능성 모색, △상호 신뢰구축 위한 고위·중간급 간부의 정기적 교류 활성화; 지역포럼 및 안보관련 회의(상그릴라 회의,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sup>181</sup> 핵 안보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등)를 통한 정기적 교류; 군사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투명성 및 친선 도모를 위한 합정 교류의 활성화, 합동 해적 방지 및 수색·조난 구조 훈련 시행, △공군 합동연습·훈련 및 조종사 또는 비행교관 교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항공협력, △한·인도 관계, 미·중관계, 미·인관계,

<sup>180</sup> 홍영식, 『한국경제』, 2010년 4월 16일.

<sup>181</sup> 최근(2010.10.11~13)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차 ASEAN 확대국방장관 회의(ADMM-Plus, 주제는 ‘역내 평화 안정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인도의 A. K. Antony 국방장관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와 국방협력 제고 방안 및 방산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참조.

북한·인도 관계, 북한·파키스탄 관계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예: 국방연구원-IDSIA)<sup>182</sup>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도에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있으며, 한국에도 인도 대사관이 있지만, 아직도 무관부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주일본 인도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이 겸임하면서 필요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전부터 무관부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인도가 안보 및 국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한국에 일본과 별도의 무관부를 조만간 설치하고 운영할 당위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남아시아라는 지역의 특성 또는 인도라는 국가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 협력 가능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인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다. 지전략적으로 인도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에 둘러싸여 있어 이들 지역으로의 접근이 매우 쉽다.<sup>183</sup>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인도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

<sup>182</sup>- Narendra Sisodia and Tamal Bandyopadhyay, "Global Security Issues: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India," 2010; Changsu Kim, "The Korea-Indian Partnership for the 21<sup>st</sup> Century: Visions for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presentations at *The 9<sup>th</sup> Korea-India Dialogue*, co-organized by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and th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held at Hotel Shilla, Seoul, Korea, May 24~25, 2010.

<sup>183</sup>- 1만 4,818km에 이르는 7개국과의 육상 국경과 7,516.6km의 해안선이라는 매우 길고 복잡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매년 국경관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내무부 안에 국경관리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도가 카슈미르 분쟁, 테러와의 전쟁, 자연 재해 등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국경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Pushpita Das (eds.), *India's Border Management*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April 2010)을 참조할 것.

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신아시아 외교의 주요한 자원으로 등장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가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지역 다자협력 체제 가운데, SAARC, 영연방, 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CO, G20 정상회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하 PSI) 등의 채널을 이용하여 서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에 대하여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홍보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협력방안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정책적 고려사항

### (1)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우선순위 및 고려 요소

한국과 인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한·미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인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저변 확대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도는 안보역학상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2010.1.25)에는 매우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동시에 분야별로 예시된 협력방안들이 미국과 양국의 관계를 저해하거나 방해하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적 공공재(Global Commons)’라고 불리는 공해, 우주, 사이버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를 기반으로 그 위에 안보를 확보하는 능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동반자 능력 구축(Building Partner Capacity: 이하 BPC)’에 착안하여 한국과 인도 양국은 유사한 능력의 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양국 간에는 직접적인 군사동맹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서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소에 기능적 협력 관계를<sup>184</sup>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비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협력지침(cooperation guidelines)을 작성하고, 이 협력지침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인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인도 공동위원회와 같은 쌍무적 틀을 활용하여 상황별, 단계별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전략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인 집단이 참여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인도의 강대국 등장과 새로운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고려하여 인도가 경제, 사회·문화, 외교 및 안보 차원의 협력과 다른 한편으로 평화구조 창출에 기여하는 차원의 협력을 연계하면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회원국인 UN과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이하 IO), 각종의 다자경제안보협력체제, G20, SAARC, 유엔평화유지활동, 다국적 안보지원(소말리아

---

184. 佐橋 亮, “太平洋地域における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と三層分析法,” 『アジア太平洋の地域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ー—地域安全保障の重層的構造』(東京財團 政策研究報告書, 2010.8).

해적퇴치 등), PSI, 유엔군사령부(UNC) 등을 매체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중국의 강대국화와 패권 행사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인도를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거나 고려 중에 있다. 그렇지만 인도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국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sup>185</sup>

## (2) 인도 요소의 구체적 예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인도 양국은 과거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기후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보통신, 외교와 안보, 국방 등 협력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과 전 세계 차원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즉, 2010년 CEPA의 발효를 계기로 본격화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무역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양국의 기업들이 애로를 겪어 온 이중조세방지협정, 비자 발급 기간 연장 등에 대해

---

<sup>185</sup> 인도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인도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Arvind Gupta, “Obama’s visit to India: Is the glass of Indo-U.S. strategic partnership half full or half empty?” i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October 25, 2010, <[http://www.idsa.in/idsacomments/ObamasvisittoIndiaIstheglassoffIndoUSstrategicpartnershiphalffullorhalfempty\\_agupta\\_251010](http://www.idsa.in/idsacomments/ObamasvisittoIndiaIstheglassoffIndoUSstrategicpartnershiphalffullorhalfempty_agupta_251010)>.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요청 사항인 구자라트 주의 한국 산업단지 건설을 가속하는 등 산업 인프라 구축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는, 인도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의료지원부대를 보낸 국가로서 현재 및 미래에는 더욱더 한반도 유사시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즉 인도의 동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UN의 주요 구성국으로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이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는 데 적극적이며,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 또는 관련 물질의 이송에 연루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선박과 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공해상에서의 승선 및 임검(臨檢)에도 참여하는 PSI<sup>186</sup>의 참여국이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였던 인도를 유엔사에 ‘활동국가’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sup>187</sup>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의료부대를 파견하였던 국가이다. 한반도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 60년간 정전협정체제하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구축되고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전

---

186.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PSI의 차단원칙선언(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SIP)을 승인한 98개국에는 인도도 포함된다.

187. 통칭 UN 참전국 16개국이라는 것은 한국군 이외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들, 즉 미국, 영국, 호주, 터키, 에티오피아,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의미한다. 전투부대를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의료부대를 지원한 국가들에는 인도,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이 있다. 한편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는 중립국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회원국들이다. <[www.warmemo.or.kr/ex/ex\\_2\\_3\\_4.jsp](http://www.warmemo.or.kr/ex/ex_2_3_4.jsp)> 참조.

까지 과거 한반도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과 그 밖의 다른 유엔회원국들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과 유엔사(UNC)라는 틀 안에서 과거 6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인 된 인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국제 전력’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였던 이탈리아와 함께 그동안 유엔사에 대해서는 ‘비활동국가(Non-active state)’였지만, 2010년 11월 초에 ‘활동국가(Active state)’로 전환할 예정이다.<sup>188</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가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특별한 관계<sup>189</sup>와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지원하였던 덴마크가 유엔사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했던 인도도 앞으로 유엔사의 활동 국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비동맹주의와 영세중립주의가 50여 년이 지나간 오늘날 대

188. 활동국가는 매일 유엔군사령부의 현황 브리핑에 대사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고 자문을 얻는 국가를 의미한다. 전투부대를 파견하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유엔사의 비활동국가에서, 2010년 11월초부터 활동 국가로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된다. 한편,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했던 이탈리아는 여전히 비활동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다. 유엔사 부 참모장인 래리 웰스(Larry Wells) 미 공군 소장의 브리핑(2010.10.22).

189. 인도의 국부로 칭송을 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1년이 나 거주하면서 자유를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귀국 후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과 화해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통해 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상호 협력하는 정책을 펼쳐 갔다. 예를 들어 구즈랄 총리는 인도와 남아공의 긴밀한 협력을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Gujral, *A Foreign Policy for India*, pp. 115~124를 참조할 것. 또한 인도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IBSA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분의 국가들이 비전통적,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반자 관계 또는 이른바 ‘의지의 제휴’라는 관계를 형성하여 유엔평화유지군 또는 다국적군을 파견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여 또는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G13 또는 G20의 자격으로 세계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인도가 정전체제하에 있는 한반도에 계속해서 비활동국가 또는 단지 국외자로 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인도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 4. 오세아니아

### 가. 호주의 의미와 중요성

최근에 한국과 호주 양국은 글로벌 정치, 경제 무대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까운 외교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했다. 두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분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하지만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만큼 외교 분야에서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호주 노동당의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외교, 즉 대외 정책 분야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따라 양국 간의 대외 협력 관계를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sup>190</sup>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로

---

<sup>190</sup> 케빈 러드 전 총리는 2007년 말 총선 승리를 통해 총리직에 올랐고, 집권 2년 8개월만인 2010년 6월 24일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후임 총리로 러드 총리와 함께 부총리를 역임했던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가 당내 경선 없이 만장일



도약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신아시아 외교,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핵심 외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여긴다.<sup>191</sup> 다른 한편, 호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세계와 지역 무대에서 중견국 리더십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양국이 중국이라는 공통의 거대 무역상대를 가진다는 점, 더욱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산업, 무역 구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경제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호주는 한국과 더욱더 친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92</sup>

호주의 대외 인식을 살펴보면, 20세기 중반까지 유럽·북미 중심의 국제관계 형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에 호주 정부는 세계 질서가 유럽·북미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과 나아가서 자국의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아시아 개입(Engagement with Asia)’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국내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아시아 개입’ 정책의 성격 또한 일정 부분 변화했지만, 근본적으로 호주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협력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7년 연말 연방총선 이후 정권을 잡은 이후 노동당의 케빈

---

치로 추대되었다. 부총리 시절 총리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줄리아 길라드는 총리직에 오른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은 그동안 리더 전 총리가 전개해 온 국정운영과 대외 정책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함을 밝힌다. 다른 한편, 2010년 하반기에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비록 과반 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근소한 차이로 야당에 승리함으로써 줄리아 길라드는 총리직을 지속하게 되었다. 한편,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새 내각에서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sup>191</sup> 김우상, “한·호주 1.5트랙과 ‘글로벌 코리아,’” 『매일경제』, 2010년 5월 21일.

<sup>192</sup> Peter Alford, “Kevin Rudd in search of a Seoul revival,” *The Australian*, November 9, 2009.

러드 전 총리는 21세기를 ‘아시아·태평양의 세기’로 인식하고, 자신이 직면한 도전은 호주와 아시아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다고 보았다.<sup>193</sup> 그는 ‘아시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적 범주를 강조하면서 호주와 동맹국인 미국이 아시아 지역협력체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지역협력 구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드 전 총리는 취임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 이하 APC)’ 구상을 내놓았다. AP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역내 경제, 정치, 그리고 미래의 안보 문제까지 대화, 협력 그리고 행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기구를 의미한다. 러드 전 총리의 APC 구상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정부는 APC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렇듯 과거부터 호주 정부는 동북아 지역과의 대외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 안보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 내 개별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호주의 대외 교역 및 안보 전략 측면에서 주요국의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한·호 관계가 대중 및 대일 관계보다 침체되어 있었다는 현 노동당 정부의 인식이 최근 양국 간의 관계 활성화 추진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작년 2009년 3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정책을 지지한 러드 전 총리와

---

<sup>193</sup> Allan Gyngell, “Ambition: The Emerging Foreign Policy of the Rudd Government,”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p. 5, <<http://www.lowyinstitute.org>>.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정치, 안보, 경제, 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한·호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때 채택된 공동성명은 양국 간 범세계 이슈 및 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sup>194</sup>

또한, 양 정상은 한·호 수교 50주년이 되는 2011년을 맞이해 ‘한·호 우정의 해’를 선포하기로 하고, 호주 내 한국학 진흥과 양국 간 문화, 학술, 인적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양국 간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국은 외교, 경제, 민간 협력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는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호주와 한국과의 관계<sup>195</sup>

호주와 한국 간의 공식적인 첫 번째 만남은 호주의 선교사인 조지 로즈(George Rose)가 1889년에 부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로 기록되어 있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는 1904년에 장기간 동안 한국을 여행

194. 공동성명문에는 ① 정상방문 정례화 ② 외교장관 방문 연례화 ③ 아·태 공동체 구상 관련 긴밀 협의 ④ 정치·군사협의회 및 고위급 정책협의회 연례 개최 ⑤ 국경 간 범죄, 테러 활동, 군축·비확산, 평화유지, 인도적 활동 ⑥ 기후 변화 분야 협력 ⑦ 비전통적 안보·범세계 이슈에 관한 협력 강화 모색 등이 포함되었음; “한·호주, 안보협력 공동성명 채택,” 『아시아일보』, 2009년 3월 5일.

195. 본 장의 내용은 호주의 외교통상부, 한국의 외교통상부 산하 주호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의 한·호 또는 호·한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음; <<http://aus-act.mofat.go.kr/kor/as/aus-act/affair/relation/index.jsp>(주호주대사관)>; <[http://www.dfat.gov.au/geo/rok/brief\\_index.html](http://www.dfat.gov.au/geo/rok/brief_index.html)(호주외교통상부)>.

했고, 그 때 찍고 기록한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사진과 글들이 책으로 출판되어 호주 내 한국에 관한 사료로 읽히고 있다. 그 책의 제목은 『호주인의 눈을 통해 본 1904년 한국』이다.

●그림 Ⅲ-3 호주인의 눈을 통해 본 1904년 한국



자료: 호주외교통상부, “George Rose photographs of 1904 Korea project,”  
 <[http://www.dfat.gov.au/akf/program\\_activities/george\\_rose.html](http://www.dfat.gov.au/akf/program_activities/george_rose.html)>.

한국과 호주의 양국 간의 관계는 호주가 1947년부터 유엔 한국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 기간 호주의 파병을 통해 강화되었다. 유엔군의 일부로 1만 8,000명 이상의 호주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그중에 전사자는 34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국 간의 외교 관계는 1961년에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1953년에 개설된 주시드니 총영사관이 1962년에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이 때 서울에 주한 호주대사관이 개설되기도 했다. 한편, 1966년에 주호 한국대사관이 캔버라로 이전했고, 이후 1970년에 주시드니 총영사관이 재개설되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내년 2011년은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 정

부는 2011년을 ‘한·호 우정의 해’로 선포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약 10여 년 동안 한국 정상외 호주 방문은 김대중 대통령(1999년 9월), 노무현 대통령(2006년 12월, 2007년 9월 APEC 계기), 이명박 대통령(2009년 3월)에 의해 이루어졌다. 호주 정상 중에는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2000년 5월, 2002년 5월, 2003년 7월, 2005년 12월),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2008년 8월),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총리 (2010년 11월)의 방한 등이 있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 양국 고위급 관계자들 간의 회담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장관 및 고위 공직자들이 한국의 2010년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몇 차례 방문한 바 있다. 일례로, 웨인 스완(Wayne Swan) 호주 재무장관이 2010년 6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담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작년 2009년에는 호주의 통상장관인 사이먼 크린(Simon Crean)이 양국 간 FTA 협의를 위해 몇 차례 방문한 바 있다.

한국과 호주는 안보와 관련해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미국이 아·태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지역 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양국의 안보협력에 대한 내용은 2009년 3월 5일에 양국의 정상이 서명한 ‘한·호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잘 드러난다.<sup>196</sup> 위 공동성명 아래에 양국이 실제 협력한 사례는 2010년

<sup>196</sup> 공동성명을 위한 행동강령은 호주 외교통상부의 자료(“Joint Statement on Enhanced Global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fat.gov.au/geo/rok/security-action-plan.html>>.

3월 26일에 발생한 한국의 천안함 사태의 원인조사 규명에 호주가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호주는 2010년 5월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인 한국군의 철수 준비를 지원했다. 더욱이 양국은 다자 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하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양국 간의 민간 교류 분야에서는 1992년도에 호주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호·한재단(Australia-Korea Foundation: 이하 AKF)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AKF는 지정학적 관계, 경제 및 무역, 교육, 과학기술, 사회, 문화, 예술 및 언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주와 한국 간의 인적 및 기관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AKF는 인적 교류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다른 외교, 통상 분야 등에 비해서 민간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이 너무 저조하다는 문제가 양국 정부에 의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은 2010년 5월 26일에 서울에서 “한·호 대화: 2010년대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며”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대화에는 양국의 정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양국 간의 정치, 외교, 경제, 민간 각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증진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그 방안을 각 정부 측에 전달했다.

다른 한편, 양국 간 민간 교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호 경제인연합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해마다 양국 기업인들 간의 연간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번갈아 개최되는 경제인 중심의 연간 회의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 이외에 양국은 자매도시 관계 강화를 통해 민간 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타운즈빌과 한국의 수원시, 시드니의 파라마타와 서울의 중구, 벌우드와 금천구 지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광역단위의 지자체, 즉 호주의 퀸스랜드 주와 경기도,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서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충청남도, 빅토리아 주와 부산 등이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다.

양국 간 민간 교류 강화를 위해 한·호 양국은 2006년 12월에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었다. 이 협정은 한국인이 호주에서 또는 호주인이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거나,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호주의 고용주가 호주인 고용인을 한국에 업무상 임시로 파견할 때 그 고용인의 한국 내 사회보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그 고용인이 한국에 잠시 파견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호주의 연금(슈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대상자로 남아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197</sup>

경제와 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양국 간에 무역이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이다. 이때는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시점으로 대량의 원자재를 호주에서 구매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 중의 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상반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산물 생산을 자랑하는 부유국이었으나, 소수의 주요 원자재 생산과 한정된 무역 상대국에 의존해 온 결과 경기 침체 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구조의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

<sup>197</sup> 한·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호주 조세청 홈페이지의 자료 (“Bilateral social security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00164396.htm>>.

에 한국은 주로 제조업 주도의 경제로 일본, 미국 등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제 발전에 의존해 온 폐쇄적 경향의 개발도상국이었다. 하지만, 현재 양국의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서, 다변화, 재구조 및 재집중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호주는 원자재, 고부가가치 첨단제조품, 식품과 음료, 기술과 서비스 등을 한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와 컴퓨터 등과 같은 완제품을 호주에 수출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의 네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었으며, 또한 상품 수출만을 봤을 때 한국은 호주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이었다. 양국의 경제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 (2) 호주의 대한민국 정책<sup>198</sup>

앞서 설명한 호주와 한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호주의 대한민국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보 측면에서 호주는 주변 4대 강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의 안보 유지는 아·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자국의 번영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안보관을 형성케 했으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한·호 고위 정책협의회, 정치군사협의회 등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외에 정부, 민간 지도급 인사를 포함한 1.5트랙 안보 대화 신설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호주는 대북한 정책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

<sup>198</sup> 본 장의 내용은 한국의 외교통상부 산하 주호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의 한·호 또는 호·한 관계 자료에서 발췌했음; <<http://aus-act.mofat.go.kr/kor/as/aus-act/affair/relation/index.jsp>>.



오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과거 KEDO 사업 참여(2,000만 호주달러 규모) 및 대북한 식량 지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포기 유도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은 유지하는 한편, 2006년 9월엔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안 1695호 이행 차원에서 대북한 금융제재조치를 발표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대북 지원분 참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함께 호주는 APEC과 같은 지역협의체 또는 G20 정상회의와 같은 글로벌 다자 간 협의체에서 아·태 지역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 평화를 위해 한국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주는 4대 상품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경제 분야 교류·협력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통상 강화를 위한 한·호 FTA 체결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나. 분야별 입장 및 협력방안

### (1) 경제협력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 온 호주의 경제규모는 2009년 명목상 GDP 기준 세계 13위로 기록되었다. 반면 UNDP의 2009년 인간 개발 지표에 따르면 호주의 인간 개발 순위는 세계 2위이다. 또한 호주는 수입 규모가 세계 21번째로, 수출 규모는 23번째로 큰 국가이다. 호주는 APEC, G20, OECD와 WTO 가입국이며, ASEAN,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과 FTA를 이미 맺은 상태이며, 현재 한국과는 FTA 협상 진행 과정에 있다.

2008년 호주의 3대 최대 수출국들은 일본, 중국, 한국으로 아시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 세 개 나라의 비중은 호주 전체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인도,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태국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수출 중에 69.5%를 차지한다. 호주의 3대 최대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은 10위로 기록되어 있다.

표 III-15 호주의 10대 수출국(2008년)

(단위: 백만 호주달러)

	상품	서비스	총	비중 (%)	순위
일본	50,755	2,418	53,173	19.1	1
중국	32,347	4,749	37,096	13.3	2
한국	18,391	1,843	20,234	7.3	3
미국	12,130	6,137	18,267	6.6	4
인도	13,508	2,968	16,476	5.9	5
영국	9,332	4,750	14,082	5.1	6
뉴질랜드	9,345	3,416	12,761	4.6	7
싱가포르	6,126	3,928	10,054	3.6	8
대만	8,263	479	8,742	3.1	9
태국	5,340	965	6,305	2.3	10
총 수출	224,727	53,202	277,929	100.0	
APEC	162,415	30,705	193,120	69.5	
ASEAN 10	22,924	8,519	31,443	11.3	
European Union 27	23,533	8,990	32,523	11.7	
OECD	117,730	24,503	142,233	51.2	

자료: 호주의교통상부, "Composition of Trade Australia," 2008, <[http://www.dfat.gov.au/publications/stats-pubs/cot\\_fy\\_2008\\_09.pdf](http://www.dfat.gov.au/publications/stats-pubs/cot_fy_2008_09.pdf)>.

표 III-16 호주의 10대 수입국(2008년)

(단위: 백만 호주달러)

	상품	서비스	총	비중(%)	순위
중국	35,258	1,449	36,707	13.0	1
미국	26,696	9,781	36,477	12.9	2
일본	20,238	2,601	22,839	8.1	3
싱가포르	16,187	4,772	20,959	7.4	4
영국	9,955	4,411	14,366	5.1	5
독일	11,351	1,237	12,588	4.4	6
태국	10,150	1,821	11,971	4.2	7
뉴질랜드	7,603	2,573	10,176	3.6	8
말레이시아	8,958	1,009	9,967	3.5	9
한국	6,428	559	6,987	2.5	10
총수입	229,114	53,783	282,897	100.0	
APEC	158,517	30,215	188,732	66.7	
ASEAN 10	47,744	9,696	57,440	20.3	
European Union 27	47,468	11,273	58,741	20.8	
OECD	115,350	29,208	144,558	51.1	

자료: 호주외교통상부, "Composition of Trade Australia."

2009년에도 한국은 호주의 3대 수출시장, 4대 상품 교역 대상국으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 호주가 한국에 상품 수출을 통해 얻은 가치는 약 534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3.9% 감소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호주의 원자재 가격 하락이 그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09년에 서비스 수출을 통해 호주가 한국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가치는 1억 8,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관련한 관광 산업에 의한 것이다. 2009년에 호주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한국 학생 수는 35,708명에 이른다. 이는 2008년 35,133명보다 증가한 것이다. 호주 해외교육국(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이하 AEI)은 한국 내 양질의 호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호주인과 기관의 자체 교육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8년에 호주가 한국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교육 관련 여행 서비스 이익은 1억 1,000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관광 수익 또한 상당히 큰 규모이다. 호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의 8대 관광 상대국이다. 2009년 한 해에 호주로 입국한 한국인 수가 19만 6,100명에 달한다.

2009년에 호주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가치는 6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주요 수입 상품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자동차와 원유이다. 주요 제조 상품의 수입은 가치상 줄어드는 추세인데,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수입의 37.2%가 감소한 컴퓨터와 같은 기간에 2.2% 감소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아래의 <표 III-17>은 2009년 한국과 호주의 교역 품목을 자세히 보여

● 표 III-17 한·호주 교역 품목(2009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승용차	1,310	25.0	유연탄	4,294	29.1
2	경유	788	15.0	철광	2,183	14.8
3	무선전화기	375	7.2	원유	1,885	12.8
4	금	341	6.5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52	4.4
5	칼라TV	172	3.3	천연가스	503	3.4
6	합성수지	103	2.0	가축육류	494	3.3
7	타이어	98	1.9	당류	435	2.9
8	자동차부품	95	1.8	동광	431	2.9
9	인쇄용지	87	1.7	기타금속광물	375	2.5
10	건설중장비	82	1.6	금	299	2.0
	총 계	5,243	100	총 계	14,756	100

자료: 외교통상부, “한·호주 교역 및 투자 관계 현황.”<sup>199</sup>

준다. 한국의 대호주 수출품과 그 비중은 승용차(25%), 경유(15%), 무선전화기(7.2%), 금(6.5%), 컬러TV(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품은 상위 5위까지 에너지 자원, 즉 유연탄(29.1%), 철광(14.8%), 원유(12.8%),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4.4%), 천연가스(3.3%)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호주 무역에서 매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표 III-18>은 2002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의 대호주 교역 현황을 자세히 보여준다.

● 표 III-18 한·호주 교역 현황(2002~2009년)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교역액	8,313	9,188	10,816	13,671	16,001	17,923	23,171	19,999
수 출	2,340	3,272	3,378	3,812	4,692	4,691	5,171	5,243
수 입	5,973	5,916	7,438	9,859	11,309	13,232	18,000	14,756
무역수지	-3,634	-2,644	-4,059	-6,047	-6,617	-8,541	-12,829	-9,513

자료: 외교통상부, “한·호주 교역 및 투자 관계 현황.”

한·호 양국 간의 기업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점점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에 호주가 한국에 투자한 전체 주식자본 규모는 6억 3,000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대호주 주식투자 규모는 8억 7,000만 달러에 속한다. 맥쿼리(Macquarie) 그룹은 한국에서 펀드 관리와 기반 시설 투자 부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호주의 금융 기업이다. 맥쿼리 그룹은 한국 진출을 위해 한국의 최대 금융기관과 공동벤처기업을

199.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의 FTA정책기획과의 2010년 5월 19일 보도자료임.

설립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2000년 한국 지사 설립 당시 5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맥쿼리 코리아는 약 35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2곳의 다양한 사업 분야와 3개의 투자펀드 상품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호주 금융 기업 중에 ANZ 은행 또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이다.

천연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업 중에 호주 퀸즐랜드의 Sun Metals Corporation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고려아연이 1990년대 호주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이다. 이어서 2002년에 포항제철은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있는 BHP Billiton의 아연자원에 16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재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주로 천연자원 개발과 현대, 대우, 기아, LG, 삼성 등 대기업의 자동차, 전자 상품의 수입과 분배에 치우쳐 있다. 다음으로, <표 III-19>과 <표 III-20>는 한·호양국 간의 기업 투자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호주 기업 투자 규모가 호주 기업의 대한국 투자 규모보다 약 5배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0</sup>

### ● 표 III-19 우리 기업의 대호주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신고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68~2009
건수	46	46	76	81	120	136	127	1,142
금액	186	80	133	178	155	651	1,246	5,143

자료: 외교통상부, “한·호주 교역 및 투자 관계 현황.”

<sup>200</sup>. 주호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한국과의 관계-경제통상 분야에서 발췌함: <<http://us-act.mofat.go.kr/kor/as/aus-act/affair/relation/index.jsp>>.

표 III-20 호주 기업의 대한국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신고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962~2009
건수	31	27	25	30	24	35	33	370
금액	129	55	51	925	47	69	225	1,906

자료: 외교통상부, “한·호주 교역 및 투자 관계 현황.”

마지막으로, 2010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한·호 FTA에 관해 살펴보겠다.<sup>201</sup> 2009년 3월 5일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호주의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양국 간의 FTA협상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2008년 4월 멜버른에 기반을 둔 무역 컨설팅 회사 ITS Global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발표한 ‘공동타당서 조사’에 따르면, 한·호 FTA는 2007~2020년 사이에 호주의 GDP를 미화 227억 달러까지, 한국의 GDP는 미화 296억 달러까지 각각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육류, 낙농 제품, 설탕 및 비철 금속업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한·호 FTA를 통해 제조업, 섬유, 금속 제품, 기계, 자동차 및 특히 부품업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은 현재 농산물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공산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 분야는 적용률 평균 48%와 평균 양허율 61%라는 관세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양국 간 무역협정에서 이러한 높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은 호주 농가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21>은 양국의 FTA로 인한 주요 수혜 대상 분야를 각각 보여준다.

<sup>201</sup> 호주한국비즈니스위원회, 『호주와 한국: 미래를 위한 동반자 2010』, pp. 16~19 참조함.

표 III-21 주요 수혜 대상 분야들

호주의 대한민국 수입 증가	한국의 대호주 수입 증가
공산품 - 15.7% 농산물 - 3.5% 광물분야 제품 - 2.4% 의류 - 240%	공산품 - 51% 농산물 - 24% 광물 분야 제품 - 10% 육류 - 109% 낙농제품 - 약 300%

자료: 호주한국비즈니스위원회, 『호주와 한국: 미래를 위한 동반자 2010』, p. 18.

호주의 기업체 중에서 와인 업계는 FTA 성사 시 장기적으로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의 와인 소비량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미국산 와인이 한국 시장을 독점해 왔지만, 최근 칠레산 와인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호주무역위원회(Austrade)에 따르면, 호주 와인의 경우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세금과 관세로 인해 병당 최고 10달러의 가격이 추가돼 한국 소매점에서는 호주 와인이 병당 최고 32달러에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의 와인 업계는 양국 FTA로 인해 호주의 와인이 칠레 와인과 같이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 와인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의류제조 업계가 한·호 FTA의 최대 수요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의류 완제품에 대한 호주의 관세율은 10%이지만,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호주 의류 수출은 무려 24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 자유화로 수혜를 입을 또 다른 분야로는 투자 분야가 꼽힌다. 호주의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이하 FIRB)는 자  
 국 내 외국 투자가 국익에 상반되지 않도록 감독관리 하고 있기 때문  
 에 외국인 투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양국 간  
 FTA 체결이 이뤄진다면, FIRB의 승인기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한국 기업, 특히 광물자원을 관련 업계가 석탄, 철광  
 석, 니켈 및 우라늄 등 자원의 공급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공동타당서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 합병, 인수 및 공동 창업이 활성화되어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한·호 FTA는 호주의 한국에 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 장벽 완화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 (2) 에너지 및 기후<sup>202</sup>

### (가) 에너지 산업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sup>203</sup>

호주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의 2.4%를 차지하는 세계 8위의 에너  
 지 생산국이다. 생산의 66%가 수출용이고 34%가 내수용으로 공급  
 되고 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호주는 앞으로도 계속  
 내수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 대한 주요 공급자가 될 것으로

<sup>202</sup> 이 절의 내용은 필자가 집필한 강원대 G20 모니터링사업단의 2009년 12월 보고  
 서 “G20 국가들의 환경정책,” 그리고 1월 보고서 “G20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정  
 책”의 호주 내용을 발췌한 것임.

<sup>203</sup> The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in Australia,” *Energy and Tourism*, 2009,  
 <[http://www.ret.gov.au/energy/Documents/facts%20statistics%20publications/  
 energy\\_in\\_australia\\_2009.pdf](http://www.ret.gov.au/energy/Documents/facts%20statistics%20publications/energy_in_australia_2009.pdf)> (검색일 2010.1.16).

전망된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의 에너지 생산은 1996~1997년부터 2006~2007년 10년 동안 연평균 4.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전 10년간의 연평균 3.4% 증가율에 비해 볼 때 상당 부분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호주의 에너지 수출 붐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생산 연료는 석탄, 우라늄, 천연가스이다. 2006~2007년 에너지원별 생산을 살펴보면, 전체 에너지 생산의 54%를 차지하는 석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26%의 우라늄, 11%의 천연가스, 원유와 LPG가 7%, 재생에너지가 2% 수준이다. 호주 경제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2006~2007년에 석탄, 석유, 가스, 전기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은 약 570억 호주달러의 총부가가치를 만들어냈고, 이는 호주 경제의 6%에 해당한다.

호주 에너지 산업의 가치를 살펴보면, 2006~2007년에 원유와 가스 시추 산업(224억 호주달러)이 에너지 산업 전반에 기여한 부가가치가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석탄 채광 산업(164억 호주달러)과 전기 공급 산업(146억 호주달러)이 따르고 있다. 호주는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며, 동시에 원유와 석유 제품에서는 수입국이기도 하다. 석탄이 2007~2008년 기준 240억 호주달러 규모의 수출로 가장 큰 수출 품목이고 그 다음이 원유(약 110억 호주달러)와 LNG(59억 호주달러)이다. 특히 원유와 LNG는 호주의 최고 부가가치 10개 수출품에 속한다. 에너지 수출은 2007~2008년의 총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의 18%를 차지하였다. 호주의 최대 소비 에너지 자원은 석유 제품과 석탄이다. 흑탄과 갈탄이 약 4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석유 제품(34%),

천연가스(20%), 재생가능 자원(5%) 순이다. 지난 30년간 호주의 천연가스 소비는 줄곧 증가해 왔고 장기적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과거 50년간 호주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해 왔지만,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1996~1997년부터 2006~2007년까지 10년간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2.3%씩 증가했고, 그전 10년간은 연평균 2.7%씩 증가했었다. 2006~2007년 에너지 소비는 2.3% 증가하여 5,770PJ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4%에 해당한다. 지난 20년간 에너지 내수는 생산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해왔다. 호주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 수요 급증은 호주 내 생산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호주 에너지 생산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에 약 50% 선에서 1990년대에 평균 42% 선으로 감소했고, 지난 8년 동안 34%대로 떨어졌다.

호주인들의 국내 에너지 소비와 함께 지리적 위치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호주는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고 있다.<sup>204</sup> 무엇보다도 호주는 선진국 중에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로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2007년 말까지 정부를 주도한 호주의 보수연합은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노동당의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총리 취임 첫날 공식행사로 교토의정서에 서명했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쳤다.

그러한 노력의 일례로 러드 총리는 취임 직후 기후 변화 부처(the Ministry of Climate Change)를 신설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호주의

<sup>204</sup>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처의 “National Energy Security Assessment(2009)”와 “National Energy Policy-Framework 2030, Strategic Directions Paper” 참고

국내외적인 문제 해결을 담당하도록 했다.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수준에 머물게 한다는 전제하에,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호주의 탄소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를 감소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호주인 1인당 평균 배출량이 향후 10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만약 전 세계가 450ppm 목표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주는 5~15% 감소를 이뤄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탄소배출에 비용을 매기는 ‘탄소배출권 거래안(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이하 CPRS)’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야당의 반발로 CPRS 법안 통과가 두 번이나 부결되었다.

현재 호주의 대표 야당인 자유당은 CPRS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반면에 소수 정당인 녹색당은 CPRS가 호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계획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호주 정부는 2010년 초에 탄소거래제를 2013년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하반기 예정된 연방 총선을 의식한 결정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던 수많은 호주인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러드 전 총리는 2009년 12월에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 2009년’ 이후 교토의정서의 수정 확대보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더욱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협정을 만들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러드 총리가 교토의정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개도국들로부터 받기도 했다(ABC, 2009.12.16).<sup>205</sup>

---

<sup>205</sup>- “All the actions of Prime Minister Kevin Rudd is basically a move away and a killing of Kyoto Protocol,” *ABC*, December 16, 2009.

호주 정부는 CPRS 이외에 청정에너지 개발과 상용화, 기업체 및 가계 지원 등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206</sup>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50억 호주달러 이상의 재정 투자〉

- 재생에너지 목표(Renewable Energy Target): 2020년까지 호주 소비전력의 5분의 1을 풍력, 태양열, 지열 등의 재생가능 자원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임.
-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Clean Energy Initiative): 45억 호주달러 규모의 투자. 호주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의 개발, 공급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써, 태양 발전 기술, 뜨거운 암석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 탄소 흡수 및 저장 기술과 같은 저탄소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클린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태양광에너지 선도프로그램(Solar Flagships Program):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5억 호주달러 투자. 2015년까지 네 개의 태양 발전소를 건립하여 1,000MW의 추가적인 전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는 35만 가구 혹은 캔버라 전체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능력임.

---

<sup>206</sup>-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Water, "Australia's Action on Climate Change"에서 정리함; <<http://www.climatechange.gov.au/en/~media/publications/adaptation/acion-on-climatechange.ashx>> (검색일: 2009.12.22).

- 탄소 흡수 및 저장 선도프로그램(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Program): 24억 호주달러 투자. 저탄소 클린석탄기술(호주가 다량 보유한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 탄소를 줄이는 기술)의 연구 개발과 탄소 흡수원 및 저장원 건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 글로벌 탄소 흡수 및 저장 이니셔티브(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위의 신기술 개발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 그린 자동차 이니셔티브 펀드(Green Car Innovation Fund): 13억 호주달러 규모의 펀드.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 자동차 산업에서 그린 컬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기업체 지원책〉

호주 정부의 기업체 지원책은 아래와 같다.

- 클린 비즈니스 호주프로그램(Clean Business Australia Program):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건물과 제조공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고, 동시에 기후 변화의 문제를 알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업화를 도움.
- 호주 탄소펀드(Australian Carbon Trust):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9~2010년에 설치하게 될 펀드. 공공자금, 민간자금, 혁신적 기술과 지식이 합쳐짐.

- 기후 변화 액션펀드(Climatic Change Action Fund): 기업, 커뮤니티, 노동자 등이 에너지 효율적 방식을 파악, 채택함으로써 전 기세와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돕기 위함. 2009~2010년부터 시행
- 탄소분야 전문기술자 양성프로그램(Skills for the Carbon Challenge): 향후 새로운 클린 산업에 진입하여 그린칼라 직종에서 일하게 될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 그린 스킬의 교육 인력 개발과 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원칙들을 수립하도록 지원함.

〈가계 지원책〉

가계는 호주 전체 탄소배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 감축에서의 역할이 크다. 호주 정부는 가계 지원 규모로 44억 호주달러 규모를 지원했다.

- 에너지 효율적 주택 패키지(Energy Efficient Homes Package): 290만 주택에 단열지붕 설치와 42만 주택의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를 지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호주 정부가 택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도 함.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됨.
  - ① 주택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단열지붕 설치비용으로 1,600호주 달러까지 지원하는 주택소유자 단열 프로그램(Homeowner Insulation Program)
  - ② 주택 임차인에게 단열지붕 설치비용으로 100호주달러까지 지원하는 세입자를 위한 저배출 계획(Low Emission Assistance Plan for Renters) 제도

③ 전기 온수 시설을 태양열 온수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인 거주자나 임대인에게 1,600호주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태양열 온수 리베이트(Solar Hot Water Rebate) 제도

- 호주 탄소펀드(Australian Carbon Trust): 가구 내에 에너지 사용량과 절약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효율절약보증펀드(Energy Efficiency Savings Pledge Fund)를 제공함.
- 그린 대출 프로그램(Green Loans Program): 대규모의 태양전력, 온수, 및 에너지 효율적 제품을 설치하는 가계에 제공하는 대출 제도
-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전국적 전략(National Strategy on Energy Efficiency): 국민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 주택, 건물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함.
- 정부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행동 요령 10가지를 제시, 홍보함.

#### (나)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방안

2008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3대 주요 수출 상대국이 되었으며, 6대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호주의 한국 수출 품목 중에 에너지 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중 절반이 석탄이다. 하지만 한국의 호주 석탄 의존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 이외에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 등이 에너지 시장에서 강한 경쟁상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 정부는 한국에 대한 주요 자원 공급국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광업 및 석탄 가공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전 방위 고도 선진기술을 계속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호주의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영역의 연구, 온실 가스 감축 전략 부문 등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 호주는 확장된 신재생에너지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량이 호주 전체 전기량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EU 및 영국 등과 같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노력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McLennan Magasanik Associates’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할당제만으로도 200~250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된다. 최근 ‘New Energy Finance’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 아시아의 클린에너지 투자는 미국의 투자액을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신규 금융 투자는 370호주달러로 무려 25%가량 증가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900호주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한 향후 5개년 녹색성장 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획기적인 변혁을 몰고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에 호주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해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현안은 국가의 자연자원, 즉 에너지 자원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것이다. 호주 정부는 에너지 산업체들이 호주의 자연자원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는 만큼 자원세 부과를 통해 호주 국민에게 그들의 이윤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자원세 부과 주장은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자국 및 다국적 에너지 업체들의 자원세에 대한 반발이 거세었고, 이를 야당인 자유당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노동당 정부의 리더십에 큰



흡집을 내기도 했다. 자원세 문제는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기업체와의 절충안을 통해 일단락 짓기는 했지만, 정부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에너지 기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 (3) 사회·문화 교류

#### (가) 현황<sup>207</sup>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호주에 한국인의 이민 역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다. 1920년 당시 소수 한국인이 호주에 거주한 흔적이 있으며, 이들은 호주의 선교사들이 입양한 아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1921~1941년간 소수 유학생이 호주를 방문했고,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호주 군인의 처나 입양아로 소수의 한국인이 호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이지만 공식적으로 호주에 한국인이 호주로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호주 정부가 취한 비유럽인의 입국 제한 완화 조치로 한국인의 호주 입국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1969년에 숙련기술인력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첫 한국인 이민자들이 시드니를 통해 입국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호주로 유입된 인원은 매우 적었으며, 1971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 거주자 수는 46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3년에 호주의 윌틀람(Whitlam) 노동당 정부는 1901년도 호주 영연방국가로 독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영국계 호주인 중심의 백호주의를 폐지했다. 그리고 호주의 새로운 이민 정

---

<sup>207</sup> 이 절의 내용은 양명득, 『호주와 한국: 120년의 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의 일부를 발췌함.

책이자 문화 정책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친아시아 성향의 새로운 정책 아래에 베트남계, 레바논계, 중국계, 한국계 등을 포함한 아시아 이민자들이 이 시기부터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인은 지질학자, 헬리콥터 조종사, 교사 등 소수 전문기술자들이었다. 이후 베트남전 패망 직전인 1974년부터 파월 기술자 500여 명이 위틀람 정권의 비자 간소화 정책에 의거 관광 비자로 대거 입국했고, 그 결과 호주의 전체 한국인 이민자 수가 1975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1976년, 1978년 및 1979년 프레이저(Fraser) 정권의 체류기간 초과자에 대한 ‘사면령’을 통해 당시 호주 거주 중이던 한국인 대부분이 영주권 취득 및 한국 내 가족 초청을 통해 입국했다. 동 사면령 이후 남미 체류자 및 중동 취업 근로자들이 계속 입국함에 따라 한국인 거주자 수는 1976년 인구조사 시 1,460명에서 1986년에 9,285명으로 여섯 배로 급증하는 결과를 보였다.

1980년 이후에는 입양, 가족초청 이민, 취업, 사업·투자 이민, 유학 등을 통해 이민이 급증했다. 예를 들어, 1986~1991년간 매년 평균 1,400명이 입국했다. 그 결과, 1991년 인구센서스에서는 2만 580명으로 기록되었다. 1990년대에는 호주의 경제침체에 따른 이민 쿼터 감소가 이뤄졌고, 이민자격심사가 강화되었다. 또한, 한국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역이민이 증가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원자재·에너지 시장 활황으로 주재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고질적인 인력 부족난 타개를 위한 해외 숙련인력 수입 정책 등으로 우리 기술 인력의 호주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호주의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인 이민자 수는 총 5만 2,76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약 63%가 시드니 중심의 N.S.W주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구는 기타 멜버른, 퍼스



및 브리즈번 등 대도시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는 대표적으로 교민단체인 한인회를 꼽을 수 있다. 한인회는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다. 한인회 이외에 기타 교민 단체로 호주 주재 상사 지사장 중심인 재호한국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Australia: 이하 KCCIA), 상업에 종사하는 한인 중심의 재호한국상공인연합회(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Australia), 해외한인무역협회(Overseas Korean Trade Association: 이하 OKTA) 호주지부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교민 언론으로는 일간지 1개 『호주동아』, 주간지 *Top*, 『한국신문』, 『호주일보』, 『경제신문』, 『교민잡지』, 『생활정보』, 『주간호주』 등, 격주 『리빙』, 『포커스』, 『행복이 가득한 집』, 월간 『크리스찬리뷰』, *The Korean*이 있다. 위의 신문, 잡지 등이 대부분 1990년대에 제작, 배포되기 시작한 반면에 한국 관련 방송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관련 방송은 대표적으로 SBS라디오 한국어 방송, KBA호주 한인 라디오 방송, TV Korea, Community TV Sydney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한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드니의 남서쪽 지역에 있는 캄시(Campsie)를 꼽을 수 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당시에 한인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며, 자연히 한국 식당과 한국 식품점 등이 생겨났고, 그 결과 그곳에 한인촌(Korea Town)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캄시는 한국 이민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곳에 베트남인, 중국인들이 들어와 대거 상점을 열면서부터 한국인들은 또 다른 지역인 시드니의 스트라스필드에 주거지와 사업지를 번성시켰다. 현재 스트라스필드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시드니의 파라마타, 이스트우드, 그리고 체스우드 지역에도 점차로 한인들의 상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사회에 한인들의 존재와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이 1960년대 말부터 브리즈번과 멜버른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영화를 상영하거나 한국문화의 밤을 주최하거나 아니면 한국 음식 축제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있다. 호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행사는 코리아 위크에 이워진다. 1985년 광복 4주년과 때를 맞추어 시드니에서 시작된 본 행사는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이 행사에는 시드니의 주요 장소에서 무용단의 춤, 태권도 시범, 영화 상영, 농악, 장수무대, 미술전, 문학과 민속강연회, 먹을거리 시장 등이 열려 한인들은 물론 호주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한인들은 각기 거주 지역마다 ‘한국의 날’, ‘한국의 밤’, ‘한·호 친선의 밤’ 혹은 ‘코리아 위크’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며 호주사회 속에서 여러 문화권의 이민자들과 교제하며 자리를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관해 살펴보겠다. 호주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①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모국어 과정, 외국어 과정), ② 주 정부 토요학교에서의 소수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그리고 ③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외국어를 배우는 호주 학생 중 90% 이상은 일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에, 호주 내 한국학(어) 개설 대학교는 총 7개교이다. 캔버라의 호주국립대학교, 빅토리아주의 모나쉬대학교, 퀸즈랜드주의 퀸즈랜드대학교, 그리피스대학교,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시드니대학교, 서호주의 커턴기술대학교가 이에 속한다.

표 III-22 호주의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현황(2009년 현재)

	호주학교		주정부 민족 언어학교	오픈 하이스쿨 (원격교육)	한글학교
	모국어과정	외국어과정			
① 학교수	초:8, 중등:4	초:15, 중등:11	6	1	60
② 학급수	초:43, 중등:6	초:37, 중등:36	32		
③ 학교이름	초: Campsie, Carlingford West, Chatswood, Denistone East, Eastwood, Harcourt, Homebush, Strathfield North  중등 :Chatswood, Marsden, RedlandsSCEGG, School of Languages	초: Bathurst, Miranda, Shellharbour, St Andrews, Strathfield North, Tyalgum, Murwillumbah, St Brigid's, Ormond 등  중등: Cabramatta, Canobolas, Chatswood, Marsden, Temora, Wollongong, Wollumbin 등	Chatswood SSCL, Dulwich SSCL, Strathfield SSCL, The Hills Sports SSCL 등	The Open High School	호주한국학교, 린필드 한국학교, 시드니성당 한글학교 등
④ 총 학생수	총 708 (초:633, 중등:75)	총 2009 (초:1,410, 중등:599)	총 500 (중등)	총 29 (중등)	총 4,469 (초:3,036, 중등:842, 성인:591)
⑤ 대상	동포학생 유학생	호주인초등학생 호주인중등학생	동포학생, 유학생	동포학생, 호주인 중등학생	동포학생, 호주인 초중등학생, 호주인 성인
⑥ 한국어 담당 교사수	초:8, 중등:4	초:15, 중등:9	중등:32	중등:1	504

자료 : 외교통상부 주호주대사관, 『호주개황』 (200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호주 내 한국학(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한국에 대한 호주 정부, 대학, 학생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시아와 가장 가깝고 영향력 있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현 호주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개입이 정부 차원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호주를 서구 국가 중에 아시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국가(the most Asia-literate nation in the collective West)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만들었다.<sup>208</sup> 리드 전 총리는 ‘Asia-literate Australia’를 건설을 통해 호주인들이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의 언어를 말할 줄 알고, 또한 그들 국가의 전통적인 문화에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1990년대 초반 폴 키팅 총리가 호주 교육기관에서 아시아 언어와 관련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고 가르치기 위해 실행했던 ‘전국 학교 내 아시아 언어 및 학문 전략(the National Asian Languages and Studies in Australian Schools Strategy: 이하 NALSAS)’이 효과적으로 호주인들의 아시아 언어와 학문 습득을 유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전 보수연합 정권이 이 전략을 폐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자신이 총리로 부임한 이후 2008년 초에 이 전략을 재도입했다.

호주의 현재 목표는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적어도 12% 정도가 아시아 국가(구체적으로, 4개국—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들과 교역 및 상거래 활동을 하거나 대학에 진입해서 아시아

<sup>208</sup> “Let’s look both south and north to find our place,” *The Age*, June 17, 2008, <<http://www.theage.com.au/opinion/lets-look-both-south-and-north-to-find-our-place-20080616-2rl2.html>> (검색일: 2010.8.10).

지역을 전공하기 위해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폴 키팅 정부의 NALSAS를 수정한 ‘전국 학교 내 아시아학과 언어 프로그램(the National Asian Languages and Studies in Schools Program: 이하 NALSSP)’을 실행했고, 2012년까지 향후 4년 동안에 총 6,240만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sup>209</sup>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4개국 언어 및 관련 분야 학습뿐 아니라 가능한 많은 학생이 아시아 개별 국가들과 교류 및 유학을 통해 지역 전문성을 넓힐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 신설 및 양자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원조국인 AusAID를 통해 ASEAN 국가(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들과도 학교 대 학교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 (나) 협력방안

현재 한국 호주 양국 간의 민간 및 인적 교류는 정부 간 교류만큼 활발하지 않거나 또는 한국에서 호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양국의 상호 방문자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인 약 26만 명이 호주를 방문했으나, 오직 호주인 9만 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호주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 학생이 유학을 많이 가는 나라로 현재 호주 내 한국 유학생이 3만 5,000명에 이른다.<sup>210</sup> 그 결과 호주에서는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 유학생이 세

<sup>209</sup>. Kent Anderson, “Asia literacy: making a good policy better,” in *East Asia Forum*, August 27, 2008, <<http://www.eastasiaforum.org/2008/08/27/asia-literacy-making-a-good-policy-better/>> (검색일: 2010.7.15).

<sup>210</sup>.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in brief Tourism and international students,” <[http://www.dfat.gov.au/aib/tourism\\_students.html](http://www.dfat.gov.au/aib/tourism_students.html)> (검색일: 2001.7.5).



번째로 많다. 그러나 한국 내 호주 유학생 수는 겨우 두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한·호 워킹홀리데이 협약에 따라 한국의 약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매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찾는 호주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는 역시 두 자리 수에 불과해 한국에서 호주로의 일방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 정부는 다양한 민간 분야, 교육 분야, 정부 간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NALSSP를 통해 자국 내 아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서 교육 및 사회 관련 분야 등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 전문가 또는 적어도 아시아에 관해 잘 아는 호주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 내 진출한 한국인 기업 및 호주 기업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인턴 채용 및 고용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sup>211</sup>

## 다.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 사안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주의 역할을 더욱더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G20 정상회의에서의 세계 경제위기 관리라는 차원에서 우리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이번 위기가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주의, 경제 근본주의 등 여러 이름으로

---

<sup>211</sup> 2010년 5월 26~27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Korea-Australia Dialogue 2010/2010 한호 대화』의 “Session III: Strengthening People-to-People Links”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에 의해 언급된 내용 참고.

일컬어져 온 자유시장 이념이 낡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금융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위기는 그 주장이 옳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러드 전 총리는 이번 위기가 자유시장체제의 실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며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으면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세계 협력을 통한 금융규제 강화와 자유무역과 세계 환경 친화 사업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세계적인 규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의 2008년 9월 25일 유엔 총회 연설문에 ‘현 세계 금융위기는 21세기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로 언급되었다.<sup>212</sup>

우선 그는 기존의 G7 회담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 이외에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권 국가들도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G20 회담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러드 전 총리는 중국이 문제 해결에 반드시 동참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중국의 시장 파워가 경기침체 극복에 유용할 것이라는 점과 나아가 중국이 현 금융위기를 서구 자본주의의 실패로 정치

---

<sup>212</sup>- Kevin Rudd, “Speech by Prime Minister Kevin Rudd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www.un.org/ga/63/generaldebate/pdf/australia\\_en.pdf](http://www.un.org/ga/63/generaldebate/pdf/australia_en.pdf)> (검색일: 2009.9.7).

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sup>213</sup>

러드 전 총리는 유엔을 통한 연설, 언론 기고뿐 아니라 호주의 주요 동맹국가의 지도자와 개별적인 회담을 하면서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자면, 2009년 4월에 런던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며칠 전에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는 경기부양책의 필요성과 주요 국가들의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음 주의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한 그는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와 회담(2009.3.30),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2009.4.1) 등을 통해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기부양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러드 전 총리를 비롯한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글로벌 단위의 경제위기 관리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자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

호주는 중견국가로서 아시아 지역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한국도 APEC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아시아의 지역협력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호주의 APC 구상은 중요하다.

러드 전 총리는 2008년 6월 4일에 ‘Asia Society Australia Centre’

---

<sup>213</sup> “PM’s bold grab for friends and influence,” *The Australian*, November 19, 2009 <<http://www.theaustralian.com.au/news/opinion/pms-bold-grab/story-e6frg74x-1111118073998>> (검색일: 2009.11.23).

에서 “이제 아·태 공동체를 건설할 때이다(It is time to build Asia Pacific Community)”라고 언급 하며 APC 구상을 제안했다. 제안 당시 러드 총리는 APC가 아직 구상단계에 있다고 밝혔고, 이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러드 총리는 리처드 울코트(Richard Woolcott)라는 특사로 하여금 지역 내 주요국의 리더들을 만나서 APC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지시했었다(2009.10.18). 현 21세기에는 태평양, 구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미 강국이 된 일본, 한국과 함께 신성장 국가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는 이들을 ‘아시아 5’라고 부른다. 만약 G20에 참여하는 호주와 ASEAN 의장국을 같은 지역의 일원으로 포함한다면, 이들 ASEAN G7이 G20 내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sup>214</sup>

그는 이들 국가가 앞으로 원유, 가스, 식량, 물 등 세계 자원 경쟁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의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단위, 즉 APC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드 전 총리가 제안한 APC는 EU 형태의 초국적 관료기구나 체제의 형태가 아니다. AP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역내 경제, 정치, 그리고 미래의 안보 문제까지 함께 대화, 협력 그리고 행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기구를 의미한다. 호주가 APC를 제안하는 이유는 호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중진국으로 가지는 대외적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 즉, 호주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 위

---

<sup>214</sup> Gary Hawke, “The Asia Pacific Community: objectives, not institutions,” in *East Asia Forum*, June 15<sup>th</sup>, 2009, <<http://www.eastasiaforum.org/2009.6.15/the-asia-pacific-community-objectives-not-institutions/#more-4844>> (검색일: 2010.7.15).

치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에 초점을 맞춘 대외 관계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질서 형성에 호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가 과거 1980년대 후반에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 확립과 유지를 위해 APEC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캄보디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ASEAN 지역 포럼 신설에 기여하기도 했다.

호주는 지역 문제 해결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강국들보다 호주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견국이 의견을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만약 강대국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를 꼽는다. 그러므로 APC의 주요 목표는 이들 6개 국가 정상들과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러드 전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현존하는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역내 기존 기구들(ASEAN, APEC, ASEAN+3, EAS, ARF 등)은 호주의 러드 전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APC와 같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APEC에는 인도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주요 관심사가 경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EAS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ARF에는 멤버 국가가 27개로 너무 많고, 정상회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러드 전 총리는 미래에 정치적, 안보 이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기구 창설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처음 러드 전 총리가 APC 구상을 제안한 이후 현재까지 그는 여

러 차례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APC 같은 지역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호주 정부는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APC와 같은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기존의 역내 기구들이 더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호주 정부는 APC에 대한 논의가 기존 기구인 EAS를 재정비하는 것, 즉 EAS에 미국과 러시아가 가입하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호주 양국은 세계 정치, 경제 무대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까운 외교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강한 안보 동맹국을 공통으로 가진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및 지역협력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즉, 지역 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주체 간에 체계적인 협력 없이는 지역 내 평화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호주는 자국과 유사한 중진국 외교를 강조한 한국과 대외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한·호 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는 G20 정상회의 정상화 및 2010년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기여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미국이라는 공통적인 안보 동맹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풍부한 에너지 및 자연 자원, 대규모의 농업과 서비스 산업 기반을 둔 호주는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한국과 FTA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자국민들에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학 확산과 언어 교육 및 훈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한편, 양국은 양자 FTA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국 간의 경제 교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FTA 체결은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교역 규모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한 각국의 지속적인 GDP 성장이 예측된다. 한편, 광물자원이 풍부한 데다 최근에 청정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호주는 한국의 주요한 에너지 무역국이자 기술 협력국이다. 양국의 FTA 체결을 통해 한국 기업, 특히 광물자원을 관련 업계가 석탄, 철광석, 니켈 및 우라늄 등의 자원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주의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영역의 연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 부문 등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현실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호주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중진국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 그 역할을 통해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의 이해를 함께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이나 호주 정부가 제안한 APC 구상안에 대한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외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 사례는 중진국이 자국을 포함한 강대국과 함께 주변 약소국의 국익을 명분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호주의 경험은 앞으로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국력 향상과 지역 내 평화체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재남. 『한·중양아 지역 협력의 현황과 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
- 김형국. 『국제제도론: 정치와 법의 만남』.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 류지철. 『동북아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중장기 전망 연구 (II)』.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 박용덕. 『에너지 국제협력 추진체계 개편 및 선진화 방안』.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 박재복.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양명득. 『호주와 한국: 120년의 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양종회·김우식·이호영·최항섭. 『한국의 문화산업체계』. 서울: 지식마당, 2006.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유상철 외. 『한류 DNA의 비밀: 소프트 파워, 소프트 코리아의 현장을 찾아서』.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 윤성학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정창권.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개정판)』. 서울: 민서출판사, 1998.
-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 ADB. *Energy Outlook for Asia and the Pacific*.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2009.
- Cohen, Stephen P. *Emerging Power Indi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 Das, Pushpita (eds.). *India's Border Management*.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April 2010.
-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2004.
- \_\_\_\_\_.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2010.
- Gujral, I. K. *A Foreign Policy for India*. New Delhi: External Publicity Divisio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1998.
- IEA. *World Energy Outlook 2008*. Paris: OECD/IEA, 2008.
- \_\_\_\_\_. *World Energy Outlook 2009*. Paris: OECD/IEA, 2009.
- \_\_\_\_\_. *World Energy Outlook 2009: Executive Summary*. Paris: OECD/IEA, 2009.
- \_\_\_\_\_. *World Energy Outlook 2009: Presentation to Press*. Paris: OECD/IEA, 2009.
- IEEJ et al. *The 2nd ASEAN Energy Demand Outlook*. Tokyo: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2009.
- Paul, T. V., James J. Wri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up>st</sup>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Stobdan, P. (eds.). *India-Russia Strategic Partnership: Common Perspectives*.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2010.

## 2. 논문

- 강선주. “신정부의 기여 외교: 공적개발원조의 과제와 전망.” 『주요국 제문제분석』. No. 2008-11(외교안보연구원), 2008.
- 고재남. “이명박 대통령의 對중앙아 2개국 정상외교의 성과 및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15(외교안보연구원), 2009.
- \_\_\_\_\_. “한·중앙아 2개국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정세와 정책』. 통권 158호(세종연구소), 2009.
- 김창수. “아시아·태평양,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한국국방연구원 편. 『2025년 미래 대예측: 미래의 세계를 읽는다』. 서울: 김&정, 2005.
- 남영숙. “신홍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중국식 원조모델과 국제 원조질서에서의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8권 4호(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8권 14호(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8.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 ASEAN+3 와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 \_\_\_\_\_.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 평가와 과제.”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6.
- 박변순. “한국-ASEAN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박병광.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파키스탄, 한국 사례의 비교와 시사점.” 『외교안보연구』. 제6권 1호(외교안보연구원), 2010.
- 박선민·이은미. “한인도 교역 10년의 평가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Trade Focus』. Vol. 9, No. 22(한국무역협회), 2010.
-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 11차 ASEAN+3 및 제3차 EAS결과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7-42(외교안보연구원), 2007.
- \_\_\_\_\_. “신정부의 지역 협력 외교과제: ‘신(新)아시아 협력외교구상’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8-06(외교안보연구원), 2008.
- 삼성경제연구소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제730권, 2009.
- 유석진. “통화금융협력: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제도화.” 세종연구소 엮음. 『한국의 국가 전략 2020』. 서울: 세종연구소, 2006.
- 이대우. “이명박 정부 신아시아 외교구상.” 『정세와 정책』. 통권 156호 (세종연구소), 2009.
- 이상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가능성과 한계.”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EAI, 2008.
- 이안재. “한류 열풍의 해부.” 김상배 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 이재승. “범아시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외교전략 수립 방안: Trans-Asia Energy System(TAES)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정책용역보고서, 2007.
- \_\_\_\_\_.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협력: 하위정치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Vol. 14, No. 1(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5.
- \_\_\_\_\_. “한국의 동아시아 에너지외교 연구: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한국의 역할』. 국제정치학회/동북

- 아역사재단 공동주최 학술회의, 2010.4.28.
- 이재현. “한-ASEAN특별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20(외교안보연구원), 2009.
- \_\_\_\_\_. “대통령 베트남, 캄보디아 순방과 한-ASEAN 정상회의 평가와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40(외교안보연구원), 2009.
- 이한우.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시각과 이해.” 박사명외. 『협력에서 공동체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동향과 과제』. 서울: 이매진, 2009.
- 전재성. “한국의 미래전략과 동아시아.” 전재성 외.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 서울: 삼영사, 2008.
- \_\_\_\_\_. “EU와 동아시아 공동체.”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EAI, 2008.
- 조 현. “동북아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JPI 정책포럼』. 제8권(제주평화연구원), 2009.
- 진운정. “2010 인도,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꿈꾼다.” 『친디아 저널』. Vol. 49(포스코경영연구소), 2010.
- 진창수. “통상협력: FTA와 병행한 지역경제협력 강화.” 세종연구소 엮음. 『한국의 국가 전략 2020』. 서울: 세종연구소, 2006.
- 최장집.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공존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미지평.” 『아세아연구』. 제47권 4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 Avery, Emma Chanlett. “Rising Energy Competition and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Issue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2008.

- Baburajan, Rajani. "CEPA: Making a New Era in Indo-Korean Partnership." *Asia-Pacific Business & Technology Report*. Vol. 1, No. 4, September 2009.
- Behera, Laxman Kumar. "India's Defence Budget 2010-11: An Analysis." *Journal of Defence Studies*. Vol. 4, No. 2, April 2010.
- Burgess, Stephen F. "India's Emerging Security Strategy, Missile Defense, and Arms Control." *INSS Occasional Paper 54*. Colorado: USAF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USAF Academy, June 2004.
- Calder, Kent E.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Foreign Affairs*. Mar/Apr 2006.
- Choo, Jae-Woo. "Energy Cooperation Problems in Northeast Asia: Unfolding the Reality." *International Quarterly*. Vol. 23, No. 3, Fall 2006.
- Han, Amanda. "Smart Grid." *Asia-Pacific Business & Technology Report*. September 22, 2009.
- Hugo, Graeme. "Labour Migration for Development: Best Practices in Asia and the Pacific." *ILO Asian Regional Programme on Governance of Labour Migration Working paper*. No. 17, March 2009.
- ILO.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2nd Session, 2004.
- Karki, Shankan S., Michael D. Mann and Hossein Salehfa. "Energy and Environment in the ASE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nergy Policy*. Vol. 33, No. 4, March 2005.

- Lavoy, Peter R. and Robin Walker.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A Track-Two Dialogue for Long-Term Cooperation." A report from the conference organized by the Center for Contemporary Conflict,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and the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New Delhi, April 25~26, 2007.
- Lee, Jae-Seung. "Energy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June 2010.
- Mathew, Thomas et al. "India-United States 2020: United States, Europe, Nuclear Cluster." *IDSIA Policy Brief*. New Delhi: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October 2010.
- Perkovich, George. "Toward Realistic U.S.-India Relations." *Carnegie Report*. October 2010.
- Sahoo, Pravakar., Durgesh Kumar Rai and Rajiv Kumar. "India-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orking Paper*. No. 242. New Delhi: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December 2009.
- Sisodia, Narendra and Tamal Bandyopadhyay. "Global Security Issues: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India." 2010.
- Kim, Changsu. "The Korea-Indian Partnership for the 21<sup>st</sup> Century: Visions for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presentations at *The 9<sup>th</sup> Korea-India Dialogue*, co-organized by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and the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held at Hotel Shilla, Seoul, Korea,

May 24~25, 2010.

Sohn, Injoo. “East Asia’s Counterweight Strategy: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Evolving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Paper presented at the G24 Technical Group Meeting, IMF/World Bank Annual Meeting, Singapore, September 13~14, 2006.

Swanstrom, Niklas. “An Asian Oil and Gas Union: Prospects and Problems.” *Th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3, No. 3, November 2005.

Wickramsasekara, Piyasiri. “Diasporas and Development: Perspectives on Definitions and Contributions.” *Perspective on Labour Migration*. No. 9. Geneva: ILO, 2009.

Yu, Hyun Seok. “Institutional Balancing and East Asian Regionalism: The Case of East Asian Summi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49<sup>th</sup> Annual Convention,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008.

佐橋 亮. “太平洋地域における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と三層分析法.” 『アジア太平洋の地域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ー—地域安全保障の重層的構造』. 東京財團 政策研究報告書, 2010.

Концепц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03~2015 годы - Астана, 2003.

Концепция переход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на 2007~2024 гг.- Астана, 2006.



### 3. 기타

『매일경제』.

『아시아일보』.

『아주경제』.

『연합뉴스』.

『주간조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LG주간경제』.

*ABC.*

*AFP.*

*Defense Industry Daily.*

*Peopledaily.*

*The Jakarta Post.*

*The Straits Times.*

Alford, Peter. “Kevin Rudd in search of a Seoul revival.” *The Australian*. November 9, 2009.

Clinton, Hilary. Address on the U.S. Vision for Asia-Pacific Multilateral Engagement to the East-West Center, January 12, 2010.

India Defence Consultants. “Indian Maritime Doctrine Revisited: An IDC Analysis.” New Delhi, April 10, 2005.

Krishna, S. M. speech at “IDSA-IPIS Strategic Dialogue on India and Iran: an enduring relationship.” New Delhi, July 5, 2010.

Ministry of Defence, Government of India. *Annual Report 2009~2010*.

Obama, Barack. Address in Suntory Hall in Tokyo, November 14, 2009.

PIB Press Release,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EX Indra-10: India-Russia Joint Exercise Culminates at Ranikhet.” October 23.

Rudd, Kevin. “It’s time to build an Asia-Pacific Community.” Address to the Asia Society, Austral Asia Center, Sydney, June 4, 2008.

\_\_\_\_\_. Address to the 8<sup>th</sup> IISS Asia Security Summit, May 29, 2009.

Acharya, Amitav. “Competing Asian Communities: What the Australian and Japanese Idea means for Asia’s Regional Architecture.” <<http://www.eastasiaforum.org/2009/10/29/competing-asian-communitie/>>.

Anderson, Kent. “Asia literacy: making a good policy better.” <<http://www.eastasiaforum.org/2008/08/27/asia-literacy-making-a-good-policy-better/>>.

Bower, Ernest Z. “ASEAN going for nuclear power.” <<http://www.eastasiaforum.org/2010/07/16/asean-going-for-nuclear-power/>>.

- Castle, Stephen. "Mi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July 2009. <[www.migrationinformation.org](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
- Gupta, Arvind. "Obama's visit to India: Is the glass of Indo-U.S. strategic partnership half full or half empty?" <[http://www.idsa.in/idsacomments/ObamasvisittoIndiaIstheglassofIndoUSstrategicpartnershiphalffullorhalfempty\\_agupta\\_251010](http://www.idsa.in/idsacomments/ObamasvisittoIndiaIstheglassofIndoUSstrategicpartnershiphalffullorhalfempty_agupta_251010)>.
- Gyngell, Allan. "Ambition: The Emerging Foreign Policy of the Rudd Government." <<http://www.lowyinstitutue.org>>.
- Hawke, Gary. "The Asia Pacific Community: objectives, not institutions." <<http://www.eastasiaforum.org/2009/06/15/the-asia-pacific-community-objectives-not-institutions/#more-4844>>.
- IEA Press Release. "The time has come to make the hard choices needed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nhance global energy security." <[http://www.iea.org/press/pressdetail.asp?PRESS\\_REL\\_ID=294](http://www.iea.org/press/pressdetail.asp?PRESS_REL_ID=294)>.
- ILO. "Labour migration in Asia." <<http://pstalker.com/ilo/h-flows.html>>.
- Lee, Kyung-Tae. "Where is the East Asian Community Going?" <<http://www.eastasiaforum.org/2010/03/21/where-is-the-east-asian-community-going/>>.
- Mohan, C. Raja and Ashley J. Tellis. "The Strategic Dimensions of U.S.-India Relations." <<http://carnegieendowment.org/events/?fa=eventDetail&id-3020>>.
- Narendra, Ch. "Indian Maritime Doctrine released." <<http://www.allvoices.com/contributed-news/4025698-indian-maritime-doctrine-released>>.

- Ozkan, Mehmet. “Tenets of Indian Foreign Policy and Indo-U.S. Partnership.” <[http://www.idsa.in/idsacomments/TenetsofIndianForeignPolicyandIndoUSPartnership\\_mozkan\\_220710](http://www.idsa.in/idsacomments/TenetsofIndianForeignPolicyandIndoUSPartnership_mozkan_220710)>.
- Richardson, Michael.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http://www.iseas.edu.sg/aseanstudiescentre/ascd/f2.htm>>.
- Rudd, Kevin. “Speech by Prime Minister Kevin Rudd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www.un.org/ga/63/generaldebate/pdf/australia\\_en.pdf](http://www.un.org/ga/63/generaldebate/pdf/australia_en.pdf)>.
- Tellis, Ashley J., C. Raja Mohan, Alyssa Ayres and Richard Ellings. “Power Realignment in Asia: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http://carnegieendowment.org/events/?fa=eventDetail&id=1501>>.
-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in brief Tourism and international students.” <[http://www.dfat.gov.au/aib/tourism\\_students.html](http://www.dfat.gov.au/aib/tourism_students.html)>.
- The Electricity Advisory Committee. “Smart Grid: Enabler of the New Energy Economy.” <<http://www.oe.energy.gov/DocumentsandMedia/final-smart-grid-report.pdf>>.
- UNWTO. *Tourism Highlights 2010 Edition*. Madrid: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0. <[http://www.unwto.org/facts/eng/pdf/highlights/UNWTO\\_Highlights10\\_en\\_HR.pdf](http://www.unwto.org/facts/eng/pdf/highlights/UNWTO_Highlights10_en_HR.pdf)>.
- Young, Soogil. “The Case for an East Asian Caucus on Global Governance: A Korean Perspective.” <<http://www.eastasiaforum.org/2009/04/12/the-case-for-an-east-asian-caucus-on-global-governance-a-korean-perspective>>.

<<http://aus-act.mofat.go.kr>>.  
<<http://college.chinese.cn>>.  
<<http://economy.hankooki.com>>.  
<<http://iqtisod.zn.uz>>.  
<<http://meaindia.nic.in>>.  
<<http://news.mk.co.kr>>.  
<<http://news.mofat.go.kr/>>.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  
<<http://stats.uis.unesco.org/>>.  
<<http://uzb.mofat.go.kr/>>.  
<<http://www.asean.org>>.  
<<http://www.aseansec.org>>.  
<<http://www.asiae.co.kr>>.  
<<http://www.ato.gov.au>>.  
<<http://www.cis.or.kr>>.  
<<http://www.climatechange.gov.au>>.  
<<http://www.dfat.gov.au>>.  
<<http://www.eurasianet.org>>.  
<<http://www.immigration.go.kr>>.  
<<http://www.jpf.go.jp>>.  
<<http://www.koreaexim.go.kr>>.  
<<http://www.mnd.go.kr>>.  
<<http://www.president.go.kr>>.  
<<http://www.ret.gov.au>>.

<<http://www.seoul.co.kr>>.

<<http://www.theage.com.au>>.

<<http://www.theaustralian.com.au>>.

<[http://www.tour.go.kr/stat/st\\_wsum\\_viw.asp](http://www.tour.go.kr/stat/st_wsum_viw.asp)>.

<<http://www.unescap.org>>.

<<http://www.dni.gov>>.

<<http://www.index.go.kr>>.

<<http://www.warmemo.or.kr>>.

<<http://www.posco-india.com>>.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은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 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 I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 <sup>st</sup>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 <sup>st</sup>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 <sup>st</sup>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 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 I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한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 II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I ):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 IV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V ):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 Studies Series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기 타

##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www.kinu.or.kr](http://www.kinu.or.kr)

